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 변경

2023.1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 변경**

**2023. 1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차 례

I . 건설기본계획의 개요 .....	1
1. 계획의 개요 .....	3
2. 계획의 범위 .....	5
3. 계획의 수립체계 .....	7
4. 도시건설 추진배경 .....	9
5. 도시건설 추진경위 .....	11
6. 계획 변경의 배경 및 목적 .....	20
II . 도시건설 현황 및 여건변화 .....	21
1. 주요 관련 계획 검토 .....	23
2. 지역 여건 분석 .....	27
3. 도시건설 현황 분석 .....	35
4. 도시건설 여건변화 분석 및 이슈종합 .....	39
5. 종합분석 .....	42
III . 도시건설의 기본방향 .....	45
1. 도시건설의 정책목표 .....	47
2. 도시건설의 이념 .....	48
3. 도시건설의 기본방향 .....	49
IV . 도시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 .....	51
1. 도시기능 설정 및 인구구상 .....	53
2. 활력있는 도시구조 .....	57
3. 생활권 계획 .....	63
4. 토지이용의 기본방향 .....	67
5. 도시건설지표 .....	70

## 차 례

V. 부문별 도시 개발방향 .....	73
1. 쾌적하고 살기 좋은 토지이용계획 .....	75
2. 시민친화적이며 효율적인 공공청사 배치 .....	85
3. 국가관리기능과 시민이 소통하는 특별관리구역 조성 ..	90
4. 편리하고 인간중심적인 교통체계 .....	92
5. 환경친화적인 탄소중립도시 .....	101
6. 미래지향적인 스마트시티 계획 .....	106
7. 교육·문화·복지 인프라 구축 .....	108
8. 경제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시설 조성 .....	117
9. 안전한 도시를 위한 방호 및 방재계획 .....	122
VI. 사업추진방안 .....	127
1. 사업추진체계 .....	129
2. 단계적 개발방안 .....	134
3. 건설비용 및 재원조달방안 .....	136
4. 주민지원 대책 및 상생도시 실현 방안 .....	138
VII. 개발계획의 수립방향 .....	141
1. 개발계획 수립지침의 작성 .....	143
2. 부문별 개발계획 수립방향 .....	145

# I

## 건설기본계획의 개요

1. 계획의 개요
2. 계획의 범위
3. 계획의 수립체계
4. 도시건설 추진배경
5. 도시건설 추진경위
6. 계획 변경의 배경 및 목적



## 1. 계획의 개요

### 1) 계획의 의의

- ☐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기본방향을 제시
- ☐ 미래지향적인 도시 모델을 제시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발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도시개발의 지침을 마련
-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정에서 여러 계획 간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의 기본원칙을 수립
- ☐ 건설 단계별 성과평가와 국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품격 높은 세계적 도시건설의 모범을 제시

### 2) 법적 근거

-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이라 한다) 제19조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건설청장」)이 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

### 3) 계획의 특성과 위상

- ☐ 「행복도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법정계획
-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
- ☐ 향후 수립될 개발계획·실시계획 등의 준거가 되는 지침계획

#### 4) 계획의 주요 내용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은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도시건설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이 중요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전체적인 사업범위 및 추진일정과 도시건설의 기본이념을 제시
  - 도시개발의 부문별 기본원칙 및 추진방향, 실질적 행정수도, 탄소중립도시, 인간중심도시, 문화·스마트도시의 기본방향 제시
  -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추진체계를 정립하고 단계적 개발방안 및 재원조달방안, 보상 및 주민지원대책 등을 수립
  -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단계별 평가를 반영하여 계획을 수정하고 부문별 개발계획 수립원칙 등 하위계획 수립방향을 제시
- 「행복도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설사업의 기본원칙과 방향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포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개요, 인구배치 및 토지이용의 기본구상,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 등의 배치방향, 도시교통 및 경관·환경보전의 기본방향, 교육·문화·복지시설 설치의 기본방향, 도로·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의 기본방향, 재원조달방안, 개발계획 수립의 지침(「행복도시법」 제19조)
  - 도시문화 조성의 기본방향, 도시정보화의 기본방향, 문화재 보호의 기본방향, 도시방호 및 방재의 기본방향(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2. 계획의 범위

### 1) 시간적 범위 및 목표인구

- ☐ 「행복도시법」이 제정된 '05년을 기준으로, 도시가 자족기능을 갖추고 성숙단계에 이르는 '30년을 목표연도로 계획을 수립
- ☐ 단계적으로 인구유입 방안을 마련하되, 도시가 성숙되어 개발이 완료되는 '30년에 예정지역 인구 50만 인을 목표로 계획 수립
  - ※ 수도권 인구분산효과, 이전기능 수용, 자족기능 확보, 충청권내 도시 체계와 조화 등을 고려하여 적정 인구규모를 50만 인으로 설정

### 2) 공간적 범위

-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공간적 범위는 「행복도시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정해진 지역
- ☐ 건설기본계획은 개발계획 수립 대상인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의 개발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제시
  - \* 「행복도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 및 제15조에 따라 예정 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특별관리구역 등 포함(약 73.01km<sup>2</sup>)
- ☐ 예정지역과 세종특별자치시\*, 인근 지자체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
  - \* 「행복도시법」 제15조에 따라 '09년 해제된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포함

《 공간적 범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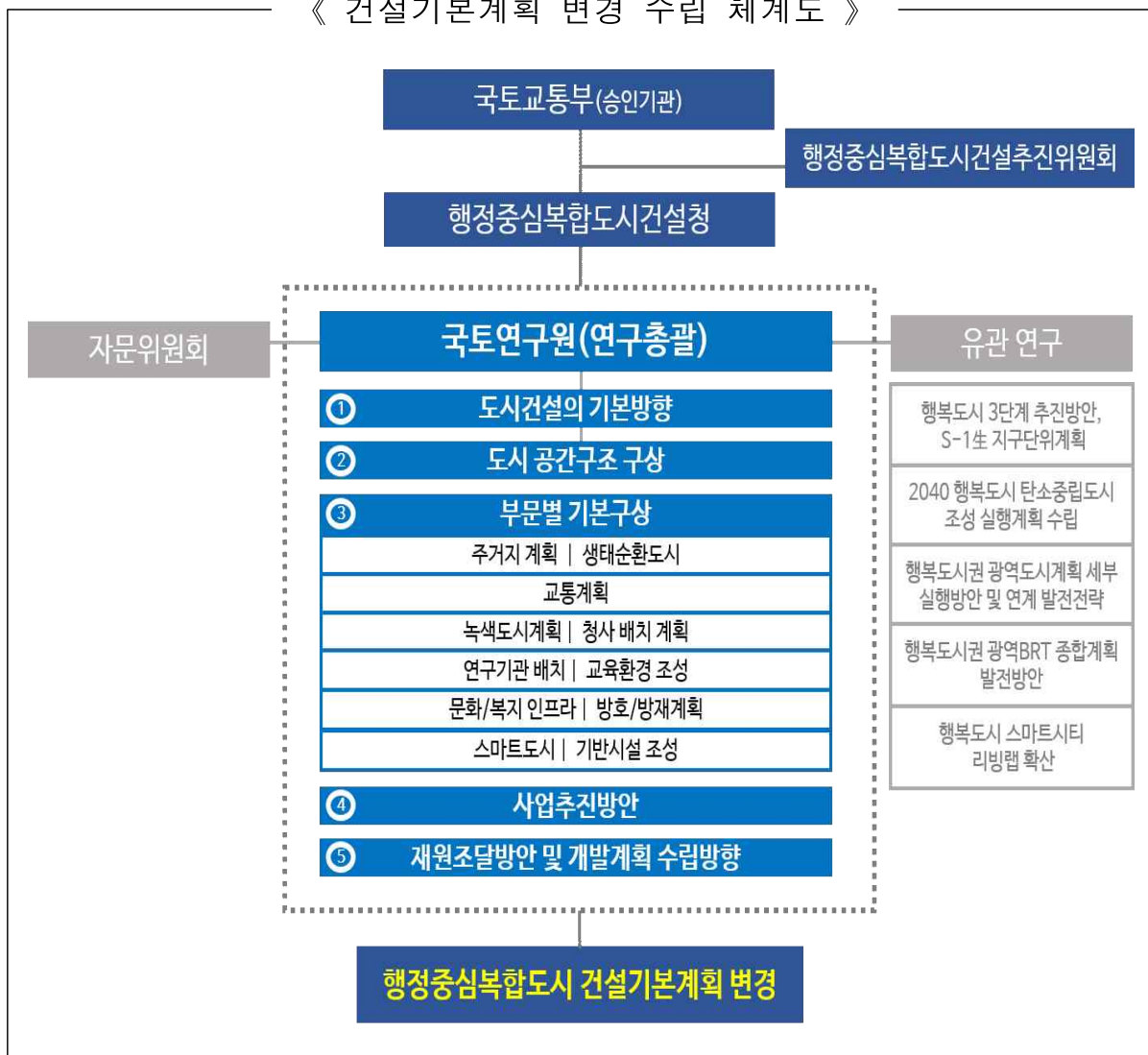




### 3. 계획의 수립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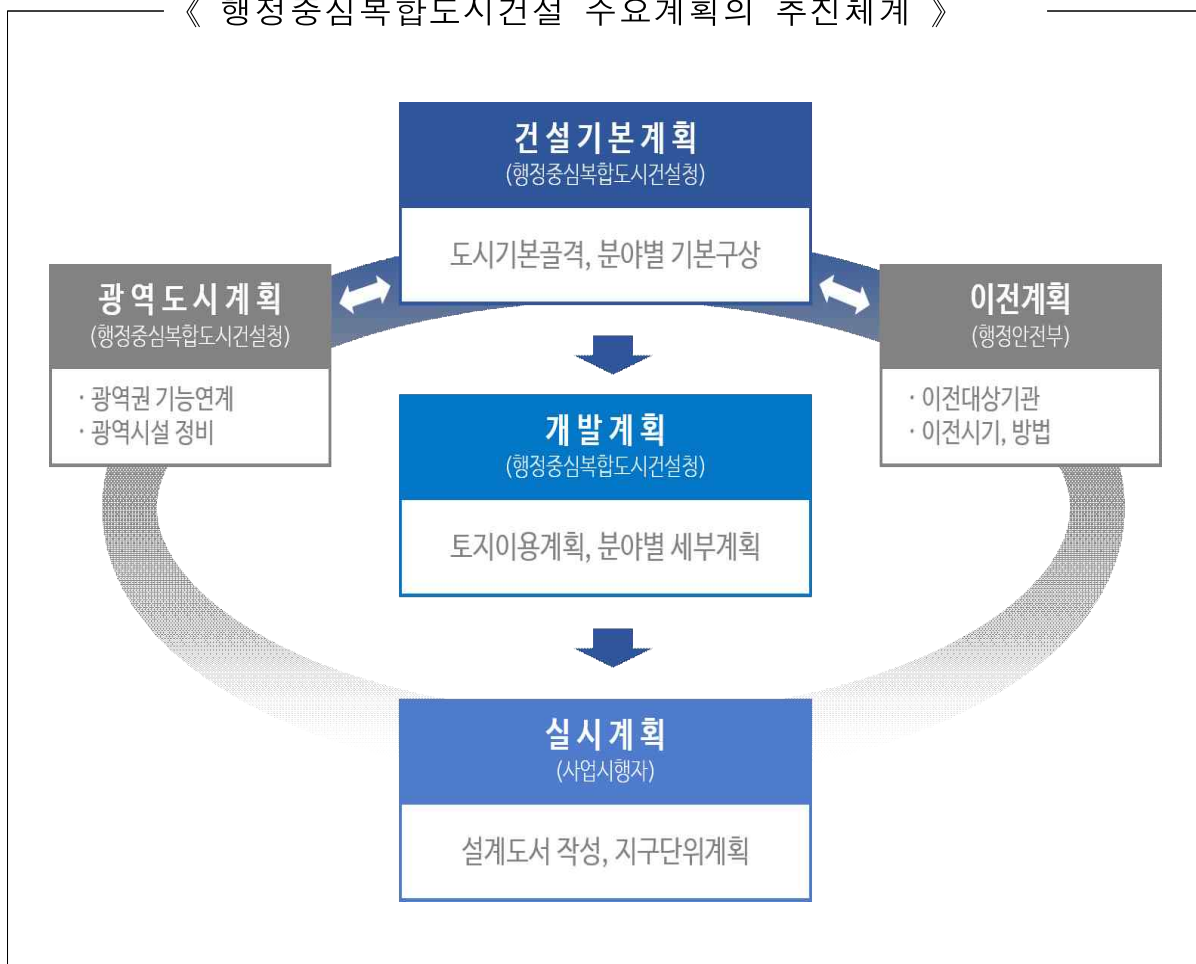
- 최초 건설기본계획 수립을 총괄한 국토연구원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여 의견수렴을 진행
  - 주요 연구내용은 국가정책 변화 검토, 부문별 계획 변경, 재원 마련 및 향후 사업추진 방안 등 3개 부문으로 진행
  - 최초 건설기본계획 수립 이후 변화한 국가정책 등 다양한 여건 변화와 관련 연구를 검토하고 기본구상 및 부문별 계획을 수정

《 건설기본계획 변경 수립 체계도 》



- 계획간 연계 및 체계적인 연구수행을 위해 국토연구원 및 관련 기관, 사업시행자 등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연구 추진
  - 여건 변화 및 기존계획을 검토하여 건설기본계획을 수정하고 하위계획의 지침을 마련하여 수정·반영하도록 함
  - 관련 계획이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기관 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계획 간의 혼선을 방지하고 계획의 연계 및 정합성 유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주요계획의 추진체계 》



## 4. 도시건설 추진배경

### 1) 과거의 국가발전전략과 한계

- 과거에는 국가주도형 불균형 발전모델을 채택하여 압축성장 추구
  - 특정 산업 및 지역에 인적·물적 자원을 집중 투입하고 육성하여 국민소득 82불(1960년)에서 16천 불(2005년)까지 도약
-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간 격차 심화는 국가발전 걸림돌로 작용
  - 지역내총생산(GRDP) 수도권-비수도권의 비중 차이는 1985년 비수도권이 16%p 컸으나, 2021년 수도권이 6.2%p 커진 바와 같이 여전히 수도권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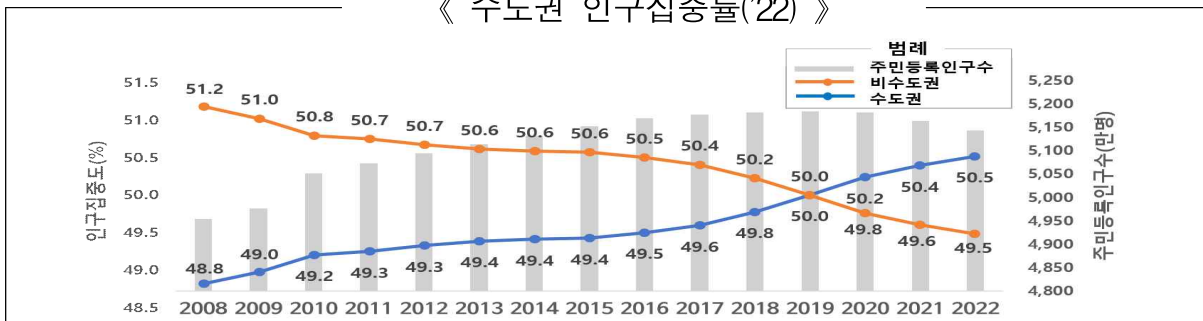
《 수도권 비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 변화 》

년 도	1985	1995	2005	2010	2015	2020	2021
수 도 권 (%)	42.0	45.7	48.4	49.1	50.1	52.8	53.1
비수도권 (%)	58.0	54.3	51.6	50.9	49.9	47.2	46.9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

- 인구와 기능의 수도권 집중으로 교통혼잡, 환경오염, 주택보급률 저하 등 사회적 비용 증가와 주민의 삶의 질 저하 우려 고조

《 수도권 인구집중률('22) 》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 2022

- 수도권 집중 완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행복도시 건설로 국가 균형발전 선도 역할 지속적 강화 필요

\*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직간접 인구유입 74,685명 예측

(자료: 건설교통부, 2006,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성 확보방안, p.55.)

\*\* '22년 현재 수도권 순유입 63,501명

## 2) 21세기 국가발전전략의 개편

### 적극적인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국가중추기능 이전을 통한 국가발전거점 조성

-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민통합과 제2의 국가도약 계기 마련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조성, 지방자치 및 분권 강화 등 지방의 내재적 발전역량을 강화
  - 수도권은 계획적 관리, 동북아경제 중심국가 건설, 기술혁신·혁신클러스터 육성 등 세계화 전략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방분권 등을 통합패키지로 추진하여 정책의 효율성 제고
  -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균형발전을 위한 상징적 시범도시로 건설하여 국가 재도약 달성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
-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방안을 마련하여 새로운 지방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모델 마련
  - 수도권은 경제·금융 등의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도시로 육성
  - 지방은 문화, 관광, 첨단 제조업 등 지역별 전략기능을 육성하여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발전의 거점 역할 담당

## 5. 도시건설 추진경위

### 1) 신 행정수도 건설사업을 위한 준비작업('03.4.~'04.4.)

- ☐ 수도권 과밀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사업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추진 결정
- ☐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앞서 사업추진의 기본방향 설정 및 입지선정을 위한 현지조사 등 각종 준비 작업을 수행
  - 준비 작업을 전담할 조직으로서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대통령 소속) 및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건교부 소속)을 설치('03.4.14.)
  - 국토연구원 등 14개 전문연구기관으로 '신 행정수도연구단'을 구성하여 '도시기본구상'을 연구하고 '입지선정기준(안)' 등을 마련
    - 각계 전문가의 폭넓은 참여와 다양한 의견을 도시건설에 반영하기 위해 분야별 37개 연구 과제를 별도 선정하여 집중 연구
  - 한국토지공사 등으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입지 가능 대상권역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지자체의 검증을 실시
  - 공개세미나(3회) 및 전국 순회공청회(7개 지역) 등을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국민여론을 수렴
- ☐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여야 합의로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법」)을 제정('04.1.16.)하여 법률적 근거 마련

## 2)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의 본격적인 추진('04.5~'04.10)

- 대통령 소속의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출범('04.5.21.)하여 본격적으로 건설사업을 총괄·추진
- 신행정수도로 이전할 국가기관 및 이전시기 등에 대한 '주요 국가기관(행정부) 이전계획'을 수립('04.8.10.)
  - 행정부 소속의 73개 단위행정기관을 대상으로 '12년부터 3개년에 걸쳐 이전하는 내용의 이전계획을 마련
  - 입법·사법부 등 헌법기관은 각 기관이 이전 여부를 자체 결정하고 국회에 동의안 제출을 요청할 때까지 계획 수립을 유보
- 건설이념, 도시개발 방향, 효율적인 사업추진방안 등 신행정수도 건설의 기본원칙 및 방향을 제시하는 '건설기본계획'을 수립('04.8.10.)
  - 신행정수도는 상생과 도약의 이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래지향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로 조성
    - ※ 도시성격 : 정치·행정도시, 친환경도시, 인간존중도시, 문화·정보도시
  - 도시규모는 인구 50만인, 개발면적 6,600~8,300만㎡인 쾌적한 중저밀도의 신도시로 '30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
  - 건설비용은 총 45조 6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정부는 광역교통시설, 공공시설 건설 등에 11조 3천억 원을 투입
  - 공원·녹지는 기존 신도시보다 높은 수준으로 확보하고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환경친화적 도시로 조성
  - 전국 주요 도시에서 2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보행자와 대중교통 위주로 도시교통체계를 구축

-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후보지역을 평가하고 국민여론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연기·공주지역을 입지로 확정('04.8.11.)
  - 현지조사 및 균형발전성·개발가능성·보전 필요성을 종합·분석하여 평가지원단(국토연구원 등)에서 4개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
    - ※ 후보지 : ①진천·음성, ②천안, ③연기·공주, ④공주·논산지역
  -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지선정을 위해 각 시·도 및 관련 학회가 추천한 분야별 전문가들로 '후보지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
    - ※ 국가균형 발전효과, 국내외 접근성,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자연조건, 도시개발비용 및 경제성 등의 평가항목을 적용하여 평가
  -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및 전국공청회(13개 지역),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연기·공주지역을 신행정수도 입지로 확정
- 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04.10.21.)으로 법의 효력이 정지되고 신행정수도 건설사업도 중단
  -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이 진행되던 과정에서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이 제기('04.7.12.)
    - ※ 청구인들은 국민투표권·재산권·청문권·공무담임권·평등원칙·직업선택 및 거주이전의 자유·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를 주장
  - 헌법재판소는 수도가 서울인 점은 관습헌법에 해당하여 수도이전은 헌법 개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논지로 특별법을 위헌 결정
    - 위헌결정에 따라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은 추진이 중단되고 특별법 및 이전계획, 건설기본계획 등도 효력을 상실

### 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마련('04.11.~'05.3.)

- 위헌결정으로 신행정수도 건설과 연계한 균형발전사업의 차질 및 지역주민들의 손실 우려 등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후속대책을 마련
- 후속대책의 신속한 마련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위원회'를 설치('04.11.18.)
  - 본위원회 및 소위원회 심의를 통해 '후속대안 마련 기본원칙'과 '후속대안 선정 기본원칙'을 마련하여 발표
  - 국민여론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후속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3단계에 걸친 단계적 대안 수립절차를 마련
    - ※ ①여론수렴 및 공론화 과정 → ②대안 압축 과정 → ③대안 결정 과정
- 다양한 국민여론의 수렴과 민간 전문가그룹의 적극적 대안 제시 기회를 마련하여 국민의 참여와 선택으로 후속대책을 수립
  - 정치권, 학술단체, NGO, 사회원로,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과 총 65회의 토론회·간담회를 실시하여 여론을 수렴하고 대안을 검토
  - 공론화 과정에서 제시된 11개 대안을 대안선정원칙에 따라 검토·평가하여 3개 유력 대안으로 압축하고 국회 특위에 제출
    - ※ 3개 대안 : ①행정특별시안, ②행정중심도시안, ③교육과학도시안
- 국회는 '신행정수도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04.12.23.)하고 후속 대안 확정 및 특별법 입법을 추진
  - 7차에 걸친 본위원회와 소위원회 활동 및 국회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쳐 이전기관·예산지출 상한 등 특별법의 주요내용을 결정
- 국회 여·야 합의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공포('05.3.18.)



#### 4)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준비('05.4.~'07.7.)

- ☐ 「행복도시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를 구성('05.4.7.)하고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위원회 산하에 추진단을 설치
- ☐ 충남 연기·공주 및 충북 청원지역에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지정·고시하고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공사를 지정('05.5.24.)
- ☐ 본격적인 도시건설계획 수립을 위해 건설기본계획('05.5.26.), 개발계획('05.8.22.), 실시계획('05.9.30.) 수립 연구 등 차례로 착수
  - 각종 계획 수립 간의 연계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 참여 기관을 총괄하는 ‘공동연구단’을 구성('05.9.30.)
- ☐ 12부 4처 2청 등 총 49개 단위기관을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을 확정·고시('05.10.5.)
- ☐ 예정지역 토지·건물 등 보상을 위한 물건조사('05.6.~8.)를 실시하고 11월까지 감정평가를 완료한 후 보상에 착수('05.12.20.)
- ☐ 도시개념 국제공모를 실시('05.5.27.)하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05.11.11.~14.) 당선작 5개 작품을 발표('05.11.15.)
- ☐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추진단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건설교통부 소속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개청('06.1.1.)
- ☐ 행정중심복합도시 부지조성공사 착공('07.07.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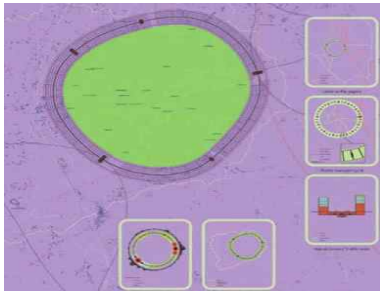
## 5) 도시개념 국제공모의 시행

- 행정중심복합도시를 21세기의 세계적인 모범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공모 실시
  - 국제공모를 통해 도시이미지, 도시공간구조 등 도시개념에 대한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집
- 건설기본계획 수립 등 전체일정을 감안하여 예정지역 지정에 이어 공모를 공고('05.5.27.)하고, 11월까지 당선작을 결정토록 추진
  - 추진위원회에 국제현상공모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전문위원 (PA : Professional Adviser)을 선임하여 공모시행을 주관·감독
- 세계 26개국에서 제출된 121개 작품(국내 57개, 국외 64개)에 대해 국내외 저명한 도시계획가와 건축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5개 작품(국내 2개, 국외 3개)이 당선되었으며, 5개 작품(국내 1개, 국외 4개)을 장려상으로 선정('05.11.15.)

### 《심사위원장(David Harvey)의 심사평》

-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단순한 신도시를 뛰어넘어 한국의 발전전략에 부합하고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도시건설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당선작을 선정
- 중앙행정기능의 이전뿐만 아니라 여타 기능의 수용을 위한 개방성을 강조하고 도시의 정체성·이미지의 규정을 중시
- 각종 도시기반시설을 통합하고 이를 개발 유도수단으로 제안하였으며, 교통·경관·에너지·친수공간 등 환경적 이슈를 적극 감안
- 도시민의 일상적인 생활의 질에 대한 성찰을 강조하였으며 민주사회에서의 시민의식에 대한 문제를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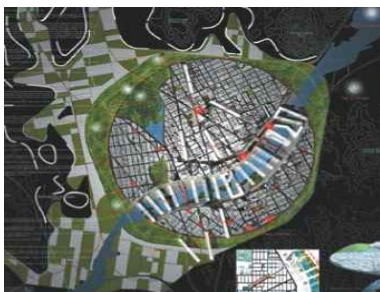
## 《 도시개념 국제공모 당선작 》

**뒤리그(스위스) : 'The Orbital Ro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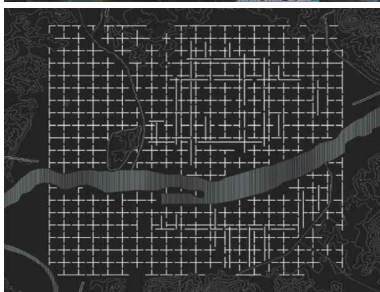
- 장남평야 · 대평뜰을 그대로 존치한 환상형(Ring) 도시구조
- 대중교통지향적이고 도시기능의 효율성을 극대화
- 도시기능을 5개의 거점으로 분산 배치

**페레아(스페인) : 'The City of Thousand Cities'**

- 예정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환상형 도시구조
- 다각적인 기술적 검토에 기반하여 개발과 보전이라는 명제를 명쾌하게 해석
- 사회적 특권과 차별이 없는 민주적 도시구조
- 도시의 기능이 분산된 위계없는 도시

**송복섭(한국) : 'Thirty Bridges City'**

- 고밀도의 도시를 지향하여 원형의 중심부를 집중 개발하고 그 외곽은 자연 상태를 유지
- 30개의 다리위에 정부청사 및 공공시설 등을 배치

**아우렐리(이태리) : 'A Grammar for the City'**

- 도시를 구성하는 방식과 절차를 제시
- 기존 신도시의 도로에 의한 도시구조 결정 방식을 탈피하여 구체적 용도를 정하지 않은 기하학적 벽체에 의해 도시골격을 형성

**김영준(한국) : 'Dichotomous City'**

- 도시건설 과정에 대한 논의에 초점
- 실질적인 도시 마스터플랜보다는 정보들을 나열하고 도시와 자연의 조화 등 이질적인 현상들을 중첩
- 도시개념을 구체적으로 조직해내는 원칙으로 활용가능

**※ 장려상 5개 작품**

- 위르겐 쿤츠만(독일) 'City in Flow', 토마스 푸셔(오스트리아) 'Yeon Meong', 최현규(한국) '비보(裨補)', 스미야 마모루(일본) 'Archipelagic City', 크리스티안 운두라가(칠레) 'Nurturing a New Urbanity'

## 6) 최초 건설기본계획 수립 과정

- 각계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위해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및 워크숍, T/F회의 등을 개최('05.7.~'06.3.)
  - 기본구상 및 12개 전략연구과제는 분야별 자문회의를 통해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 건설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연구과제 및 장사시설, 생활권 및 기본구상 등 15개 주제를 선정하여 공개세미나를 개최('06.1.~3.)
  - 분야별 전문가뿐만 아니라 학계, 시민단체, 일반인들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 및 아이디어를 수렴
- 건설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동연구단 등이 함께 전담 T/F를 구성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안)을 작성('06.2.~4.)
  - 도시 기본구상을 토대로 12개 전략연구과제 연구결과 및 자문, 공개세미나를 통해 수렴한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여 마련
- 건설기본계획(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여(4회)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06.5.)
  -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사전조정 과정('06.5.~6.)과 다양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위원회 심의('06.7.)
- 건설교통부장관은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06.7.)

## 7)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단계별 추진경과

- 도시건설 1단계('07~'15)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기공식('07.7.20.), 정부세종청사 1단계 1구역 착공('08.12.22.) 및 첫마을 착공('09.3.31.)
- 도시건설 2단계('16~'20)에서는 도시의 자족성 확보에 주력하여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 세종테크밸리, 공동캠퍼스사업 등 추진
- 도시건설 3단계('21~'30)에서는 국가중추시설(대통령제2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등)를 완료하여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도시완성 추진

《 도시건설 추진단계별 주요 사업일정 요약 》

추진 단계	주요 사업일정
1단계 초기 활력 단계 (2007~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첫마을 입주 시작('11.12.)</li> <li>· 세종특별자치시 출범('12.7.1.)</li> <li>· 정부세종청사 1단계 이전 완료('12.11.)</li> <li>· 세종호수공원 개장('13.5.)</li> <li>· 정부세종청사 2단계('13.12.) 및 3단계('14.12.) 이전 완료</li> <li>· 대통령기록관 완공('15.5.)</li> </ul>
2단계 자족적 성숙 단계 (2016~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1생활권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선정('18.1.)</li> <li>· 세종테크밸리 조성 및 공동캠퍼스사업 추진('18.4.)</li> <li>· 정부세종청사 건립 추진('18.6.)</li> <li>· 행복도시 주변 지역과의 상생발전 추진('19.3.)</li> <li>· 광역BRT 노선 계획('20.3.)</li> <li>· 세종중앙공원 1단계 개장('20.11.)</li> <li>· 2040년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수립('20.12.)</li> </ul>
3단계 완성 단계 (2021~2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정지역 변경(72.9km<sup>2</sup>→73.01km<sup>2</sup>)('21.1.)</li> <li>· 1·2·3 생활권 11개동 예정지역 해제('21.1.)</li> <li>· 특별관리구역 지정('21.3.)</li> <li>·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21.10.)</li> <li>· 세종 이음다리 개통('22.3.)</li> <li>·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집무실(제2집무실) 설치를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22.6.)</li> </ul>

## 6. 계획 변경의 배경 및 목적

### 1) 계획 변경의 배경

- ☐ 2006년 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법제도, 정책 변화 등 국내외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한 계획의 검토와 조정 필요
    - 「행복도시법」, 「스마트도시법」 개정 등의 법제도 변화 사항 반영
    - 특별관리구역 지정,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세종 의사당 등 당초 계획에 없던 정책 변화에 따른 도시공간구조의 영향 반영
    - 제5차 국토종합계획, 2040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등 상위계획의 변경과 주변 지역의 여건 변화\* 검토 필요
- \* 청주-청원 통합, 오송 생명과학단지 지정, 관련계획 수립 등(예 : 세종도시 기본계획,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등)

### 2) 계획변경의 목적

- ☐ 제4차 산업혁명, 탄소중립도시, 디지털 전환, 스마트도시 등 국내외 패러다임 변화, 국가정책 등을 건설기본계획에 반영
- ☐ 기존 개발방향과 현재 개발현황 등 종합 비교분석을 통한 계획 지표 변경(안) 및 부문별 도시개발 방향 변경(안)을 제시
- ☐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세종 의사당 등 국가중추시설의 설치에 따른 도시공간구조 및 생활권별 기능 재검토
- ☐ 도시건설 3단계 진입에 따라 건설 이후 운영단계를 포함한 주변 지역과의 조화와 상생을 계획에 반영하여 도시기능을 강화
- ☐ 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재원조달방안 및 사업추진방안을 구체화하고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변경(안) 제시

## II

# 도시건설 현황 및 여건변화

---

1. 주요 관련 계획 검토
2. 지역 여건 분석
3. 도시건설 현황 분석
4. 도시건설 여건변화 분석 및 이슈종합
5. 종합분석





## 1. 주요 관련 계획 검토

### 1)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 국토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고, 자율·협력·자립 기반의 분권형 스마트국토 실현
  - 세종시·혁신도시·지방 대도시 등 균형발전거점 도시를 통해 지역 내에서 더 나은 삶의 질과 경제적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다중심 국토 공간 조성



자료: 국토교통부, 2020.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p.34.

- 세종시, 혁신도시 등에 산·학·연 협력플랫폼의 구심점이 형성 될 수 있도록 혁신공간을 조성하고 이전 공공기관과 협력 유도
- 충청권 광역철도, 고속도로(서울~세종, 세종~청주) 건설 및 세종시 인접도시(공주, 조치원) BRT 연결 등 주요교통축 중심 광역철도 서비스 확대 및 대중교통 연계 강화

## 2)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 철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전국 주요거점의 고속 연결, 이용하기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조성을 추진
- 비수도권 광역철도를 대폭 확충하고,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의 新성장동력 확보
- 지방 광역경제권 내 거점을 연결하는 신규 광역철도를 건설하여 지방도시의 경쟁력과 지역주민 이동 편의를 제고
  - ‘대전~세종(행복도시)~충북 광역철도’는 ‘반석~조치원~청주 공항’을 연결하는 복선전철로 신규 건설 추진
  - \*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신탄진~조치원) 및 3단계(강경~계룡)는 기존선을 이용하여 복선전철 추진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1)》



자료: 국토교통부, 2021.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 3) 관련 도시계획

#### □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2040)

- ‘국토의 새로운 중심, 함께하는 행복도시권’을 계획 비전으로 설정
  -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新국토중추, 국제경쟁력을 가진 新광역 생활경제권, 함께하는 상생·협력 新광역도시권’을 계획목표로 설정
- 광역 중심도시를 스마트 신산업 혁신생태계 거점으로 조성하고, 공간구조상 발전축과 연계한 사업기능 보완
  - 산업기능 보완을 통해 광역 중심도시-광역 기초도시 간 연대 협력

《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내용 중 세종생활권 기능 배분 》

구분	목표	기능	도시별 기능	
세종 생활권	행정수도 완성	국가행정 국제교류 역사·문화	중심도시	세종 : 국가행정중심도시
			기초도시	공주 : 세계적 역사문화 관광도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에 영향이 있는 사업에 대해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의 협의·조정 역할
  - 광역도시계획을 집행관리 할 수 있는 거버넌스 기구 설치 및 주관
  - 광역도시계획의 집행과 관련하여 설치되는 광역도시계획 협의 기구에 참여하여 행정·재정 측면의 협의 관리 등을 지원
  - 광역도시계획과의 부합성을 토대로 도시기본계획 등 시·군별 종합계획 및 부문별 계획과 개발계획 등 개별 사업계획 협의
  - 시·군간 연계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 성공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간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체계적 사업추진 지원

□ 세종도시기본계획(안)(2040)

-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실현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실현하고 세종시의 도시 정체성 확립과 위상 제고를 도모
- 행복도시를 도심, 조치원읍을 부도심으로 설정하고 부도심 기능 강화로 도심-부도심 역할 재편 및 유기적 연계를 통한 균형발전 기반 마련

□ 대전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2030)

- 세종시 배후 지원도시 기능, 세계적 수준의 과학도시, 중부권 수위도시, 메갈로폴리스 형성 등 미래지향적 목표 달성 추진
- 세종시 건설 및 활성화에 따라 대전시와의 상생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대전시 역할과 광역적 협력 방안 마련

□ 청주도시기본계획(안)(2040)

-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시의 정체성 확보와 균형발전, 산업·경제·일자리, 여가·문화 측면에서 전략 목표와 기본방향을 설정
- 청주시~세종시~대전시 광역권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청주시 중심의 광역적 생활권 구축 및 청주시 내의 균형적 공간조성 모색

《 계획간 위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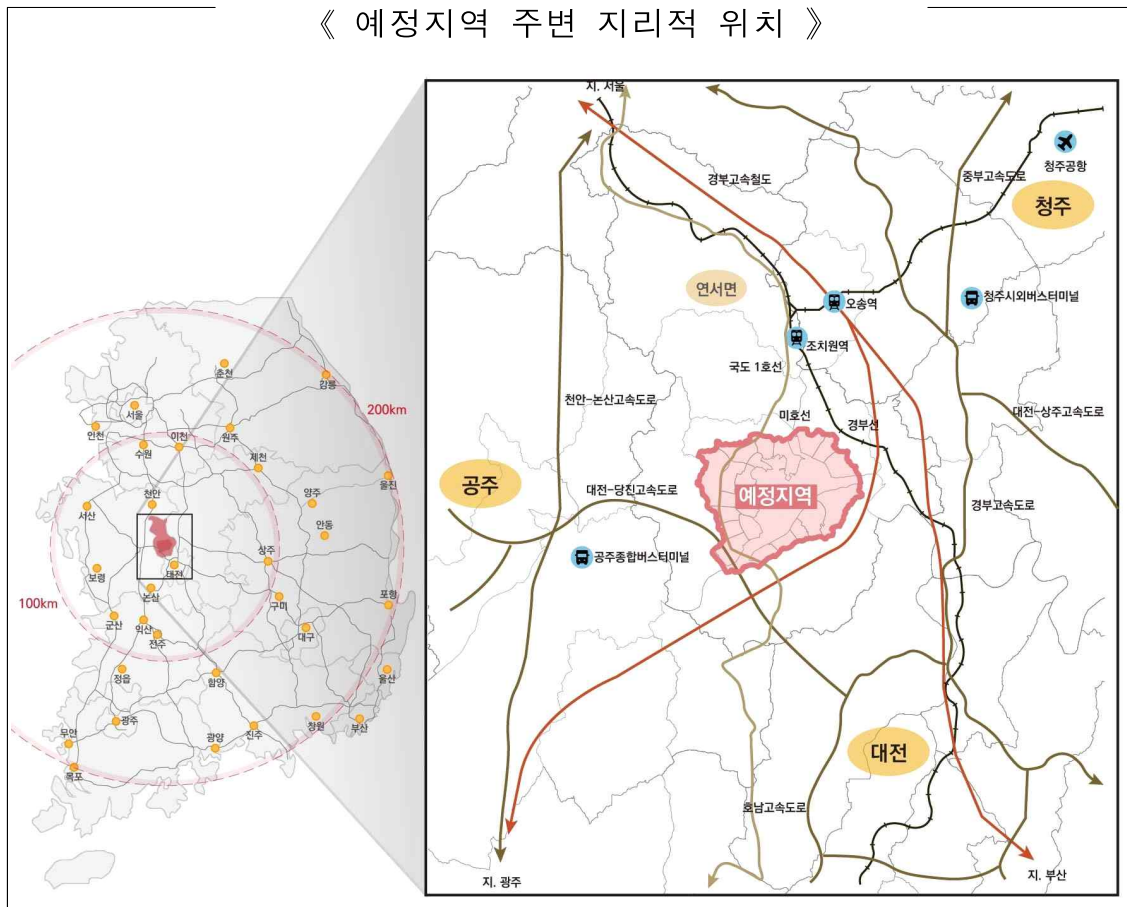
-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기본계획·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의한 계획(국토종합계획 및 군사에 관한 계획은 제외)에 우선(행복도시법 제7조)
-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면 이미 수립되어 있는 여타 광역 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우선(행복도시법 제17조)

## 2. 지역 여건 분석

### 1) 지리적 여건

- 예정지역은 행정구역상 세종특별자치시 23개 법정동('22.7. 기준) 일원으로 서울에서 150km 정도 이격
  - 예정지역은 금강을 기준으로 남북이 분리되었고 금강의 북측이 남측에 비해 넓은 지리적 형태를 보이며, 면적은 약 73.01km<sup>2</sup>
- 예정지역의 동측으로는 청주시, 남측으로는 대전시, 서측으로는 공주시, 북측으로는 천안시 인접

《 예정지역 주변 지리적 위치 》





## 2) 자연적·물리적 여건

### □ 자연환경

- 대체로 완만한 북고남저형의 구릉지로서 북측은 금북정맥의 지류인 국사봉(214m)과 접하고 남측은 금강유역의 평야지대에 입지
  - 예정지역 중심에 원수산(254m)과 전월산(260m)이 위치하고 금강 남측으로 괴화산(200m)이 위치
  - 금강과 미호강이 합류하여 예정지역 내를 관통하고 금강 양쪽으로 장남평야와 대평뜰이 평야지대를 형성
- 봄·여름은 남서풍, 가을·겨울에는 북서풍이 주된 풍향이며 평균 기온은 12.3℃(2010~2019년 평균), 연간 강수량은 1,210mm(2005~2019. 평균) 수준

《 예정지역 전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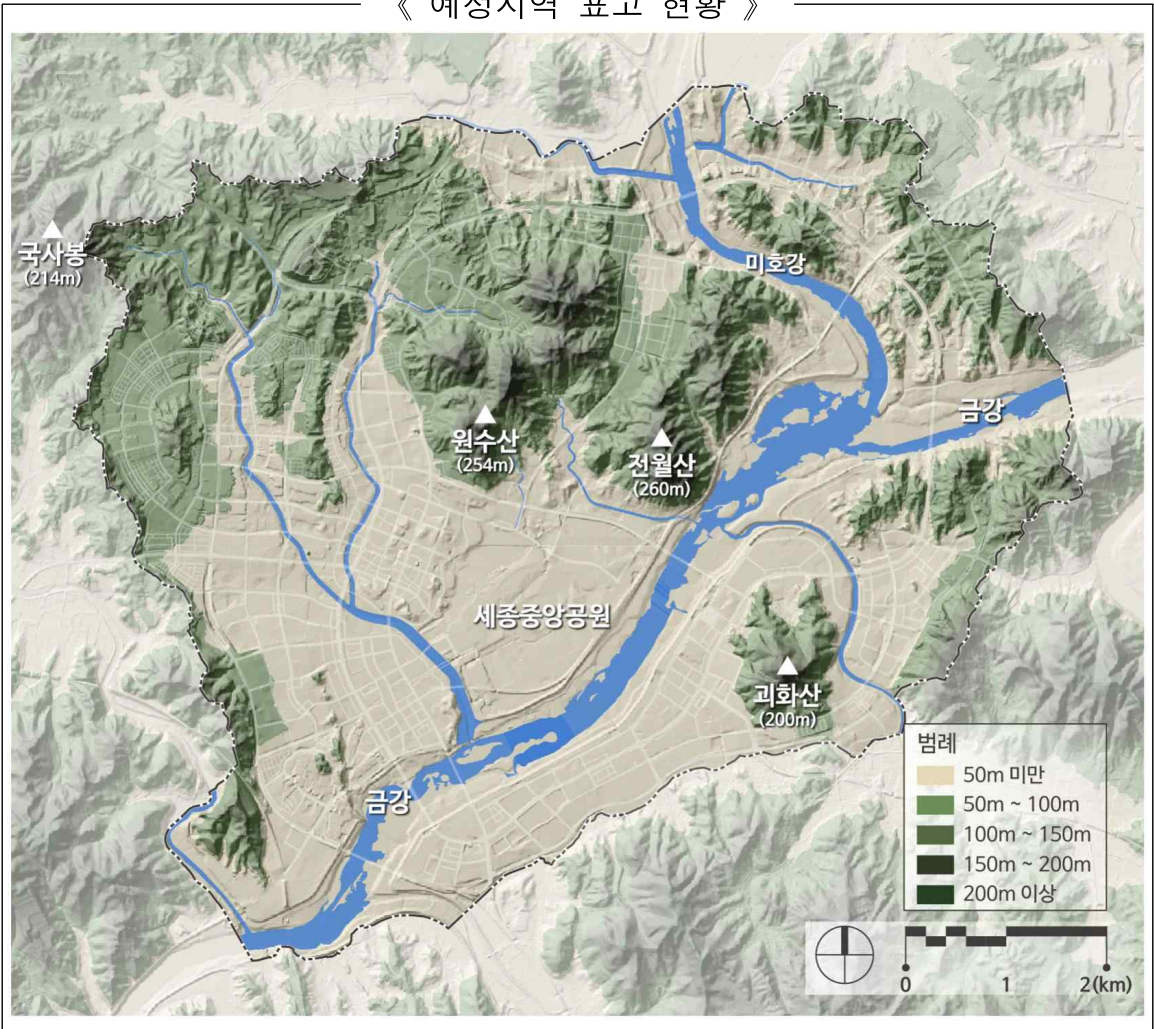
- 예정지역은 대부분이 매우 낮은 구릉지로서 표고 50m 이하 면적이 63.3%, 50~100m 면적이 28.1%를 차지함\*

\* 표고 및 경사는 구적면적으로 계산되었으며, 조서상의 면적과 차이가 있음

《 예정지역 표고 분석 》

구 분	계	50m이하	50~100m	100~150m	150~200m	200m 이상
면적(천m <sup>2</sup> )	73,006	46,174	20,527	4,807	1,337	161
구성비(%)	100.0	63.3	28.1	6.6	1.8	0.2

《 예정지역 표고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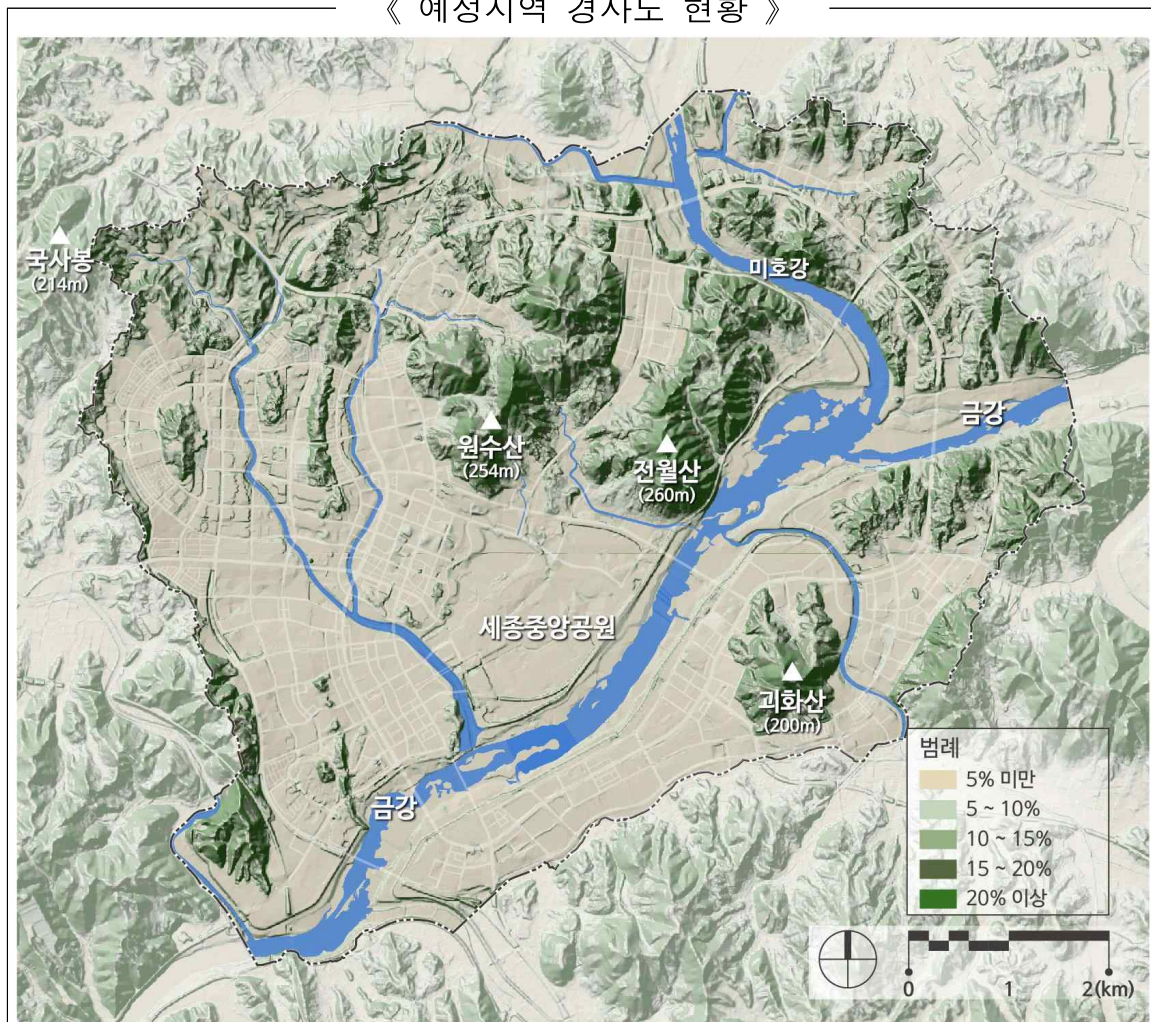
- 경사도 5% 이하의 평탄지가 54.9%이고 5~10%가 12.8%, 10~15%가 10.6%로서 경사도 15% 이하 지역이 전체의 78.3%를 차지함\*

\* 표고 및 경사는 구적면적으로 계산되었으며, 조서상의 면적과 차이가 있음

《 예정지역 경사도 분석 》

구 분	계	5%이하	5 ~ 10%	10 ~ 15%	15 ~ 20%	20% 이상
면적(천m <sup>2</sup> )	73,006	40,073	9,318	7,763	7,118	8,734
구성비(%)	100.0	54.9	12.8	10.6	9.8	11.9

《 예정지역 경사도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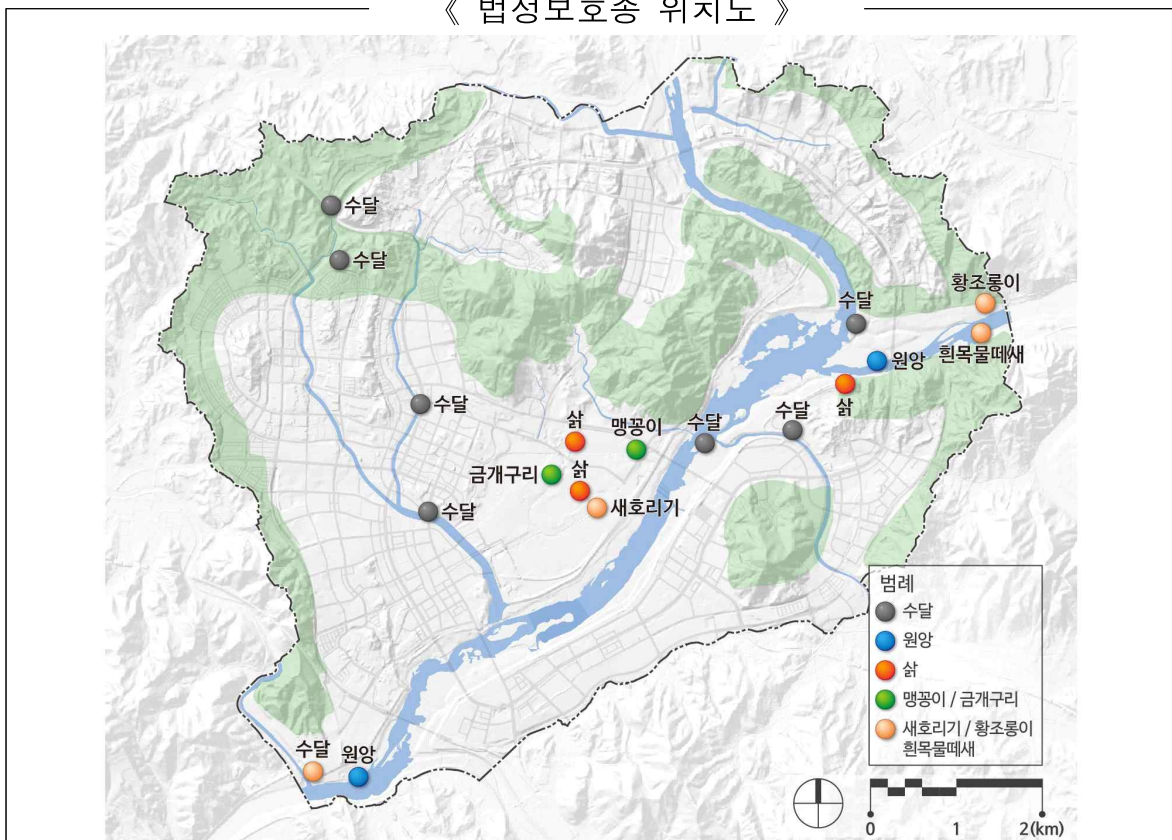




## □ 생태환경

- 주요 산림생태계는 동서방향의 국사봉~원수산~전월산을 잇는 녹지흐름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생태연결체계가 양호
- 국가하천인 금강, 미호강과 지방하천인 제천, 방축천, 삼성천 등으로 구성되어 양호한 하천 생태공간을 형성
- 산림과 하천이 연결되는 주요 지점으로 금강·미호강이 만나는 합강리 일원과 괴화산 인근 등은 생태네트워크가 양호하게 연결
- 예정지역 내에 법정보호종인 수달·삵·맹꽁이·금개구리·원앙·새호리기·황조롱이·흰목물떼새가 서식하며 그 외 멧돼지·고라니·너구리·청설모·족제비 등의 다양한 동물들 서식

《 법정보호종 위치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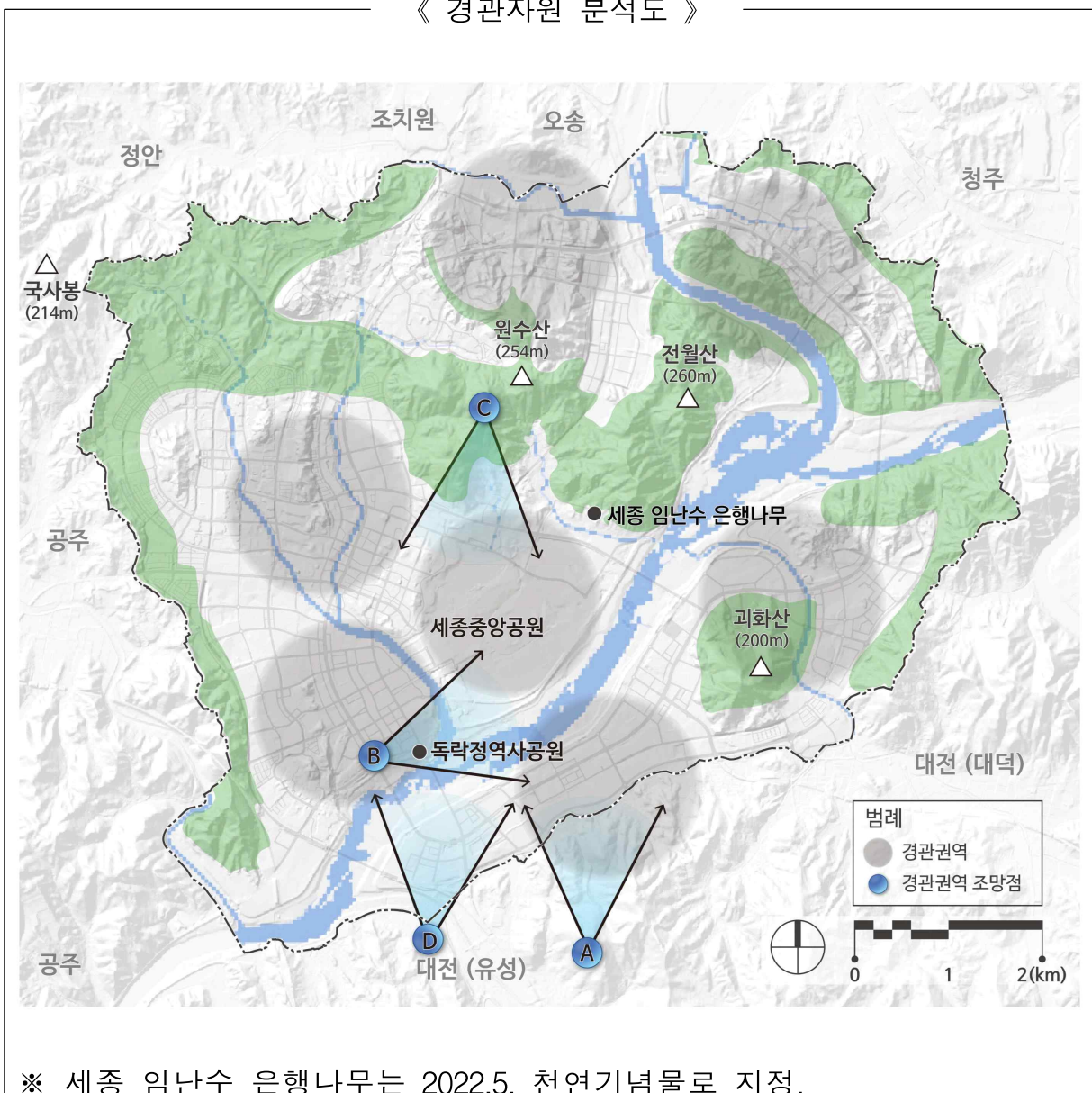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사후환경평가조사서, p.213, 환경부, 2021.

## □ 경관자원

- 주요 경관자원으로 원수산, 전월산, 괴화산, 호수공원, 세종중앙공원, 국립세종수목원 등이 높은 자연경관 잠재력 보유
- 구릉지 등 자연경관과 도시 진입부에서의 독특한 건축물로 인한 인공경관이 조화를 이루어 지역별로 색다른 경관을 형성

《 경관자원 분석도 》





《 주요 조망도 비교 》



A. 비학산에서 본 원수산, 전월산 (위: 2006, 아래: 2022)



B. 금남교에서 본 금강(동측) (위: 2006, 아래: 2022)



C. 원수산에서 본 비학산 (위: 2006, 아래: 2022)



D. 대평뜰 상공에서 본 장남평야 (위: 2006, 아래: 2022)

### 3. 도시건설 현황 분석

#### □ 인구변화 및 구조

- 예정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총 114천 세대, 300천 인('23.4. 기준)
  - 기관 이전이 단계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2012년 이후 매년 인구 증가

《 예정지역 인구변화 》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4.
인구 (명)	58,904	115,644	146,653	185,956	222,692	251,812	266,939	283,292	297,358	300,159
세대수 (가구)	20,277	39,267	50,534	65,464	79,812	91,360	98,376	104,462	112,828	114,279

자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3. 인구 현황(2023.04.30..기준)

- 예정지역의 연령별 인구구조는 40대(21.8%), 30대(17.7%)가 가장 많으며 50대 미만이 77.1%를 차지함

《 연령별 인구구조('22) 》

구분	0세-19세	20세-29세	30세-39세	40세-49세	50세-59세	60세-69세	70세이상
인구(명,%)	84,532(28.4)	27,320(9.2)	51,411(17.7)	64,639(21.8)	37,140(12.5)	20,538(6.9)	10,452(3.5)

\*외국인 1,326명 미포함

자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2. 인구 현황

- 충청권의 인구는 약 554만 인으로 지난 22년 간('00~'22) 약 15.3% 증가

《 지난 21년간 충청권 인구변화 》

구분	인구(만인)			인구증감(만인)
	'00년	'15년	'22년	
계	480.4	539.1	554.0	73.6
대전광역시	138.5	151.8	144.6	6.1
세종특별자치시	-	21.0	38.3	17.3('15년 대비)
충청북도	149.7	158.3	159.5	9.8
충청남도	192.1	207.7	212.3	20.2

자료 : 통계청. 2022. 주민등록인구현황

#### □ 주택건설 현황

- 주택은 '23년 4월까지 12.7만 호가 착공되었으며, 11.8만 호가 준공

## □ 산업 현황

- 산업은 '20년 말 기준 사업체 수는 15,273개, 종사자 수는 79,982명

《 예정지역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추이 》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사업체(개)	470	1,372	2,640	3,741	5,461	7,201	8,957	15,273
종사자(명)	12,698	23,087	35,264	40,682	49,779	62,020	69,547	79,982

자료 : 세종특별자치시, 각년도, 사업체조사 통계표

- 산업 비중(사업체 종사자 수 기준)은 2차 산업 6.3%, 3차 산업 93.6%  
(민간서비스 43.7%, 공공서비스 49.9%) 구성
- 공공행정 등의 종사자가 49.9%로 행정기능 중심의 고용구조

《 예정지역 고용인구 구조('20) 》

산업별 구분		종사자수(명)	구성비(%)	비고	
1차산업		농업 · 임업 · 광업	31	0.04	31명(0.04%)
2차산업		제조업	779	0.98	5,040명 (6.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642	0.8	
		건설업	3619	4.52	
3차산업	민간 서비스	도매 및 소매업	6260	7.83	34,990명 (43.75%)
		운수업 및 창고업	1023	1.28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899	2.37	
		금융 및 보험업	1,616	2.02	
		부동산업 및 임대업	4224	5.2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834	8.5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393	1.74	
		숙박 및 음식점업	7014	8.7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392	3	
		기타 서비스업	2335	2.92	
	공공 서비스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0651	25.82	39,921명 (49.91%)
		교육 서비스업	11614	14.5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7656	9.57	
합계		79,982	100.0		

자료 : 세종특별자치시, 2020. 사업체조사 통계표





- 광역 BRT는 오송과 대전을 연결하는 3개의 노선과 세종과 청주 공항을 연결하는 1개 노선이 운행 중이며, 추가 노선을 '30년까지 순차적으로 확충할 예정
  - ※ 행복도시~청주대농지구, 행복도시~공주시내터미널, 행복도시~홍익대 입구 등 노선 확충 예정
- 국내 최초 내·외부 순환 2중 환상형 대중교통중심도시 체계 구축
  - 내부도로 260km 개통('23.4.), 대중교통중심도로(BRT) 23km 개통('23.4.), 외곽순환도로 22.2km 개통('23.4.)
  - 국가중추시설 등 추가적인 국가기능의 이전에 따라 다양한 교통 체계 구축을 위한 대안 검토 중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대전~세종(행복도시)~충북을 연결하는 신규 광역철도 노선 계획



자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광역도로 사업현황(광역도로 개선대책 반영 재작성)



## 4. 도시건설 여건 분석 및 이슈종합

### 1) 글로벌 트렌드 변화

#### □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과 산업구조의 변화

-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이후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 산업 전반에서 인공지능 적용의 보편화, 스마트 제조 도입 및 메타버스 기술의 활용 확대, 온라인 서비스 및 디지털 플랫폼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
- EU는 2030년까지 디지털 전환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 달성을 위해 ‘디지털 10년을 향한 길(Path to the Digital Decade)’ 프로그램을 수립

#### □ 해외 선진 스마트도시 정책

- 유럽연합은 지역문제 해결과 향상된 도시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단으로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커뮤니티 정책을 수립
  - ※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정책 발표(2019)
- 영국 런던은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통한 세계적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
  - ※ 2013년 ‘스마트 런던 플랜(Smart London Plan)’을 수립, 2018년 이후 ‘스마트 런던 투게더(Smart London Together)’ 계획

#### □ 탄소중립 이슈의 등장과 실천전략 마련

- 2015년 파리협정 이후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21.10.)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정(‘21.9.)·시행(‘22.3.)

## 2) 정부정책 등 변화

###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국회와 중앙행정기관 간 물리적 거리로 인한 업무 비효율을 줄이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회 분원 건립 추진

\* 「국회법」 개정('21.10.)을 통해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추진 중

###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국가균형발전과 국정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이 밀집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추진

\* 「행복도시법」 개정('22.6.)을 통해 대통령 및 그 소속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집무실(제2집무실) 설치 추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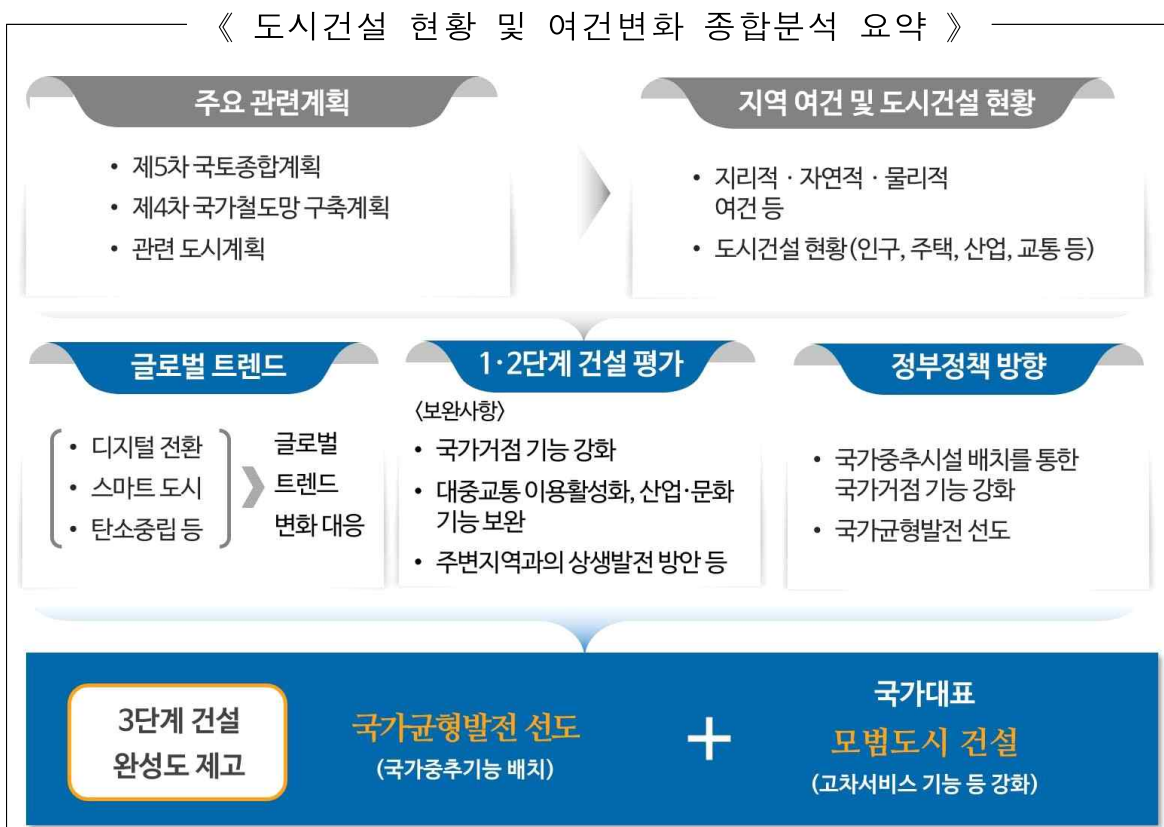
## 3) 단계별 도시건설 성과평가 및 개발계획 변경 이슈 분석

### □ 1·2단계 건설사업 성과평가에서 교통, 인구·주택, 자족기능 확충, 상생·연계 등 4개 분야의 한계점 도출

- 교통부문은 대중교통노선 부족, 상가 주변 주차 문제 등 이용 편의성 증대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요구
- 인구·주택 부문은 주변 충청권 도시로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 공동화 현상 및 주거 고밀화 이슈 제기
- 자족기능 확충 부문은 도시자족기능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생활권 편의시설 확충 등 자족기능 강화방안 마련 요구
- 상생·연계 부문은 충청권 광역도시계획의 실효성 제고 방안과 상생발전 방안 모색 필요성 제시

## □ 개발계획 변경내용 분석 결과

- 도시건설 과정에서의 이슈를 파악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개발계획 변경·고시 분석(제12차~제64차)
  - 계획변경 사유, 부문별 계획 변경 내용 등을 빈도분석을 통해 부문별 변경 사유 및 세부 내용을 중심으로 종합·정리
- 그 결과 토지이용, 교통 관련 이슈가 모두 전체의 2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하여 업무시설 용지 관련 계획 변경 및 4-2생활권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계획 변경
  - 교통계획과 관련하여 BRT 사업 시행을 위한 계획 변경, 중앙 녹지공간 자율주행차량 도로개설을 위한 계획 변경



## 5. 종합분석

-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모범도시로서의 행복도시 도시기능 강화 및 상징성 제고
  - 행복도시는 중앙행정, 국가정책연구 등 기능의 이전과 함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되며 세계적 모범도시로 발전·성장 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음
  - 또한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등 도시건설 3단계의 새로운 출발점에 있음
  - 국가중추기능이 추가 도입되면서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기능 강화 및 상징성 제고 필요
  - 기존 행정중심의 복합자족도시에서 국정운영, 입법기능 및 국가시범도시 등 새로운 도시기능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에 반영 필요
- 국가중추시설 배치를 반영한 광역 및 도시 내 연계교통 체계 개선
  - 전국 및 주요 거점도시와의 원활한 연결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외 광역 및 도시 교통체계 정비 및 확충 필요성 증대
  - 국가중추시설을 중심으로 다양한 대중교통수단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대중교통 중심 연계교통체계 구축 필요
  - 중심부 열린공간은 자전거도로 및 BRT 등 대중교통을 통한 교통연계성 강화 필요

## 《 3단계 도시건설 완성을 위한 기본방향 정립 》

## 《 SWOT 분석결과 》

<b>S</b> trength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한민국 중심부 입지와 균형 발전의 상징성</li> <li>1, 2단계 건설 차질 없이 진행 (기관 이전 및 주택 공급 등)</li> <li>중앙행정기능 및 국가정책연구 클러스터 성공적 안착</li> <li>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선정</li> </ul>	<b>W</b> 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낮은 대중교통분담률 (자동차 위주 교통 이용)</li> <li>교육, 문화 등 고차 도시서비스 기능 부족</li> <li>주변 도시와의 상생발전 노력 미흡 (2단계까지는 도시건설에 집중)</li> <li>탄소중립도시를 위한 실행방안 마련 초기 단계</li> </ul>
<b>O</b> ppportun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세종시 등 균형발전 거점조성 방향 제시</li> <li>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광역철도 구상 제시</li> <li>국가균형발전 수단으로 국가중추 시설 이전 예정</li> </ul>	<b>T</b> 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높은 수준의 업무상업시설 공실률</li> <li>도시 자족기능 및 도시기반시설 부족</li> <li>수도권보다 주변 도시로부터의 인구유입 증가</li> </ul>

**강화(S-O) 전략**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시 기능 강화 및 상징성 제고

도시건설 3단계의 새로운 출발점 :  
균형발전 선도도시

(기준) 행정중심 복합자족도시  
+ (추가) 국정운영·입법기능

**보완(W-O) 전략**

국가중추시설 배치를 반영한 광역 및 도시 내 연계교통 체계 개선

도시 내·외 광역 및 도시 교통체계 정비 및 확충

다양한 신 교통수단 활성화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극복(S-T) 전략**

스마트 기술 기반의  
신산업 육성 및 서비스 기능 강화

스마트시티 서비스 단계적 확산

스마트시티 관련 산업 및 기업 육성  
+ 스마트 시티 기술을 활용한 도시서비스 공급 확대

**방어(W-T) 전략**

주변 도시와의 상생협력을 통한 탄소  
중립 실현 및 도시기반시설 효율성 제고

보행유도를 통한 상업기능 활성화

교통, 환경, 관광 등 분야 중심 주변 도시와의  
연계 협력 확대

⇒ 계획변경 핵심어 도출 : ‘국가균형발전 선도’

‘탄소중립도시’, ‘스마트도시’, ‘도시자족기능 강화’ 등





## 도시건설의 기본방향

---

1. 도시건설의 정책목표
2. 도시건설의 이념
3. 도시건설의 기본방향





## 1. 도시건설의 정책목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도시수준을 향상시켜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모범도시로 조성

### 국가균형발전 선도도시

- 국가균형발전의 중추로서 국가정책을 선도
- 다극분산형 국토구조를 통한 균형발전 실현
- 지역·계층간 상생협력을 통한 국민통합에 기여

### 세계적인 모범도시

- 우리나라 도시 환경수준을 향상시키는 계기
- 미래도시의 기술적, 문화적 성과를 담아내는 비전 제시
-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의 새로운 모델 제시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고 삶의 질이 높은 세계적 모범도시 건설**

## 2. 도시건설의 이념

국가균형발전 · 경쟁력 강화의 선도 ⇨ ‘상생(相生)과 도약(跳躍)’

- 상생 : 지역간·세대간·계층간 융합을 이루는 ‘조화로운 도시’
- 도약 : 국가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선도하는 ‘역동하는 도시’

세계적인 모범도시의 추구 ⇨ ‘순환(循環)과 소통(疏通)’

- 순환 : 생태·경제·사회간 연계와 재생산이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
- 소통 : 첨단기술 및 공동체 의식을 통해 교류와 참여가 있는 ‘열린 도시’

‘상생과 도약’, ‘순환과 소통’의 도시 건설이념 아래  
‘세계로 도약하는 미래도시’를 추구

### 세계로 도약하는 미래도시

#### 상생(相生)

##### -조화로운 도시-

- 지역·세대·계층간 갈등의 포용·공유·화합
-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의 상징

#### 도약(跳躍)

##### -역동하는 도시-

- 행정·환경·문화·기술 등 각분야의 융합·혁신
- 도시의 수준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킬 국가적 기회

#### 순환(循環)

##### -지속가능한 도시-

- 자연과 인간, 보전과 개발의 조화
-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의 순환과 재생산

#### 소통(疏通)

##### -열린 도시-

- 첨단 정보·교통 네트워크로 시공간 확대
- 참여·교류·협력으로 개발적 민주적 도시문화

### 3. 도시건설의 기본방향



#### □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실질적 행정수도

- 중앙행정기능에 더하여 국정운영 기능 및 입법 기능 등을 수용하는 실질적 행정수도로 명실상부 국가균형발전의 구심적 역할을 강화
- 국정운영 기능과 함께 문화·국제교류, 대학·연구·첨단산업, 의료·복지, 첨단지식기반 등 다양한 도시기능을 유치
- 국토 중심에 위치하여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고 균형적인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도시로서의 위상 제고

#### □ 살기좋은 인간중심도시

- 도시의 어느 곳이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중교통체계를 완성하고 다양한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장벽 없는 도시 구현

- 각 생활권별로 불편 없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적절한 수준의 상업시설을 배치하여 상권 활성화 모색
- 방호·방재 측면에서 종합적인 예방 및 관리체계를 완비하여 시민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보호받는 도시 조성

#### □ 쾌적한 탄소중립도시

- 신기후체계에 대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을 마련
- 미래지향적인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요 녹지축과 하천을 연결하여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생태적 도시공간 구축
- 하천 보전 및 수질관리를 실시하며 시민 여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
- 폐기물 재활용, 집단에너지 공급방식, 중수 및 우수 활용,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을 통해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 건설

#### □ 품격 높은 문화·스마트도시

- 지역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세계문화를 함께 수용하여 과거·현재가 공존하는 도시문화 정체성 확립
- 일상생활을 통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하고 특색있는 문화공간과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개성 있는 도시문화 조성
- 시민이 주체가 되어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를 조성하고, 성과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전체로 확산

# IV

## 도시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

---

1. 도시건설의 정책목표
2. 도시건설의 이념
3. 도시건설의 기본방향



## 1. 도시기능 설정 및 인구구상

- ◇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심적 기능
- ◇ 행복도시권 지역경제에 대한 혁신지원 기능
- ◇ 시민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도시서비스 기능

### 1) 도시기능의 설정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고 국정운영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추진되는 선도사업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국정운영, 입법 및 중앙행정기능을 중심으로 관련되는 기능이 조화를 이루도록 도시기능의 설정이 중요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성격과 일치되도록 도입 할 수 있는 도시기능을 설정하고 기능 도입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을 수립
- 도입기능은 국가균형발전의 구심적 기능, 지역경제 혁신지원 기능, 시민의 일상생활지원 도시서비스 기능 등으로 구분
  - 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심적 기능
    - 국가균형발전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을 이전하고, 국가중추시설을 추가로 설치
    -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대내외 교류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국제회의장, 컨벤션센터 등 국제교류기능을 유치
    - 국가균형발전 중심도시에 적합한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을 유치하여 수준 높은 문화도시 완성

## ② 지역경제 혁신지원 기능

- 예정지역 내 산업용지에 첨단산업 및 첨단지식기반 산업을 유치하여 고용 창출 및 자족성 제고
- 대덕연구개발특구,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 등 인근 행복도시권 산업과 연계·보완 관계 형성
- 행복도시의 혁신지원 및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공동캠퍼스 조성 및 연구개발시설 유치를 통한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

## ③ 일상생활지원 도시서비스 기능

- 목표인구 50만 인의 도시민이 편리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서비스 기능 확보
- 시민이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시청, 시의회,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등 도시행정기능을 도입
- 상업, 금융, 업무 등의 다양하고 편리한 상업업무기능을 도입

《주요 도입기능》

구 분	도입 기능	도입 목적	세부 내용
균형발전기능	국정운영	국가중추기능확보	대통령 제2집무실
	입법		국회세종의사당
	중앙행정		중앙행정기관, 정책연구기관
	국제교류	국제교류	국제회의장, 호텔, 전시장 등
	종합문화	문화활동의 중심지	박물관, 미술관, 종합공연장
지역혁신기능	첨단지식 기반산업	자족적인 도시발전 행복도시권 혁신체계	의료, 스마트시티, 미디어단지 등
	대학연구	미래고등교육 여건 대응	공동캠퍼스, 기업 등 산·학·연 클러스터
도시서비스 기능	상업업무	편리한 도시생활을 위한 기초기능	은행, 쇼핑센터 등
	도시행정		시청, 시의회, 경찰서, 소방서 등



## 2) 인구구상

## 《 인구구상 기본방향 》

- 이전 및 기능 도입에 따른 인구유입을 최대한 수용하고 도시의 생활 자족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인구규모를 설정
- 도시기능의 도입에 따라 직접적 및 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인구를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목표인구를 설정
- 일상적 도시생활에 필요한 교육, 구매, 의료, 위락기능 측면에서 주요 시설들이 유치될 수 있는 인구규모를 설정

□ 균형발전·지역혁신·도시서비스 등 도시기능 도입에 따른 고용 창출 약 25만 인과 유발인구를 포함 시 총 인구 수는 50만 인 수준

- 일반적으로 복합쇼핑센터, 종합병원, 대학교 등 구매, 의료, 교육 등에서 최상위 기능을 유치 할 수 있는 인구규모로 50만 인이 바람직
- 주요 도시기능 도입에 따른 인구를 수용하고 도시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인구규모를 50만 인으로 설정

## 《 고용인구의 추정 》

도입 기능		인원(천인)	구성비(%)	비고
2차산업		30	12.0	· 첨단지식기반산업기능 등
산업	민간 서비스	160	64.0	· 첨단지식기반서비스기능 · 일반상업업무서비스기능
	공공 서비스	60	24.0	· 공공행정(중앙행정 및 도시행정기능) · 국가정책연구기관 · 교육(대학교 포함) 및 연구기능
총 고용인구		250	100.0	-

※ 1차 산업은 1% 미만으로 추정되어 주요 도입기능에서 제외

- 첫마을사업, 중앙행정기관 이전, 첨단지식기반산업, 대학 등 단계별 도시기능의 도입에 따라 인구 배분 시나리오를 작성
- 도시성장단계를 초기활력단계, 자족적 성숙단계, 완성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하여 '30년까지 목표인구 50만 인을 단계적으로 수용
  - 초기단계에는 정책추진력에 의한 정책적 유입인구가 중심이며 후속단계로 갈수록 도시의 자족적 경쟁력에 의한 인구가 유입
    - 초기활력단계 : 행정·공공기관 종사자 등 정책적 인구유입
    - 자족적 성숙단계 : 도시의 자족적 성장동력에 의한 인구유입
    - 완성단계 : 국토균형발전 혁신거점도시 완성에 의한 인구유입

《 단계별 인구예측 》

단 계	초기활력단계	자족적 성숙단계	완성단계
	'07~'15	'16~'20	'21~'30
인구유입(천인)	150	150	200
인구누계(천인)	150	300	500

《 인구 및 고용 변화요인 》

-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 또는 설치로 인한 직접 고용 및 인구증가
- 시청 및 소방서 등 도시행정서비스 기관 이전으로 인한 인구 증가
- 문화, 교육, 의료, 첨단지식기반시설의 유치
- 상업, 업무 등 민간서비스 기능의 확대
- 직·간접효과로 인한 인구의 자연적·사회적 요인에 의한 변화
- 자연적·사회적 요인에 의한 인구를 지원하는 산업의 고용변화
- 인구지원산업 고용변화에 따른 인구변화

## 2. 활력있는 도시구조

- ◇ 균형발전을 구현할 수 있는 환상형 도시 공간구조
- ◇ 환상형 중심부는 입법, 행정, 문화가 함께하는 열린공간

### 1) 도시 공간구조

-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을 상징하는 환상형 구조와 국가 입법·행정·문화가 어우러지는 열린공간 구조를 기본골격으로 설정
  - ※ 도시개념 국제공모 당선자 선정 이후 연구기관 합동토론회('05.11.29.)와 전문가 자문회의('05.12.2.) 등을 거쳐 환상형 도시구조를 결정
- 도시의 개발은 환상형 도시 공간구조를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고 생활권을 개발축에 균등하게 배치하여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도모

《 공간구조 구상 및 개발축 설정(안) 》



- 열린공간은 국가의 입법, 행정, 문화 기능을 수용하여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국가 상징공간으로 조성
  - 열린공간은 환상형 도시 공간구조 및 주요 도시기능, 도시생태 및 경관축과 조화되는 공간으로 조성
  - 국가중추시설은 열린공간 콘셉트에 따라 시민의 접근성을 확보 하되, 방호시설의 특수성을 고려
    - ※ 구체적인 조성방안은 국제설계공모,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마련
- 개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연환경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구조를 구상
  - 환경친화적 생태도시 구현을 위해 녹지축(국사봉~원수산~전월산) 및 하천축(금강, 미호강)이 보전되도록 개발축을 설정
  - 산지·녹지·수변공간은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수목원, 문화·레저·휴양 및 스포츠시설 등 다양한 휴식공간을 배치
- 도시의 자연적 특성을 이용하여 쾌적한 이미지를 창출하고 도시의 정체성이 표현되는 도시경관을 조성
  - 원수산·전월산을 포함하는 S-1생활권은 국정운영 및 교류 공간 성격을 가지는 특화된 공간으로, 주변 자연경관을 고려하여 조성
  - 하천변은 시민의 휴식·레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개방감 있는 경관을 연출하여 도시의 쾌적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계획
-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는 환상형 도시골격을 따라 대중교통수단이 순환하는 대중교통중심의 도시교통체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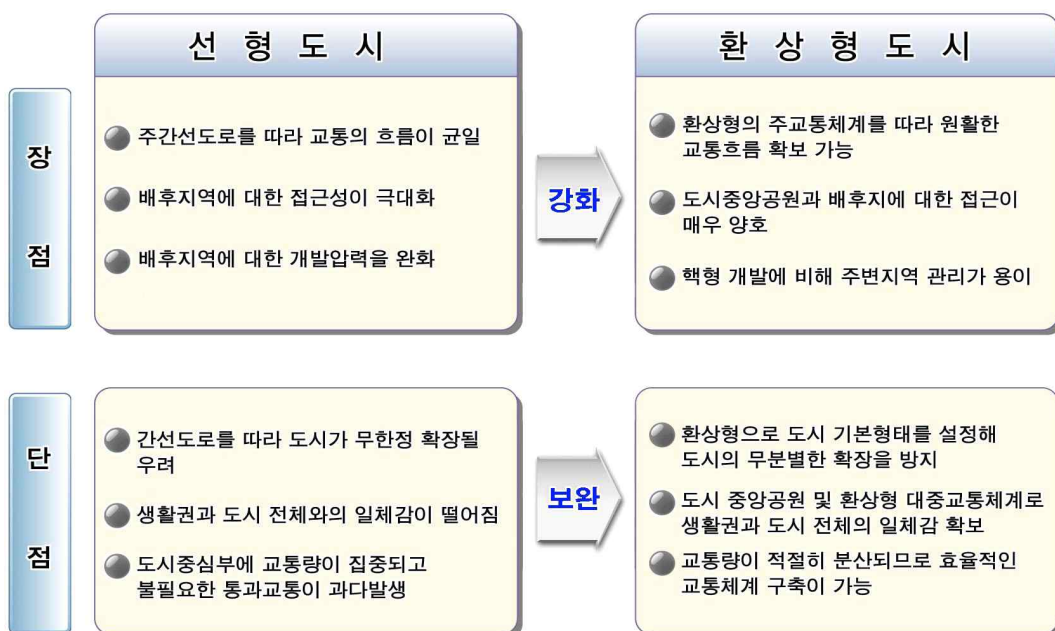
- 개발축 양편에서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화 할 수 있도록 가급적 개발축의 중앙부근에 대중교통축을 배치
  - 생활권은 대중교통 접근성을 고려하여 반경 500m 내외로 설정 하되 지형·지세, 보전지역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유연하게 구성
  - 다양한 가로경관의 연출을 위해 대중교통축은 단조로운 직선 이나 일률적인 원주형보다는 리듬 있는 굴곡형으로 계획
  - 열린공간은 도시 내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행, 자전거 동선체계 및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계와 연결
- 대중교통 중심도시의 개념을 보완하고 예정지역 내부의 통과 교통을 우회시키는 수단 고려
- 주변 고속도로, 국도 등을 연결하여 도시의 외곽순환도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 내부 통과교통을 우회 유도
  - 도시 내부의 원활한 교통흐름과 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탄소 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다양한 방안 검토

《 환상형 도시구조의 의의 》

- 환상(Ring)형 도시구조는 과거 집중형으로 개발된 신도시 사례와는 달리 도시기능이 상당 부분 분산되어 균형 있는 도시 형성이 가능
- 혁신, 분권, 분산, 균형발전 등을 추구하는 분권화 시대의 상징을 담아 낼 수 있는 도시공간구조로서 의미가 있으며, 21세기 국가 발전방향을 개념적으로 상징화

### 《 환상형 도시구조의 특성 》

- 환상형 도시구조는 도심(CBD)과 주변지로 구성되는 기존 도시에서 발생하는 교통체증 등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도시구조
  - 기존 도시는 중심지로의 접근거리 단축을 중시하나, 환상형 도시는 접근 시간을 중시하는 등 지식정보화시대의 특성을 반영
- 환상형 도시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
  - 도시 전체가 환상형을 따라 균등하게 발전 될 수 있도록 대중교통축을 중심으로 도시기능을 선형으로 배치
  - 대중교통축에 배치된 도시기능 주변으로 고밀도 복합토지이용을 하고 공원녹지 등을 배치하여 이용을 위한 교통거리를 단축
  - 대중교통축을 중심으로 가로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여유 있는 가로 공간 확보
- 환상형 구조는 선형도시의 장점(교통원활, 접근성, 기반시설 설치용이)을 강화하고 단점(일체감 부족, 이동거리 증가)을 보완하는 구조
  - 환상형 축을 따라 기능 분산배치, 환상형의 도시형태, 환상을 따라 설치 되는 대중교통 및 환상형 중앙부에 위치하는 공원 등의 특징 보유



## 《 해외 국가중추시설 주변 배치 예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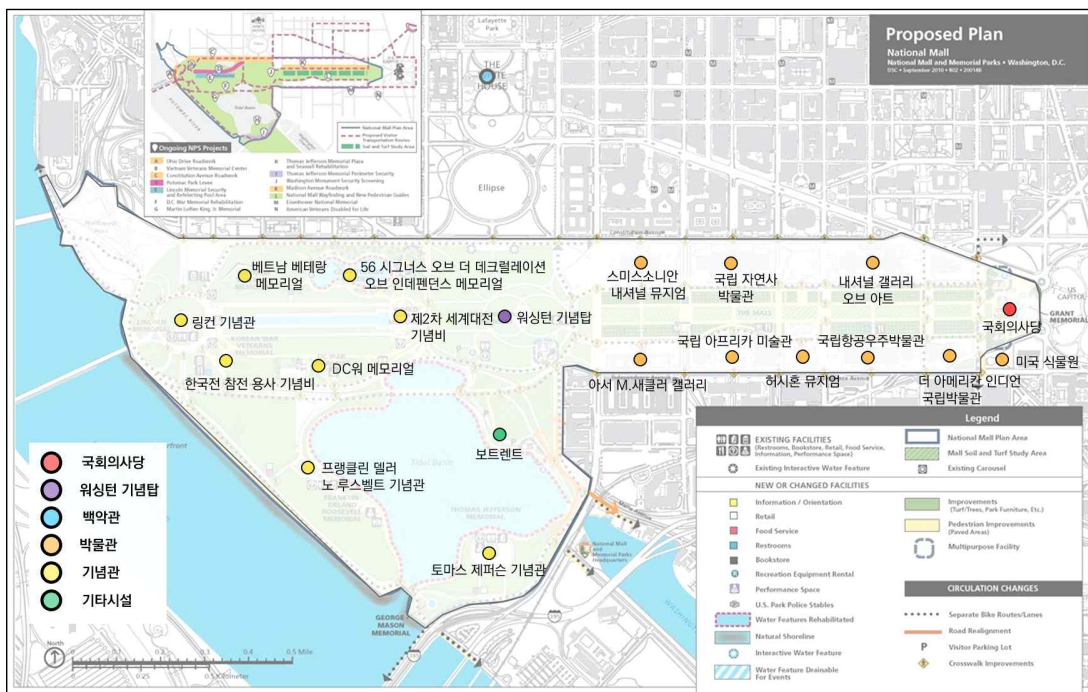
## □ 워싱턴 DC 내셔널 몰(National Mall)

## ○ ‘미국의 앞마당’이란 별명을 가진 상징공간

- 넓은 잔디와 문화시설로 구성되고 열린 경관으로 조성된 내셔널 몰(National Mall)은 미국의 역사적 기념물과 기념관, 박물관, 미술관 등 시민들을 위한 문화시설 배치

※ 국립자연사박물관, 스미스소니언 미술관, 국립 항공우주 박물관 등

- 백악관 및 미 국회의사당, 박물관 및 기념관 등이 위치. 공원 속에 기념물 및 문화시설을 배치하여 국가적 상징공간 조성
- 미국의 선조들과 영웅들을 기리는 공간은 퍼레이드 또는 불꽃놀이 등 여러 활동과 주요 축하행사가 열리는 국가 무대
- 시민들이 넓고 쾌적한 보행로와 아름다운 가로수길을 따라 거닐며 미국의 역사와 풍경을 감상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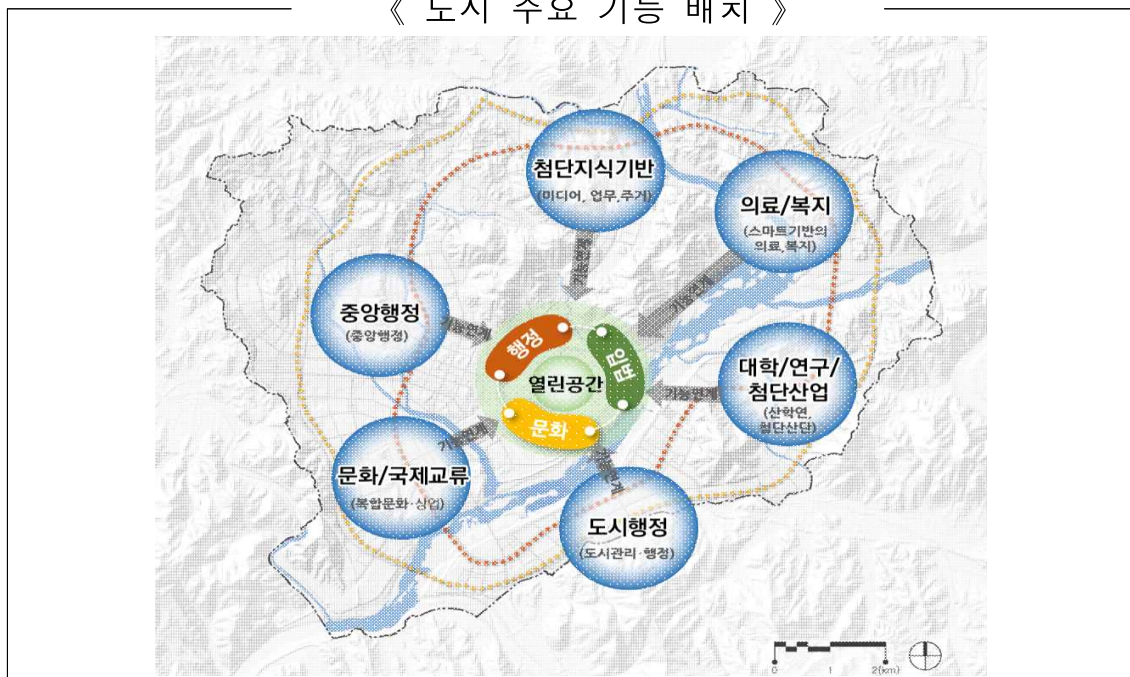
자료 : 미국 국립공원관리청, 2022.



## 2) 도시 주요 기능의 배치

- 도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환상형 도시구조의 특성과 분산·분권의 이념을 담아낼 수 있도록 도시의 주요기능을 분산 배치
  - 도시기능은 도시 내 지역별 입지 특성과 인접 도시와의 광역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거점별로 배치
  - 일반적인 도시서비스를 지원하는 상업·업무기능은 대중교통축을 따라 연도형으로 배치하여 거점지역간의 연계 활성화를 유도
  - 열린공간은 6개 생활권과 기능연계를 통한 유기적 발전 실현

《 도시 주요 기능 배치 》



《 거점별 배치기준 》

- |              |                         |
|--------------|-------------------------|
| • 중앙행정       | : 광역적 접근편의성, 상징성        |
| • 문화/국제교류    | : 중앙행정기능 지원 및 수변공간 연계   |
| • 도시행정       | : 시민 접근성, 도시 균형성장       |
| • 대학/연구/첨단산업 | : 대덕 연구단지 등과의 연계        |
| • 의료/복지      | : 오송생명과학단지 등과의 연계       |
| • 첨단지식기반     | : 연구 및 중앙행정 등 관련 기능과 연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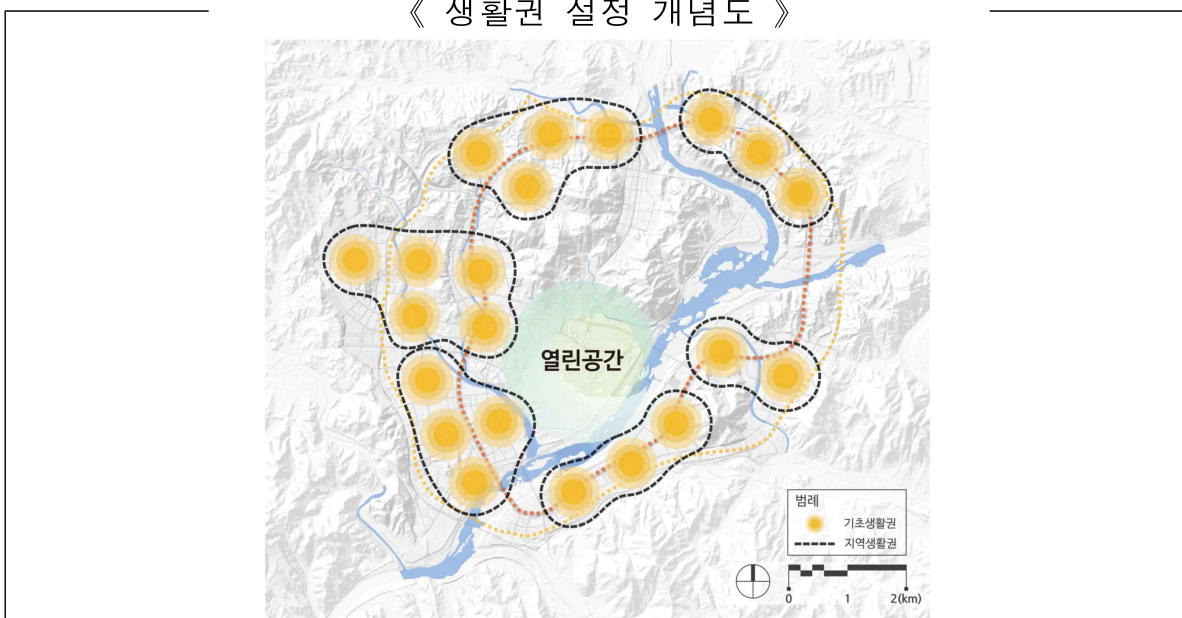
### 3. 생활권 계획

- ◇ 위계별 특성에 따른 생활권 설정
- ◇ 대중교통중심의 기초생활권 구상
- ◇ 공공시설 등의 복합화를 통한 커뮤니티 공간조성

#### 1) 생활권의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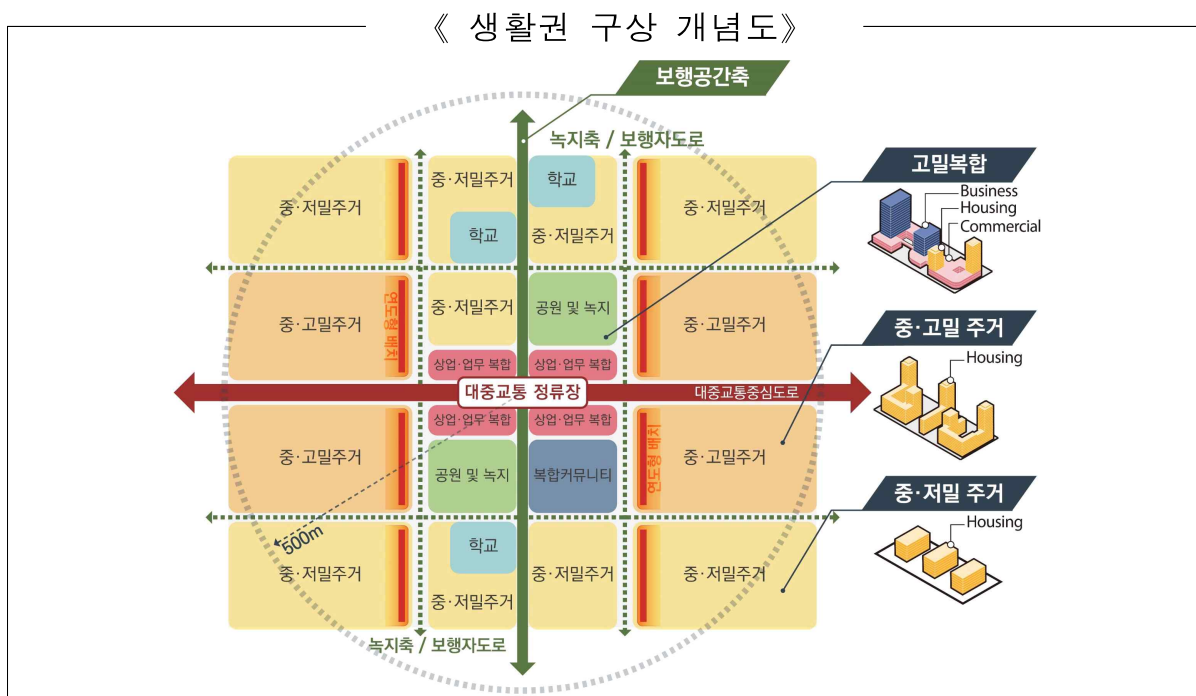
- 생활권 단위의 특성과 위계에 따라 기초, 지역, 도시생활권으로 구분하여 도입기능 및 시설물 배치계획을 수립
  - 기초생활권은 독립적이고 특성화된 개발이 가능하도록 인구 1~3만인 규모로 하고 약 20여개로 설정
  - 지역생활권은 기능거점 권역별로 2~5개 기초생활권을 연계하여 위치 및 도입기능 특성에 적합하도록 설정
  - 도시생활권은 기초생활권의 총합개념으로 1개 단위로서 도시의 고유한 특성이 표현될 수 있도록 시설 및 기능을 배치

《 생활권 설정 개념도 》



## 2) 생활권 구상

- 주민들의 편리성 확보를 위해 대중교통 정류장 및 연결 보행 도로를 중심으로 공공편익시설을 배치
  - 주거지에서 도보나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 생활권 중심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계획
- 생활권 중심은 주거, 상업, 업무 등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허용하여 주민교류를 촉진하고 주·야간 활력을 유지하도록 계획
  - 대중교통축 주변은 상업 및 중고밀 주거형태, 보행축 주변은 중·저밀의 연도형 주거형태로 구상
- 각 생활권 단위의 도입기능 및 규모는 1~3만인 정도의 인구 규모에 적합하게 설정하되 생활권 규모에 따라 유연하게 배치
  - 생활권의 중심에는 주민 간 교류를 위해 각종 공공시설이 위치 하는 커뮤니티센터를 입지시키고 도입기능 및 시설을 복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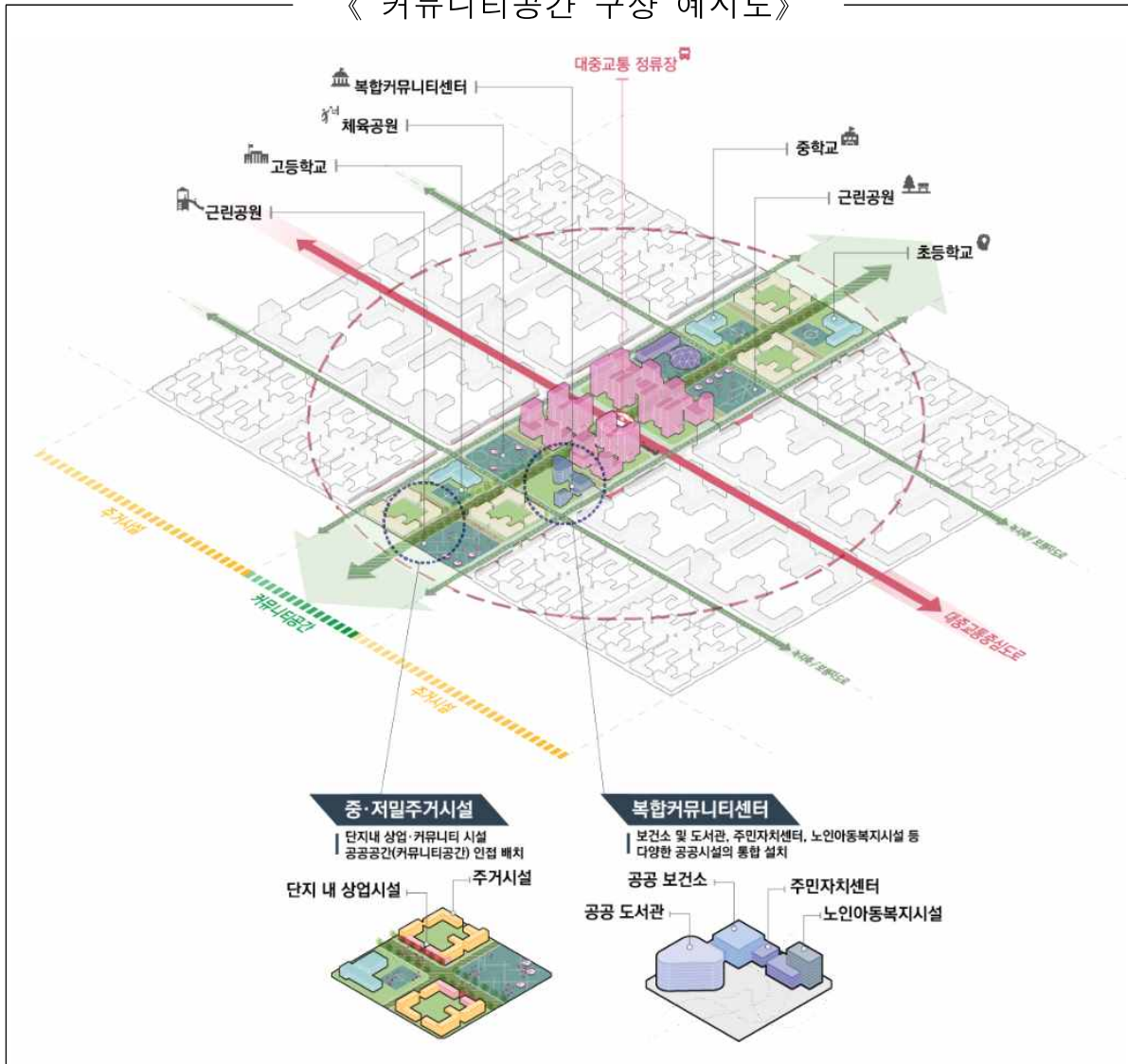
### 3) 커뮤니티 공간 조성

- 생활권별로 공공·교육·문화·복지시설 등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복합화하여 효율성 제고
  - 대중교통축에 인접한 복합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주민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고 도시건설 이념을 실현
  - 프로그램 및 기능이 유사하거나 연계·통합이 가능한 시설을 통합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
- 커뮤니티시설 복합화를 통해 주민생활의 편리를 도모하고 시설물 관리주체의 예산 절감과 관리의 효율성 제고
  - 공공시설을 복합화하여 시설투자비를 절감하고 이용률 증대와 관리비 절감 및 수요변화에 탄력적 대응
  -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하던 일부 민간시설도 공공시설과 함께 설치하여 입주자 편의 및 시너지 효과 제고
-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복합화가 가능한 시설을 도출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
  - 공공서비스 시설 중 도시 전체차원 또는 상위 생활권에서 필요한 시설을 구분하여 설치방안 마련
  - 다양한 시설 운영주체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리·운영 협의체 구성·운영 등 관리 방안 강구

《 기초생활권별 복합가능 시설 예시 》

- 교육시설 : 유치원·초등학교(각 2개소), 중학교(1개소), 고등학교(1개소) 등
- 공공시설 : 행정복지센터, 보건지소, 경찰지구대 등
- 상업시설 : 복합상업시설, 근린상가 등
- 복지시설 :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 문화체육시설 : 실내체육관, 수영장, 근린공원 등

《 커뮤니티공간 구상 예시도 》



## 4. 토지이용의 기본방향

◇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전체면적 50% 이상을 공원·녹지·친수공간 등 확보

### 1) 보전지역 및 가용토지 설정

□ 예정지역 면적의 50% 이상을 공원·녹지 및 친수공간 등으로 설정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계획

○ 녹지보전지역은 국사봉~원수산~전월산을 잇는 녹지축을 중심으로 설정하되, 예정지역 면적의 30% 내외 수준으로 계획

○ 하천보전지역은 금강과 미호강 및 지방하천을 중심으로 주변 공원녹지와 연계하여 설정하되, 예정지역 면적의 20% 내외로 계획

※ 주요 신도시 및 해외도시 공원·녹지·친수공간 비율 : 분당 27.4%, 일산 23.1%, 판교 34.0%, 푸트라자야(말레이시아) 37.6%

□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초기단계부터 우선 설정한 후 도시건설에 필요한 가용토지 설정 및 기본계획 수립 추진

○ 환상형 도시공간구조 구현 및 열린공간에 대한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개발가능지를 환상형으로 설정

○ 주택건설용지는 자연지형 활용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을 감안하여 순인구밀도 300인/ha 내외 수준으로 계획

※ 구체적인 순인구밀도 계획은 생활권 계획수립 시 현황에 맞게 조정

## 2) 주요 용도별 토지이용 구상

### 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택건설용지

- ☐ 순인구밀도 300인/ha 내외를 유지하기 위한 주택건설용지 규모를 예정지역 면적의 20% 내외로 계획\*

\* 주택건설용지 규모는 개발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설정

- ☐ 주택건설용지는 대중교통축 양쪽에 배치하여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고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치
  - 도시경관 및 토지이용을 고려한 다양한 밀도를 구상하고 가로 활성화를 위해 다른 용도·용지와 연계·배치토록 계획

### 나) 활력 있는 도시건설을 위한 상업·업무용지

- ☐ 도시활동 서비스 및 탄력적인 도시기능 확보를 위한 상업·업무용지 규모는 예정지역 면적의 2% 내외로 계획
  - 호텔·컨벤션센터 등 국제교류기능과 대형마트 등 유통시설, 대중교통축 주변의 상업·업무시설 개발면적 등을 감안하여 확보
- ☐ 상업·업무용지는 대중교통축을 따라 배치하여 접근성과 이용률을 높이며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구상하여 직주근접을 유도
  - 대중교통축에 위치한 정부청사·국제교류·문화 등 거점기능과 연계한 다양한 상업기능을 조성하여 도심 활력 증진 유도
  - 생활권 주거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 비중을 높이거나 접근성이 양호한 주상복합시설 등을 활용하여 생활권별 상권 활성화 유도

### 다) 도시 자족성 확보 및 첨단산업을 위한 산업용지

- ☐ 생명·환경·정보기술 중심 첨단산업 관련 기업, 대학, 연구시설 등을 유치하여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도시의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을 공간적으로 통합(생활권 내 연접배치)하여 R&D 인력양성, 창업·성장 및 재투자의 생태계 구축
  -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산·학·연 기능 유치를 위한 지원방안과 규제 해소 등 혁신 거점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 중앙행정기관 및 국가중추시설 등과 관련된 기관·단체 등의 산업용지는 효율성과 수요, 업무형태를 고려하여 입지와 배치 결정

### 라) 환경친화적인 녹지 및 미래수요에 대비한 유보지 확보

- ☐ 원수산과 전월산을 잇는 녹지축과 열린공간을 녹지로 설정하는 등 공원·녹지·하천 등은 예정지역 면적의 50% 이상으로 확보
- ☐ 3단계 도시건설 및 건설 완료 이후 추가적인 도시기능 유치 등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유보지를 도시 주요 지점에 확보

### 마) 효율적인 도시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시설용지

- ☐ 적절한 규모의 공공시설 확보와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공공시설용지는 녹지 등을 제외한 가용 토지면적의 25% 내외로 계획
- ☐ 도로·저류지·공급시설 등을 위한 공공시설용지는 기능 및 특성, 주변 토지이용 등을 감안하여 적지에 배치

## 5. 도시건설지표

### 1) 주요 도시건설 지표

부 문	관련 항목	계 획 지 표	비 고
인 구	목표 인구	50만인	2030년 기준
주 거	세대당 가구원수	2.5인/세대	평균치
	주택공급량	20만호	
	주거지밀도(순밀도)	300인/ha 내외	
	기초생활권 규모	1~3만인 내외	
	기초생활권 개수	20개 내외	
상 업	상업·업무	예정지역 면적의 2% 내외	국제교류, 호텔, 유통 등 포함
공 업	첨단지식기반시설 등	100만㎡ 내외	
녹 지	공원·녹지율	예정지역 면적의 50% 이상	공원·녹지, 하천 등 포함
	하천변 녹지 폭원	40m 내외	국가하천
		20m 내외	지방하천
	근린공원	1만㎡ 이상	기초생활권 단위
	모지공원	1개소 내외	도시생활권 단위



부 문	관련 항목	계 획지 표	비 고
환경	탄소중립 실현	1.5톤CO <sub>2</sub> eq/인	2030년 기준
공공청사	중앙행정	250만 m <sup>2</sup> 내외	국회, 국가행정 및 지방행정, 공공기관 등 포함
	지방행정 및 공공기관		
상하수도	폐기물 수송 관로	150km 내외	
	하수 처리 용량	19~22만톤/일	
	1인당 1일 평균 급수량	300~350 ℓ /인·일	
	하천(계획홍수빈도)	200년	국가하천
교 통	환상형 대중교통축 (연장)	20km 내외	
	환상형 대중교통축 (폭원)	40~50m 내외	자전거 및 보행공간 포함
	여객터미널	2개소 내외	
	전국주요도시 접근성	2시간 내외	
	광역도시권 접근성	1시간 내외	행복도시권 주요도시
	도로율	10% 내외	
교 육	유치원	70개 내외	기초생활권당 2개소 내외
	초등학교	50개 내외	학급당 학생 수 20~25인
	중학교	30개 내외	
	고등학교	30개 내외	
	대학교(공동캠퍼스)	1~2개소	대학(대학원), 연구기관 등
문 화	주민복합문화시설	20개 내외	기초생활권 단위
	실내생활체육시설		
	박물관	1~2개소	도시생활권 단위
	박물관단지	1개소	
	미술관	각 1~2 개소	
	전문공연시설		
	중앙도서관		
	종합체육시설(Complex)		
복 지	아동복지시설	20개 내외	기초생활권 단위
	노인복지시설	20개 내외	
	광역복지지원센터	각 1개소	지역생활권 단위

※ 부문별 세부 계획지표는 개발계획 단계에서 구체화

## 2) 토지이용 구상표

구 분		예정지역 면적 대비 비율(%)	비 고
보전용도		50% 이상	공원·녹지, 하천, 열린공간 등 포함
개발용도		50% 이하	
주택건설용지		20% 내외	
상업·업무용지		2% 내외	호텔, 컨벤션, 유통시설 등 포함
공공 청사	중앙행정	4% 내외	국회 등 국가시설 포함
	지방행정 및 공공기관		공공기관 이전대상 포함
문화·복지·교육·의료용지 등		6% 내외	대학교 및 실버타운 포함
첨단산업용지		2% 내외	
레저·스포츠 용지		2% 내외	
공공시설 용지		13% 내외	도로, 주차장, 저류지, 공급처리시설 등 포함
유보지		1% 내외	

※ 동 지표는 토지이용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면적은 개발계획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산정함



## 부문별 도시 개발방향

---

1. 쾌적하고 살기 좋은 토지이용계획
2. 시민친화적이며 효율적인 공공청사 배치
3. 국가관리기능과 시민이 소통하는 특별관리구역 조성
4. 편리하고 인간중심적인 교통체계
5. 환경친화적인 탄소중립도시
6. 미래지향적인 스마트시티 계획
7. 교육·문화·복지 인프라 구축
8. 경제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시설 조성
9. 안전한 도시를 위한 방호 및 방재계획



## 1. 쾌적하고 살기 좋은 토지이용계획

- ◇ 쾌적하고 편리하며 안전한 미래형 주거지 조성
- ◇ 다양한 유형의 개성 있는 주택의 공급
- ◇ 환경친화적이고 다양한 특성을 가진 열린공간 조성

### 1) 살기 좋은 주거지 조성

- ☐ 주변의 수림 및 자연 지형을 보전·활용하고 다양한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
  - 도시 외곽의 녹지축과 연계한 하천변 녹지축을 확보하고, 단지 내 녹지공간과 연계하여 도시 전체의 유기적인 생태네트워크를 구성
- ☐ 대중교통수단과 연계된 친환경 교통(보행, 자전거) 연결체계를 구성하여 다양한 이동수단으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
  - 도로에 의한 친환경 교통연결축 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행 네트워크를 마련하고 대중교통 연계체계 및 환승시스템을 구축
- ☐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생활권별 공공시설의 복합화로 다양한 문화·복지 수요를 충족
  - 기존 자연 및 역사환경과 조화된 문화인프라를 구축하고 지구 내 복합커뮤니티와 연계하여 다양한 주민 친화형 문화공간 조성
  - 모든 지역의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원하는 생활정보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스마트 도시기반을 조성
- ☐ 범죄 예방을 위한 단지계획과 방재시설이 완비된 안전한 주거지 조성

## 2) 주택 공급구상

- 생활권별로 지역의 특성과 도시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주거지 유형을 개발·공급하여 도시의 정체성 확보
- 여건 변화에 따라 감소된 주택용지를 감안하여 원활한 주택공급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전략 구상
  -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 3단계에서는 주거용지 감소에 따라 단독주택의 공급을 줄이고 중고밀 이상의 주택공급을 확대
  - 상업·도시형 주택용지에 소형가구를 위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고령화·1인 가구 증가 등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
  - 무장애(Barrier Free) 등 장애인 주거복지를 고려한 개념을 도입하고, 사회적 포용성을 높일 수 있는 주거단지계획 수립
- 추가적인 기관 이전 및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임대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적정 공급

《 주택 공급구상(안) 》

주택밀도	저밀	중저밀	중밀	중고밀	고밀
주요 주택유형	단독· 연립주택 등	중저층 공동주택 등	중층 공동주택 등	중고층 공동주택	도심형 공동주택 등
용 적 률	80% 이하	150 %	200 %	250%	250% ~ 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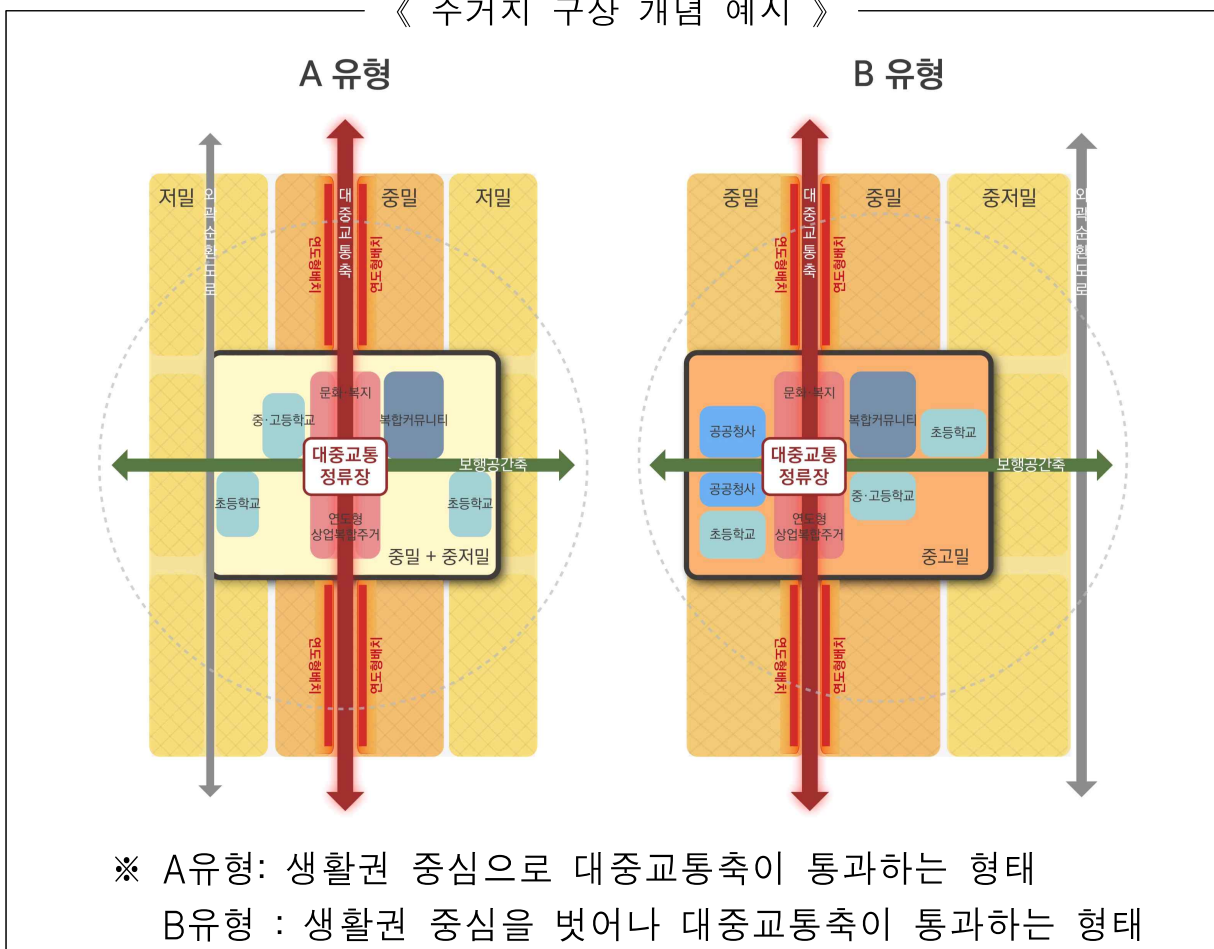
※ 상세한 주택공급구상은 개발계획에서 제시

- 임대주택은 도시기능 및 공공성 등을 감안하되,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임대 비율 및 다양한 유형으로 개발하여 공급

### 3) 주거지 밀도 배분

- 주거지의 밀도는 생활권 위치별로 도시경관, 대중교통수단과의 접근성,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구성
- 기초생활권의 중심부에는 중고밀·고밀·복합주거지를 배치하여 대중교통수단과 커뮤니티·근린생활시설의 이용의 편리성 증진
  - 보행녹지축 주변은 경관을 고려하여 중·저밀의 연도형 주거 형태 구상
  - 외곽순환도로 주변이나 구릉 등에는 소음저감 및 자연경관을 보전할 수 있도록 중·저밀 주택 배치

《 주거지 구상 개념 예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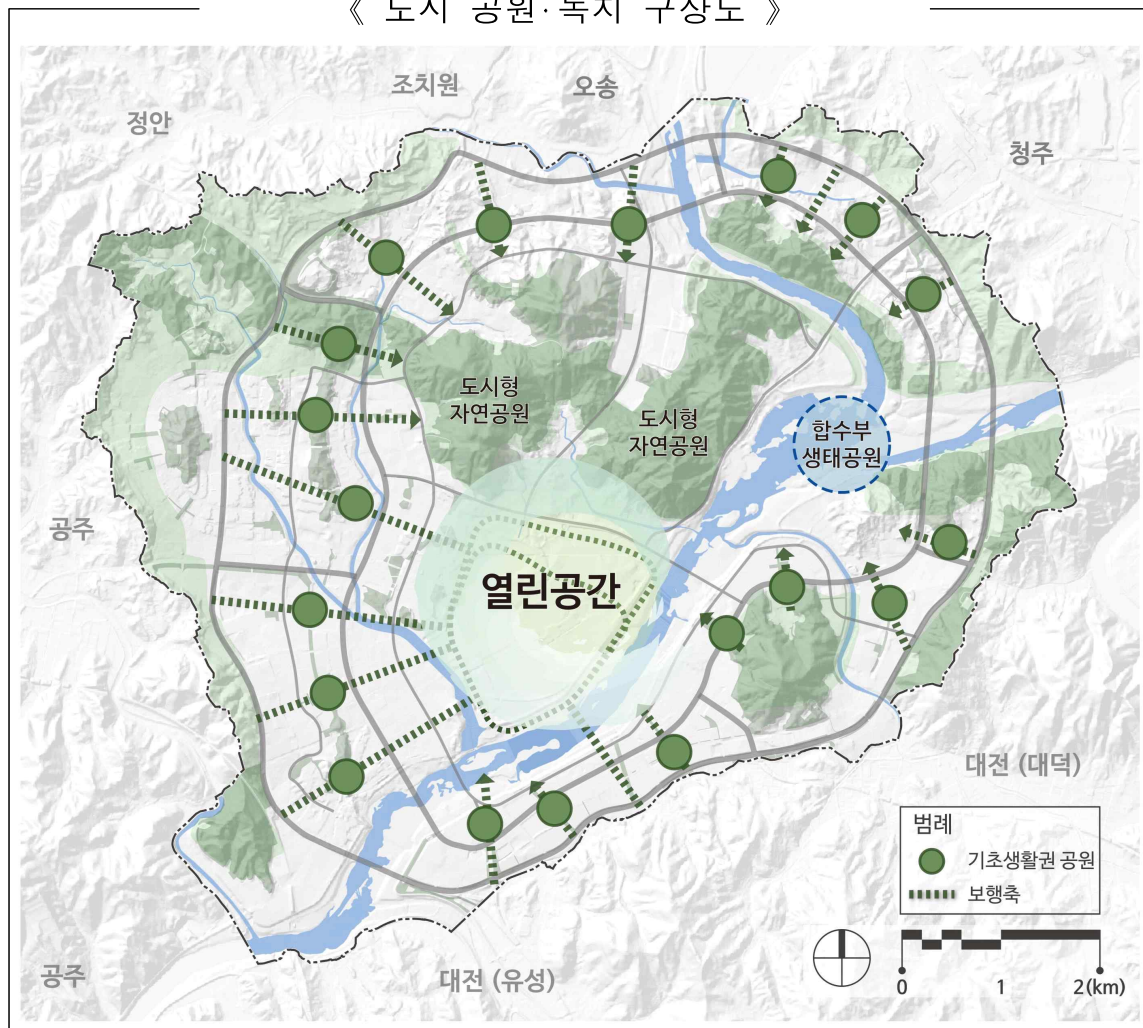
#### 4) 환경친화적이고 다양한 도시공원·녹지 조성

- ☐ 전체면적의 50% 이상을 공원·녹지로 유지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추구해온 친환경도시 이미지 유지
- ☐ 도시 내·외의 녹지, 수변공간이 단절되지 않도록 연계하고 녹지와 수변공간에 대한 시민 접근성 제고
  - 생활권 사이에 켜기형 녹지 등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주요 녹지축과 연계
  - 공원·녹지를 연결하는 보행로, 자전거 도로가 단절되지 않도록 구상하여 시민의 접근성 및 시설활용도 제고
  -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자연형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고 호수, 옥상녹화, 생태공원 등 다양한 비오톱(Biotope)을 설치
- ☐ 생활권별로 다양한 규모·형태의 도시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레저공간 제공
  -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근린공원을 배치하고 생활권 특성을 고려하여 근린공원의 규모·성격을 차별화
  - 어린이공원은 안전성을 고려하여 근거리에서 이용 가능토록 하며 접촉과 교류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공원별 차별화 추진
  - 소공원은 도로 모퉁이, 사무용 건물 사이의 소규모 토지 등에 조성하여 도시민에게 특색 있는 휴식공간으로 제공
- ☐ 주요 녹지, 하천, 문화유산 등 기존 여건을 활용하여 다양한 유형의 주제공원(Theme Park)을 적극 배치



- 시민들이 자연과 생태환경을 느낄 수 있도록 주요 동식물 서식지 및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 등에 자연생태공원을 설치
- 예정지역 내 문화유적 등을 보존하여 시민이 학습·체험할 수 있는 역사·문화공원 조성
- 도시민에게 여가·휴식을 제공하고 야외활동을 통한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수변·체육공원 조성

《 도시 공원·녹지 구상도 》



## 5) 도시 중심부 열린공간 구상

- 환상형 도시개념을 바탕으로 국민 모두에게 개방된 공간, 자연과 사람, 국가의 입법·행정·문화가 공존하는 상징공간으로 조성
    - 열린공간은 도시 내 어디서나 쉽게 접근 가능하여 모든 국민이 공유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조성
    - 자전거도로·보행자도로와 녹지축·하천축 등 생태네트워크가 만나고 인간과 환경이 어우러지는 환경친화적 공간으로 조성
  - 도시의 중앙에 위치하는 열린공간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고 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복합적 성격의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
    - 열린공간 내 입지하는 국가의 입법·행정·문화시설 등은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배치
- ※ 구체적인 조성방안은 국제공모,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마련

《열린공간 배치 예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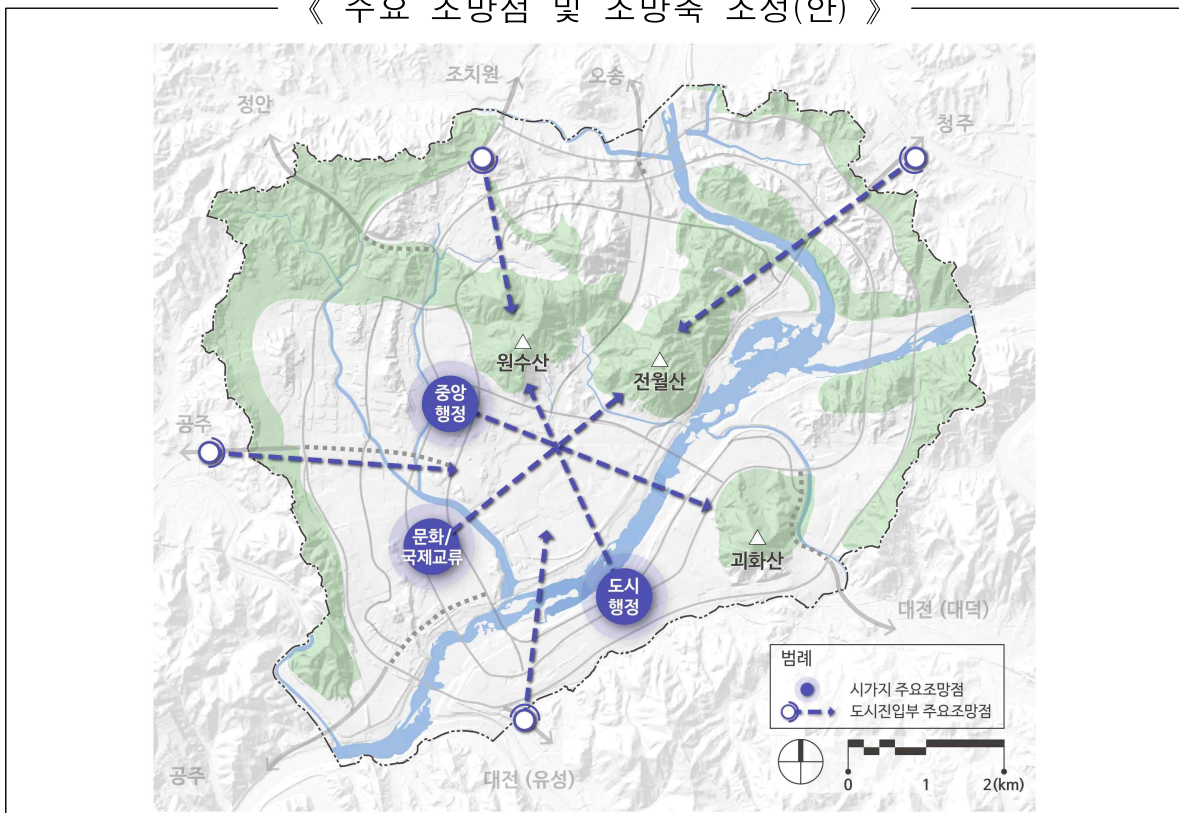
## 6) 하천변 수(水)공간 조성

- 국가하천 및 주요 지방하천을 따라 환경친화적 수변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도시어메니티를 증진
  - 하천은 가능한 자연형으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생태공원, 수변식생대 등을 조성하여 하천생태를 보전
  - 하천변 제방은 경사를 완화하여 치수안전도를 향상하고 고수부지와 연계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
- 금강·미호강 등 주요 하천 구간을 지형 여건 및 토지이용계획 등에 따라 보전·복원·친수구역 등으로 나누어 관리
  - 친수구역은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녹지축 및 주거·문화·상업시설과 연계하고 보행교, 인공호수 등을 도입
  - 보전·복원 구역은 자연생태학습장 등을 조성하고 보행공간, 자전거도로 등을 설치하여 하천에 대한 접근성 제고
- ‘물이 있는 도시’로서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적정한 하천 수질 및 수량 유지 방안 강구
  - 자연정화기법, 식생정화기법 등 환경친화적인 하천 수질 향상 방안을 마련하여 쾌적한 친수공간 조성
  - 국가하천, 지방하천 및 소하천 등의 수량 확보방안을 마련하되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환경영향을 최소화

## 7) 매력적인 도시경관 조성

- 경관자원 분석을 통해 주요 조망점 및 경관축을 설정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경관을 형성
  - 진입도로·도시거점 등 주요 조망지점에서 원수산·전월산·괴화산·열린공간 등의 경관자원을 볼 수 있도록 조망축을 설정
  - 지역별로 개성 있고 도시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경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경관지침을 마련하여 도시의 정체성을 확보
  - 건축물·교량 등 도시경관과 산지·하천 등 자연경관이 조화를 이루도록 도시 전체의 스카이라인을 형성

《 주요 조망점 및 조망축 조성(안) 》



- ※ 주요 경관축을 조성하여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에 반영
- 국도1호선·36호선 등 도시진입도로에서 전월산 또는 원수산을 조망하는 축
  - 주요 도시기능 거점에서 원수산과 전월산, 괴화산 등을 잇는 경관축 등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정체성 및 이미지를 확립하고 도시의 상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도시경관을 형성
  - 환상형 도시로서의 정체성과 도로의 위계, 장소성, 방향성을 인식 할 수 있도록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축 경관을 조성
  - 대중교통축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주요 경관자원과 연계된 보행 위주의 특화가로 조성
  - 도시이미지를 형성하는 주요 지역에 상징성·조형성 및 디자인 등이 다양하고 우수한 공공미술품을 설치하여 도시미관 제고
- 미시적 경관 강화를 위해 세부 경관과제를 설정하여 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 하위계획에 반영하는 등 경관관리 도모
  - 건축물 미관, 옥외광고물, 조경설계 등 세부 경관과제를 설정하고 각 과제별 경관지침을 수립하여 도시 경관관리 강화
    - ※ 건축물 미관, 옥외광고물, 도시환경색채, 야간경관, 공원·녹지 수변공간, 공공시설물, 도시구조물 등 7대 경관과제를 선정, 세부 경관지침을 마련하여 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에 반영
- 건축적·문화적으로 우수한 건축물의 건립을 유도함으로써 우수한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도시품격 향상을 도모
  - 설계경기, 시범사업, 인증제도 등을 통해 미적·기능적으로 우수한 건축물, 교량 등을 건설하여 도시의 미관 향상을 도모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우수한 자연환경 및 도시이미지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통합적 도시이미지를 제시



## 8) 미래 장사문화를 선도할 선진 묘지공원의 조성

□ 납골제도 개선, 산골제도 도입 등 정부의 장사정책 방향에 부합하고 미래 장사문화를 선도할 선진 장사시설을 배치

- 도시구상 단계부터 장사시설을 고려하여 예정지역 내 기존 묘지 이전 대책을 마련하고 장사문화의 모범사례를 마련
- 장례식장, 화장장, 추모공원, 자연장(수목장, 산골시설 등), 납골평장시설 등을 모두 갖춘 종합 장사시설을 배치
- 매장묘지는 지양하고 화장(火葬) 후 납골평장, 자연장 등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설치

□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배치하고 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시민친화적인 환경을 조성

- 주변의 녹지공간을 활용하여 수목원, 산림욕장, 체육시설, 휴양시설, 편의시설, 산책로 등을 배치
- 화장시설, 납골시설, 자연장 등 장사시설의 설계 및 배치 시 조경 등을 통해 시민들의 거부감을 최소화하는 방안 강구

《 은하수 공원 장례식장 》



(장례식장, 화장시설 및 조경)



(잔디장)

## 2. 시민친화적이며 효율적인 공공청사 배치

- ◇ 도시기능, 시민 편의성 및 행정효율성을 고려한 청사 배치
- ◇ 국가의 문화, 입법, 행정기능이 어우러지는 공공청사의 건축

### 1) 국가중추시설 입지 및 배치 기본방향

- 국가중추시설 입지는 국가균형발전과 국정운영 효율성 제고 등 설치 목적, 타 생활권 기능과의 연계, 상징성, 방호·보안 등을 고려하여 선정
  - 국가중추시설은 기존 시설과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 다양한 입지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최적 입지를 마련
- 국가중추시설 배치는 시설의 상징성, 국민들의 접근성, 이용 편의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계획
  - 국가중추시설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상업, 업무, 교통 등 지원공간 필요시 연계성, 업무효율성과 도시 내 미칠 영향을 검토하여 계획

《 국가중추시설 입지예상 지역(예시) 》





## 2) 중앙행정기관 입지 및 배치 기본방향

- 중앙행정기관 이전 및 추가 이전은 행복도시법 제1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고시\*

\* 최초 이전고시('05.10.5.) : 중앙행정기관 18부 4처 16청 중 12부 4처 2청 이전

- 추가적인 이전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22개 기관 이전('22.12. 기준)

- 중앙행정기관 입지는 입지선정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추진 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장남평야 북서쪽(현재 위치)으로 결정

※ 입지선정기준 : 전통적 입지상징성, 시민친화성, 환경친화적 경관잠재력 활용, 광역적 접근편의성, 도시적 기능연계성, 개발편의성, 도시활성화촉진, 안전성 등

- 단독청사의 경우 시민친화도 및 업무 유형을 고려하고 유관 기관의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분산 배치

- 정부청사 배치는 기존의 행정 편의적이고, 폐쇄적인 배치를 지양하고 다양한 배치기준을 검토하여 현재의 청사 형태로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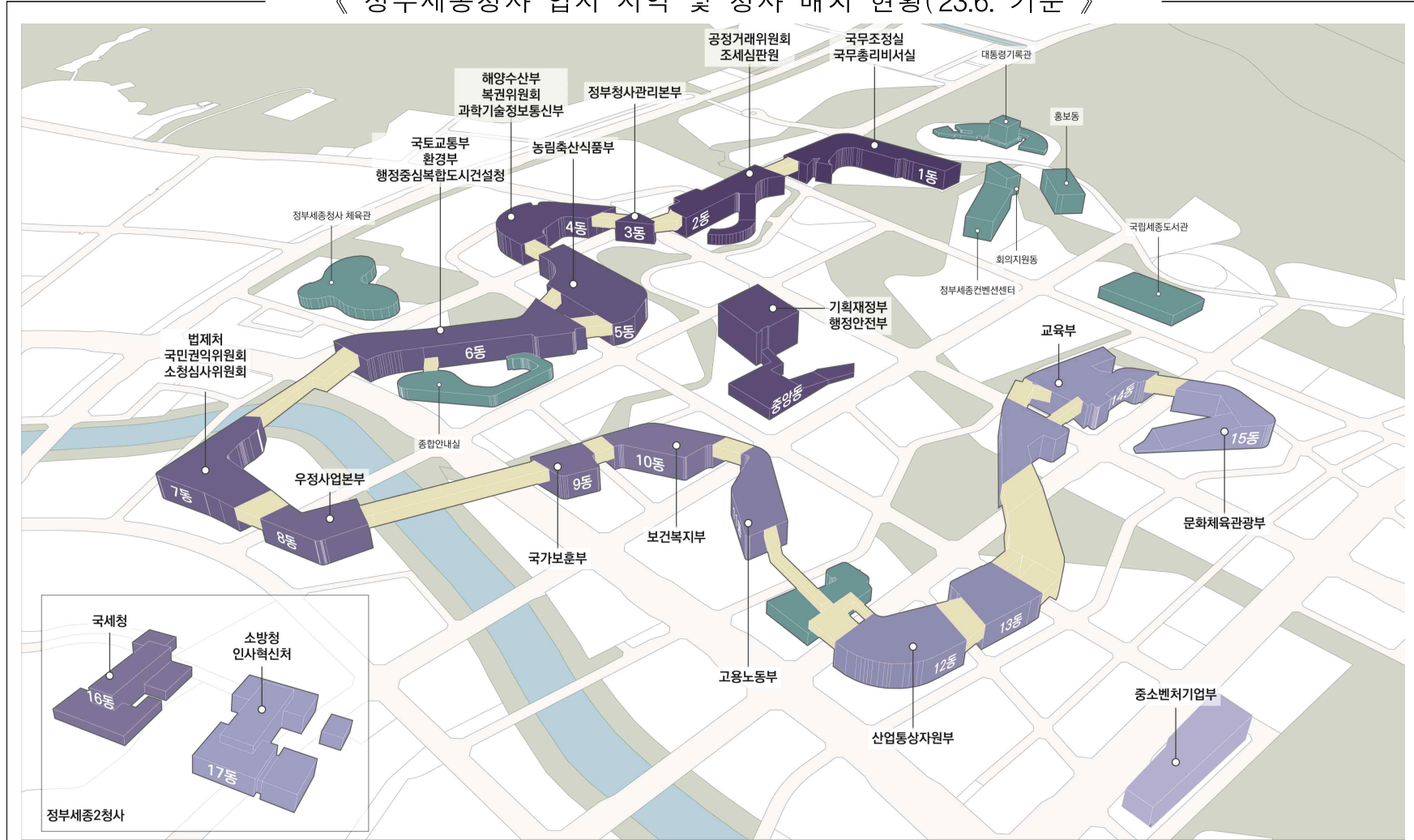
\* 중심행정타운 마스터플랜 국제공모('07.) 당선작을 기본으로 정부세종청사 건립 기본계획을 확정('07.12.)

- 정부청사 주변지역은 야간에도 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업무, 상업, 문화, 주거 등의 용도와 혼합하여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계획

-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은 인접 배치하고 연계성이 낮거나 직접적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등은 독립 배치

- 추가적인 기관 이전에 따른 배치는 도시기능, 기존 기관 배치 및 열린공간 내 국가중추시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검토

《 정부세종청사 입지 지역 및 청사 배치 현황('23.6. 기준) 》



### 3) 시민의 이용편의성과 친화성을 고려한 도시행정기능 배치

- ☐ 시민 이용편의성과 친화성을 높이기 위해 대중교통축 인근에 주요 도시행정기능을 집중 배치

※ 도시행정기능(예시) : 시청 및 시의회, 보건소, 경찰서, 교육청, 세무서, 우체국, 법원, 검찰청 등

- ☐ 도시행정기능 입지지역 주변에 공원, 광장 등 시민활동공간을 배치하여 시민의 이용 편의성 증대

### 4) 국가정책연구기관 입지 및 배치

- ☐ 연관성이 높은 연구기관 간 연계를 통해 연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가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기반을 조성

- 연구기관 간 활발한 의견교류 및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접 배치하여 국가정책 연구클러스터를 조성

- 국책연구단지, 공동캠퍼스 및 첨단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산·학·연 연계를 통한 혁신기반 조성이 가능하도록 배치

- ☐ 도시의 주요 기능과 연계가 용이한 지역을 선정하여 독립된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조성

- 대학 및 연구기관, 업무기능, 지원기능, 국가중추기능 등과 연계를 고려하고 대중교통을 통해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배치

《 국책연구기관 입지 배치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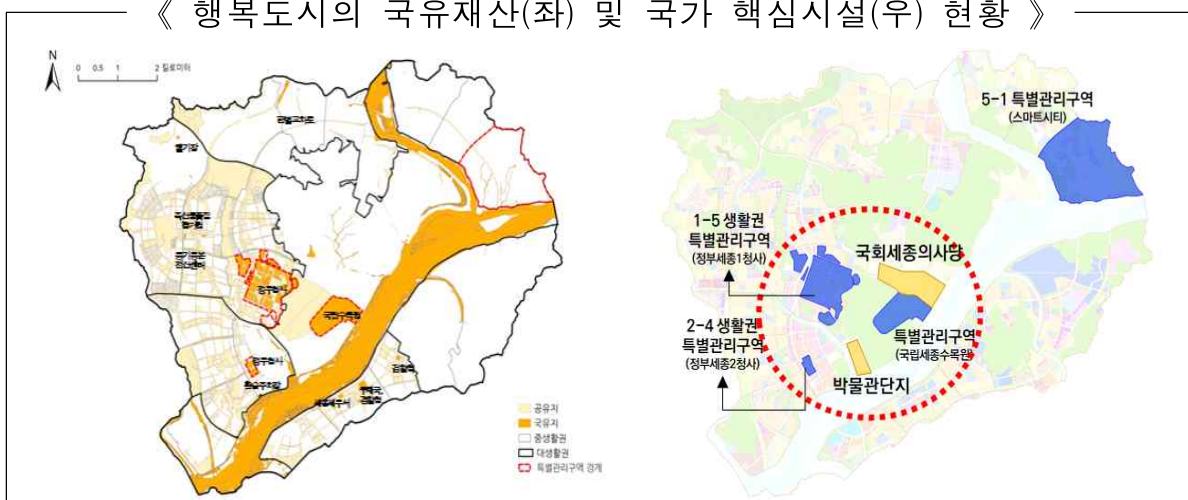


### 3. 국가관리기능과 시민이 소통하는 특별관리구역 조성

- ◇ 특별관리구역은 행복도시건설의 정책목표 및 이념 등을 실현
- ◇ 국가균형발전의 상징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성

- 행복도시 건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미래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특별관리구역 제도 도입(행복도시법 제15조의2)
  - 국가주요기능이 입지한 지역은 공사 완료에도 불구하고 예정지역에서 해제되지 않도록 하여 국가의 계획 권한을 유지
  - ※ 개발계획 수립(제20조), 실시계획 승인(제21조), 기반시설 설치 지원(제23조),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지원(제63조의6), 연구기관·국제기구 지원(제63조의8) 등
- 도시 건설목표 달성과 중앙정부에 의한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국가중추시설이 위치한 지역, 국책사업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을 지정
  - 중앙행정기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등 국가주요기능이 입지하거나 국책사업 연계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관리

《 행복도시의 국유재산(좌) 및 국가 핵심시설(우) 현황 》



- 특별관리구역은 국가의 계획·관리가 필요하다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가기능과 시민이 소통하는 활력있는 공간으로 조성
  - 건설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의 취지를 일관성 있게 구현하고, 기존지역과 균형감 있고 조화로운 개발 유도
- 특별관리구역 안의 개발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의 연계강화를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관리계획 이행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관리구역 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간 협업 체계 구성 및 소통 강화
- 제도 도입 이후 신규로 입지하는 국가주요시설\*에 대한 지정범위 추가 및 인접 지역과 연계한 공간계획 마련 등 구역 완성도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강구
  - \*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국립박물관단지 등
  - 특별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등과 관련한 각종 행정 절차 및 운영방식에 대한 제도적 내실화 도모
- 중장기적으로 도시 완공 이후 국가의 계획관리 역할 변화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이고 유연한 계획 수립
  - 국가의 계획 권한과 관리 권한이 조화를 이루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공간으로서 실질적·실효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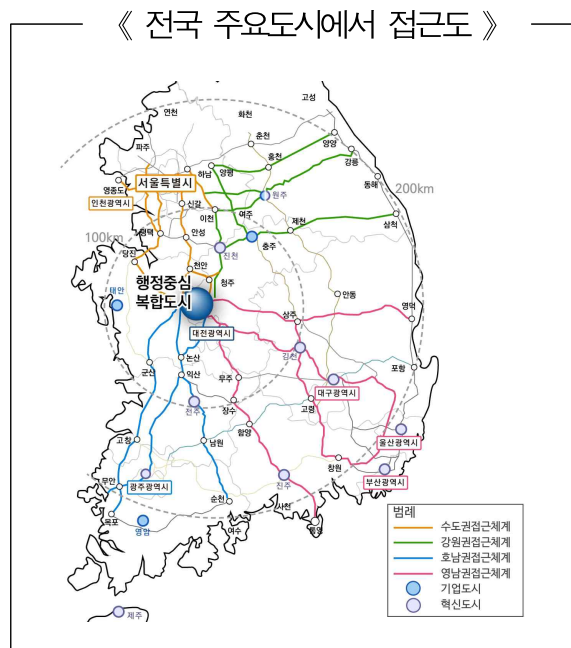
## 4. 편리하고 인간중심적인 교통체계

- ◇ 전국 주요 도시에서 2시간 내외에 접근할 수 있는 **교통체계** 구축
- ◇ 주변도시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연계교통체계** 구축
- ◇ 인간과 환경을 중시하는 대중교통중심의 **도시교통체계** 구축

### 1) 국가기간 교통망 체계

□ 전국 주요 도시에서 2시간 내외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간선 교통체계를 정비하여 전국적 접근성을 제고

- 경부고속국도, 경부고속철도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을 통과하는 간선 교통망과 주요 도시 간 연결교통체계를 정비·확충
- 광역권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순환·방사형 고속망 확대 및 지방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철도 건설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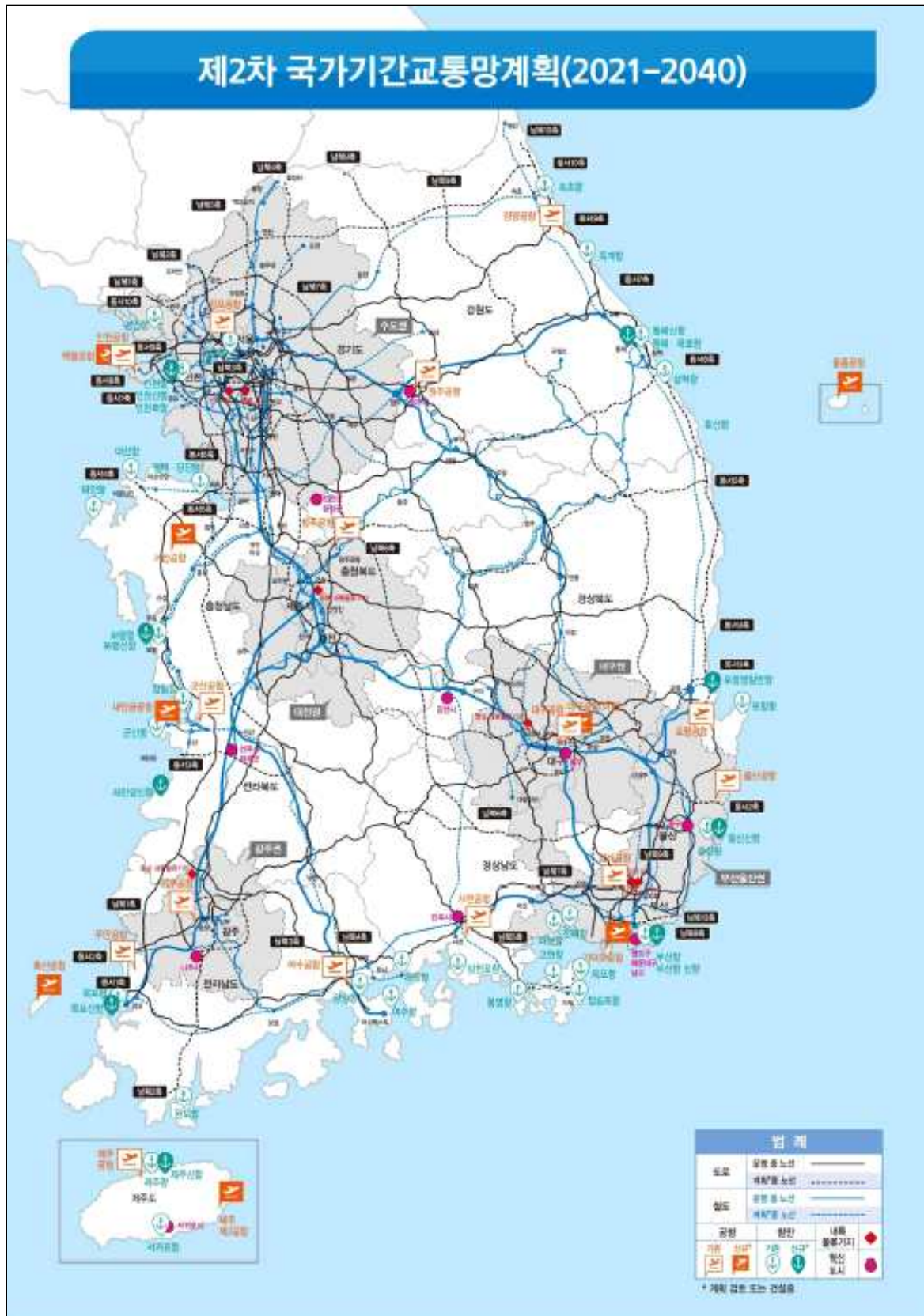


- 강원권, 영남권(경북 북부, 경남 서남부), 호남권 등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은 도로, 철도 등 간선 시설을 확충하여 접근성을 강화

※ 국가기간교통망 정비 기본방향(출처 :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21-2040))

- 고속국가철도망 : 기존 노선의 고속화, 신규 고속철도 노선 공급
- 광역철도 : 교통혼잡을 줄이고 통근시간 단축
- 국가간선도로망 : 대도시권 혼잡 완화 및 권역별 교통축 단위 운영관리체계 구축





자료 : 국토교통부, 2021.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21-2040)

## 2) 광역교통체계

□ 전국 및 행복도시권 주요 도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간 원활한 연결을 위한 광역교통체계 정비·확충

- 청주국제공항 및 고속철도(오송역 등)와의 연계 교통체계를 확충하고, 도심항공교통(UAM 등)을 통해 광역 연결성 증대

※ 도심항공교통은 관련 법령,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도입 검토

-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포함한 충청권 주요 도시 간, 도로·철도 등 간선교통시설 간 효율적 교통연결체계 구축 및 환승시설 배치

- 지역 간 교통량의 도시 내 통과를 감소시키고 도시 내 원활한 교통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방사·순환형 교통망 구축

- 국가중추시설 배치를 반영하여 광역 및 도시 내 연계교통체계 개선

□ 행정기능의 효과적 수행, 행복도시권 주요지역과의 접근성·상생 발전을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시행

※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해 대중교통 운영대책과 광역교통시설 개선방안 및 자원분담, 우선순위 등 장·단기 사업시행방안 등을 제시

- 주변 대도시와의 연계 기능 강화 및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도시고속도로 신설 등 광역도로망 확충

- 대도시권 도로 혼잡 완화 및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구축 등 광역권 철도 네트워크의 지속적 확충

- 청주국제공항, 서해안 주요 항만, KTX역 간 연계 등 주요 교통 관문과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한 스마트 대중교통체계 마련

## 《 주변도시 및 기존 교통시설과의 접근 개념도 》



## 《 행정중심복합도시 3차 광역교통개선대책 》



자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광역도로 사업 현황(3차 광역도로 개선대책 반영 재작성)



### 3) 도시교통체계

#### 가) 교통 수요 관리형 교통체계

- 승용차 중심의 교통 수요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개발(TOD)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
  - 환상형 대중교통 중심축을 중심으로 열린공간 접근성을 보완하고 생활권별로 적정 정류장과 환승시설을 배치
- ※ TOD(Transit Oriented Development) : 대중교통중심의 복합적 토지이용과 보행친화적 교통체계를 유도하는 도시개발 방식
- 최적의 가로망 계획과 주차시설 계획을 수립하여 승용차 통행 수요를 줄이고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
- 보행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권을 보장하여 승용차 이용에서 자전거·보행 등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으로 전환 유도

《 도시교통체계 구상 개념도 》



## 나)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 환경친화적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현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걷고 싶은 도시로 조성
  - 자전거와 도보로 청사, 정류장, 학교 등 도시 전역을 다닐 수 있도록 녹지대와 연계하여 자전거 도로망, 보행자도로, 산책로를 조성
  - 개인형 이동장치(PM), 공공자전거, 도심항공교통(UAM) 등의 신교통수단 활성화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 녹색교통체계 조성사례 예시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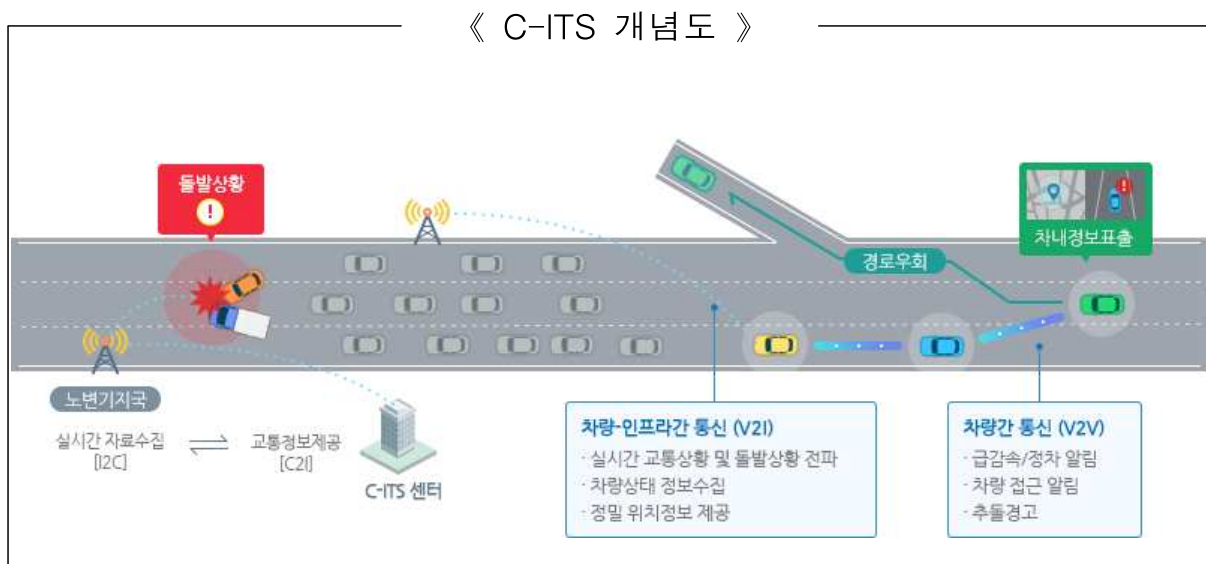
- 장애인·노인·아동 등을 포함한 모든 계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평등한 교통권 부여 및 교통 무장애 도시 구현
  - 노약자·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주택가 및 학교 주변도로는 교통정온화기법(Traffic Calming)을 통해 안전성 제고

《 교통정온화기법 예시도 》



## 다) 지능형교통체계 및 스마트물류시스템

- 교통편의 증진과 교통효율 극대화를 위하여 첨단 정보통신·제어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교통체계(C-ITS)를 구축
  - 실시간 교통정보 및 대중교통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 관리를 위한 첨단신호제어 및 돌발상황 관리체계 등 구축
  - 차량 간·도로-차량 간 정보를 공유하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 (C-ITS)을 확대 구축



자료: <https://www.c-its.kr/introduction/introduction.do>(c-its홍보관)

- 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 물류시스템을 구축하여 스마트 도시를 지향하며 수요에 따라 단계별로 물류시설 배치
  - 초기에는 도시 내 유통시설과 연계한 부속물류시설을 설치하고 향후 도시 외곽에 복합물류센터 설치하여 도시내부와 연계 시스템 구축
  - 유통지구 배치와 연계한 물류망 형성을 유도하며 복합물류센터는 외곽간선도로망에 인접 배치하여 도시물류 집배송시설과 연계

## 라) 미래모빌리티 도입

- 자율주행 차량의 보급 확대에 대비하여 관련 도로 인프라 구축
  - 자율주행차 시범지구 지정을 통한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 및 자율주행 도로인프라와 서비스 기반 조기 구축
- 도시의 3차원 공간을 활용하여 여객과 물류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친환경 첨단 교통 체계인 도심항공교통(UAM)을 도입
  - 주요 교통거점 지역에 수직이착륙장, 터미널 설치 및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거점도시 간 광역 연결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환승체계 구축

《 미래 모빌리티 시스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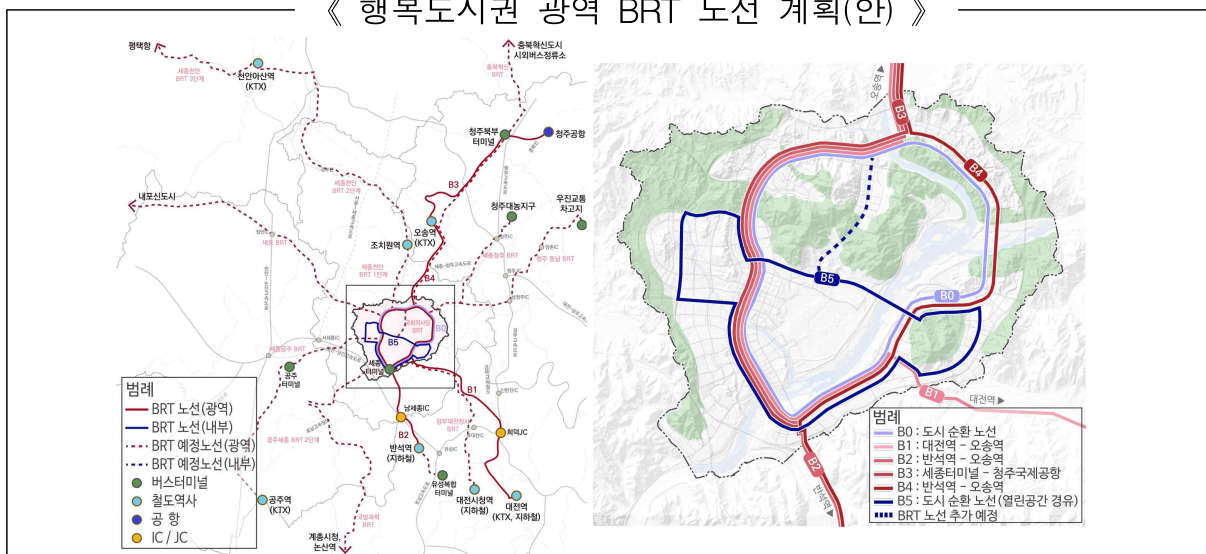
자료: tech.hyundaimotorgroup (좌)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 (우)도심형항공모빌리티



#### 4)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중심으로 반경 70km 범위 내 도시거점, 광역 거점 및 초광역거점을 연결하는 광역 대중교통망을 구축
- 반경 20km 범위의 도시거점과 40km 범위의 광역거점 연결 대중교통망을 '30년까지 구축하고, 반경 70km 범위의 초광역거점 연결 대중교통망을 '40년까지 구축

《 행복도시권 광역 BRT 노선 계획(안) 》



- 초기단계는 저용량의 대중교통수단을 도입하고 향후 통행량 및 인구유입 규모에 따라 고용량의 대중교통수단으로 전환
- 일반버스, BRT, 철도, 항공, PM 등 다양한 대중교통수단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연결되는 대중교통중심의 연계교통체계 구축
-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생활권별 환승주차장을 설치
- 도시 내 대중교통시설은 환상형 대중교통축을 중심으로 생활권별로 적정 정류장과 환승시설을 배치
- 대중교통축은 주요 거점기능 및 주변 토지이용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고 특색있게 구성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 5. 환경친화적인 탄소중립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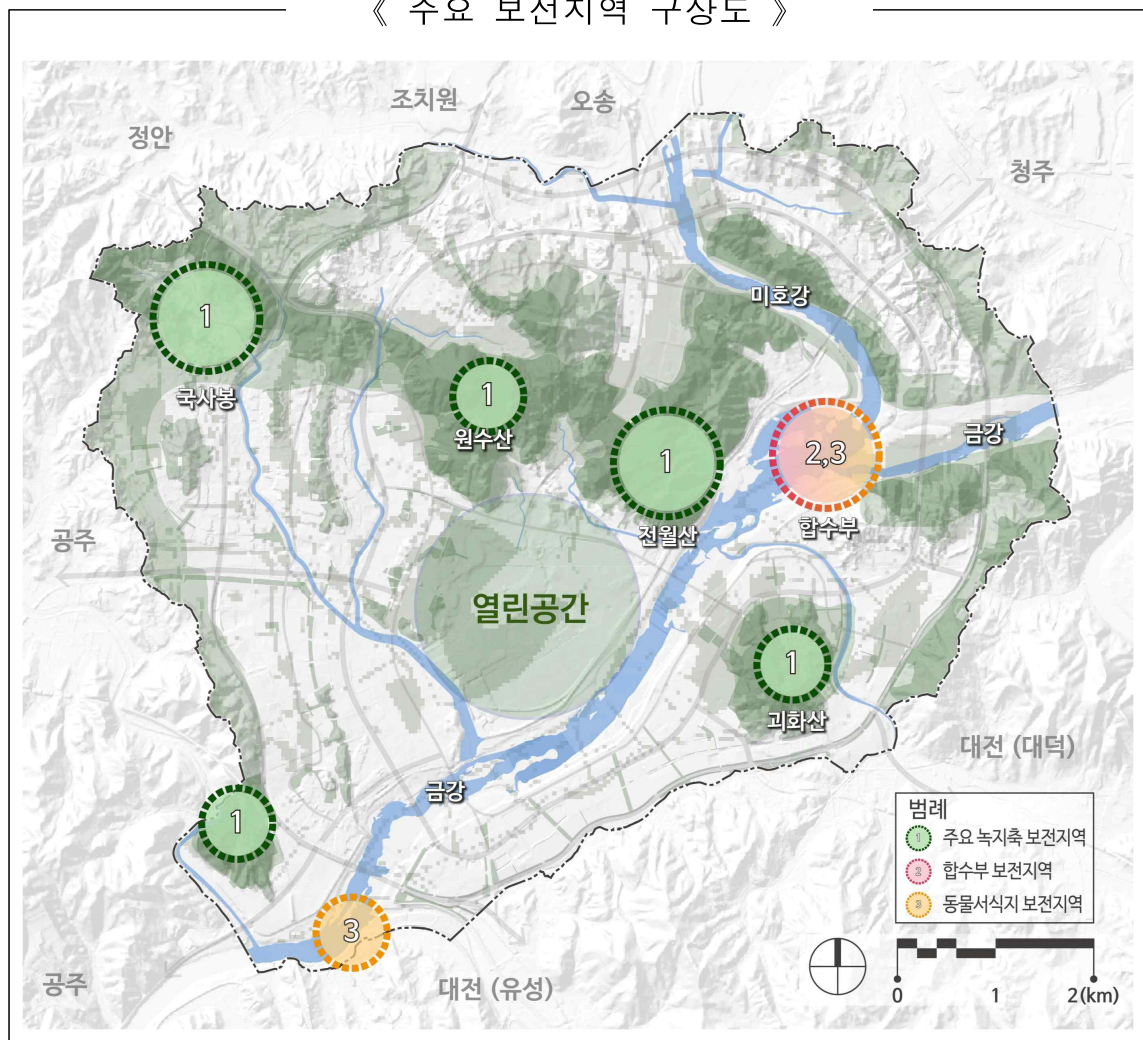
- ◇ 녹지축, 하천축을 연계한 생태네트워크 구축
- ◇ 자원순환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탄소중립도시 조성

### 1) 환경 보전지역 설정

- ☐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동·식물 등 환경·생태조사를 실시하여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전
  - 전문연구기관과 민간전문가·NGO 등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지에 대해 객관적인 환경·생태조사를 시행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녹지축 및 하천축 등 주요 보전지역을 설정하여 생태계 보전방안을 강구
- ☐ 환경·생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추진
  - 단위사업별 개발계획 수립 시 사전환경성 검토를 통해 환경목표 및 환경계획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토지이용계획에 반영
  -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의 장기화에 대비한 환경영향 저감방안 및 환경관리계획 등 수립
- ☐ 환경친화적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하여 환경생태계획의 기본방향을 계획에 반영
  - 백두대간 금북정맥에서 이어지는 녹지 흐름을 보전하고 원수산, 전월산 등 주요 산림을 연결하는 광역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

- 금강과 미호강이 만나는 합수부는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지로서 환경적으로 중요한 공간이므로 생태거점으로 조성
- 생태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원, 녹지 및 친수 공간 면적을 50% 이상 되도록 하여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개발
- 주요 동·식물이 서식하는 지역은 최대한 보전하면서 공원, 녹지, 친수공간 등 환경친화적 이용 유도
- 도시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 외부로부터 열린공간을 연결하고 도시 내 주요 녹지를 연계시킬 수 있는 바람통로 확보

《 주요 보전지역 구상도 》



## 2) 생태네트워크 구축

□ 환경·생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녹지축(Green Network)과 하천축(Blue Network)을 통합하는 생태네트워크를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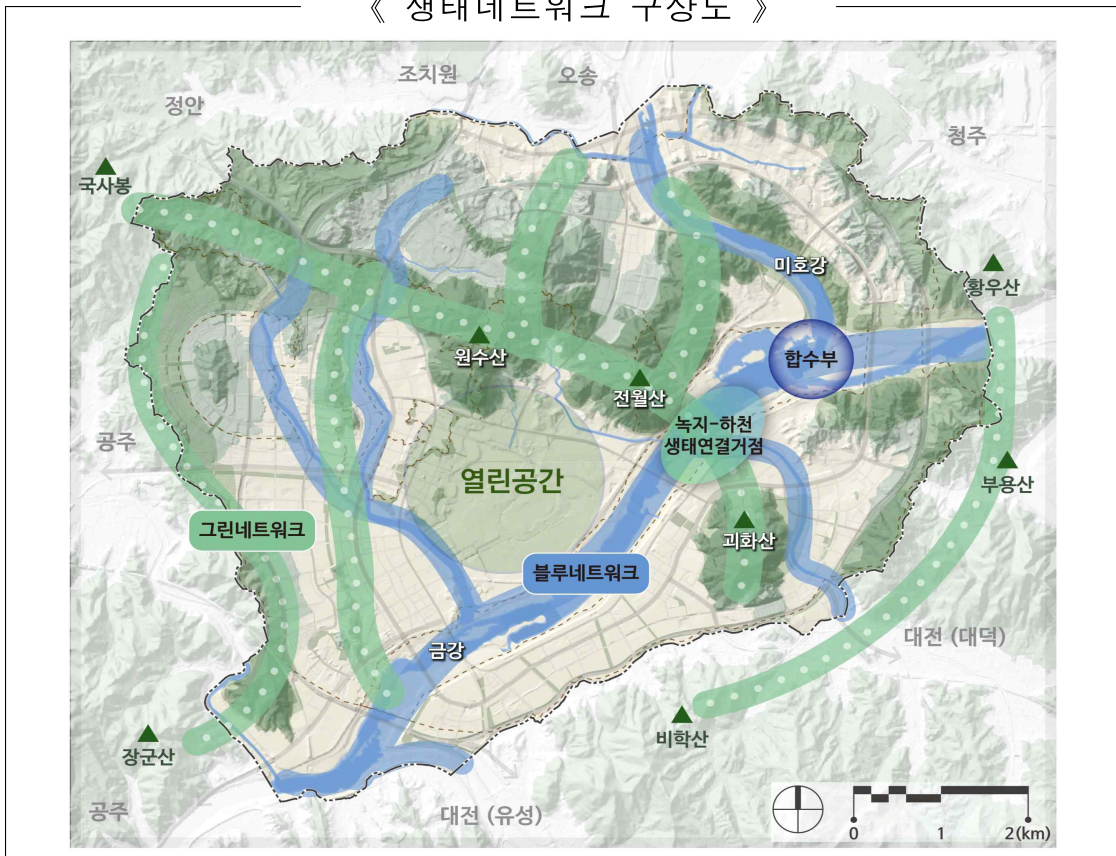
- 국사봉, 원수산, 전월산 등을 거점으로 하는 주녹지축과, 도시를 순환하는 부녹지축, 금강·미호강을 중심으로 하는 하천축을 연계

※ 주녹지축 : 국사봉 - 원수산 - 전월산

부녹지축 : 국사봉 - 장군봉, 황우산 - 부용산 - 비학산

- 생태네트워크(Blue-Green Network)를 통해 생태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주민에게 자연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생태네트워크에 도로 등의 시설이 설치될 경우 동·식물의 이동을 위한 생태통로 등을 조성하여 생태네트워크 단절 방지

《 생태네트워크 구상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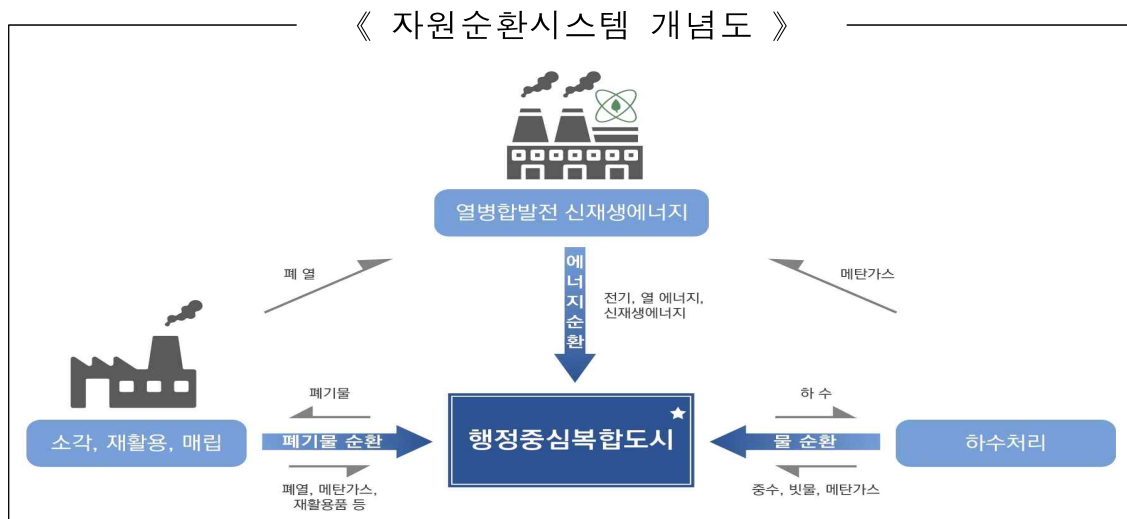


### 3) 환경순환 시스템 도입을 통한 탄소중립도시 건설

-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한 저탄소 청정에너지 순환체계 구축
  - 재생에너지·수소 기반의 도시 에너지 전환을 통해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수요를 저감하여 탄소중립도시 체계 구축
  - 제로 에너지건축물 도입을 장려하여 개별 건물 단위의 에너지 소비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추진
-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전기·수소차 등 미래형 친환경 교통수단 중심의 인프라 적극 확충
  - 탄소배출이 적은 친환경차(수소차·전기차) 전환을 확대하고 수소 또는 전기 등 충전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친환경차 보급 기반 강화
  - 대중교통 활성화 및 자전거, 보행, PM, 자율주행차 등 그린 모빌리티 통합서비스를 통해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
- 물, 에너지 및 폐기물에 대한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원 소비를 최소화하는 환경친화적인 도시 구축
  - 태양광, 지열 등 에너지 전환을 위한 공공건축 그린에너지 도입 및 인프라 공급 확대
  - 중수도를 도입하고 공공건물, 대형건물 등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여 오수·우수를 활용하는 물순환체계 구축
  - 도시 내 불투수면적을 줄이고 우수 침투시설 등을 설치하여 비점오염물질이 자연 정화될 수 있는 저영향개발(LID) 기반 마련

## □ 탄소배출 저감 및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IT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배출 모니터링과 이행 상황을 분석·평가하고, 에너지 데이터플랫폼을 통한 에너지 모니터링 및 절감 추진



## □ 탄소중립·기후위기 공동대응을 위해 행복도시와 주변 지자체 간 공감대 형성 및 대응전략 마련

-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등 지자체별 대응이 어려운 환경 이슈에 대해 행복도시권 광역 거버넌스 구축으로 공동 대응 방안 모색
-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 등의 현황분석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광역적 협력 사항 및 정책사업 공동 발굴
-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자발적 에너지 절감을 실천하고, 탄소중립 대응 및 실천 노력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한 광역적 협업 추진
-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유도하고 주민참여형 탄소중립 협의기구 구성 및 운영



## 6. 미래지향적인 스마트시티 계획

- ◇ 데이터 융합 및 연계를 통한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현
- ◇ 민·관 협력적 리빙랩 조성을 통한 개방형 시스템 도입
- ◇ 시민 체감도 높은 정보통신 기반 스마트시티 솔루션 제공
- ◇ 제4차 산업혁명을 지원할 수 있는 혁신생태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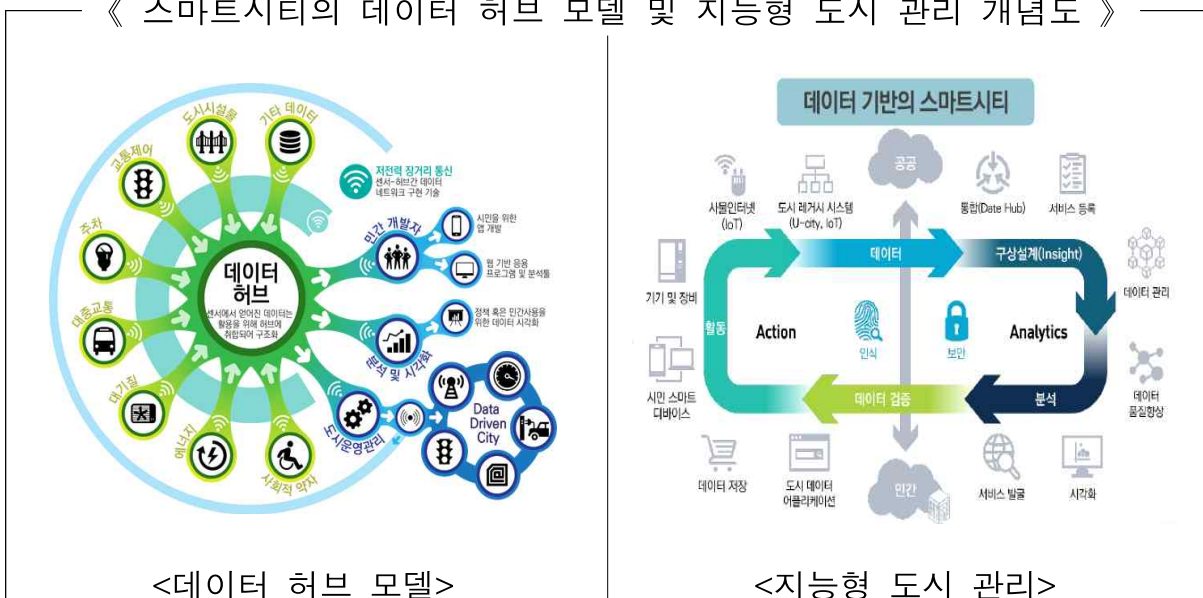
□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 다양한 도시 데이터를 융합하고 연계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플랫폼 추진

- 부문별로 분산되고 단절된 데이터를 융합·연계함으로써 도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서비스 제공 확대

※ 스마트시티는 도시 경쟁력, 삶의 질, 지속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도시 공간의 효율성·효과성을 높이는 방식

- 행정·교통·복지·환경·방재 등 도시의 주요기능별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 《 스마트시티의 데이터 허브 모델 및 지능형 도시 관리 개념도 》



자료 : 도시혁신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2018. p.9

- 시민이 정책생산 및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리빙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방형 운영체계 및 오픈 플랫폼 구축
  - 도시 데이터를 개방형 운영체계(Open API)로 구축하여 창의적 수요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회를 제공
  - 지역 문제를 다양한 집단(거주자, 방문자, 연구기관, 민간기업, 공공조직 등)이 참여하여 논의할 수 있도록 개방형 작업공간(Open Platform) 구축
- 행정·교통·에너지·물 관리·복지·환경·방범·방재 등 도시 전 분야에 대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보통신 기반 스마트시티 솔루션 제공
  - 빠른 정보통신 부문의 발달을 반영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효과적인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시티 서비스 제공
  -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시민수요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창출
-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융복합 신기술 적용 및 신산업 육성
  - 신기술 혁신 및 상용화 실험의 촉진을 위해 도시 내 특정 공간을 ‘혁신성장 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신기술 테스트베드를 조성
    - ※ 혁신성장 진흥구역이란, 스마트서비스 및 기술을 활용하여 4차 산업혁명 관련 창업을 지원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구역
  - 테스트베드를 통해 스마트시티 관련 혁신기술·서비스 실증 및 도시 전체로 확산하고, 스마트시티 관련 기업 육성

## 7. 교육·문화·복지 인프라 구축

### 1) 다양하고 질 높은 선진 교육환경 조성

- ◇ 미래를 열어가는 인재 양성을 위한 창의융합 교육환경 조성
- ◇ 특성화 교육, 평생교육 등을 통한 정주성·자족성 강화

- 공교육 중심의 교육서비스 제공 및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미래형(U-Learning 기반) 학습체제를 통해 교육 만족도 제고
  - 개인의 특기·적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방과 후 교육활동 등을 활성화하는 방안 마련
  - 학교 간, 학교와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지역사회시설 간 네트워크의 구축 및 정보공유로 ‘지능정보화 교육도시’를 구축
- 여유있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학급당 학생 수, 기초생활권당 적정 학교 수 및 도시 차원의 특수학교 등을 계획
- 우수한 인적자원을 양성·개발하고 시민들의 정주성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평생학습체계 구축
  - 대학과 연구기관이 시설을 공동 이용하고 융합교육 및 연구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공동캠퍼스 조성
  - 산·학·연·관이 연계된 형태의 전문대학원 등을 설치하여 행정·연구기능 종사자의 연수를 지원하고 인적자원을 양성
  - 유년에서 노년에 이르는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고, 교육시설과의 연계 및 복합화를 통해 학생 및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



## 2) 품격높고 풍요로운 문화인프라 구축

- ◇ 다양한 문화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열린 문화환경 구축
- ◇ 전통과 현재가 공존하는 문화기반 조성
- ◇ 문화인프라간 네트워크 조성 및 관광자원화로 이미지 제고

- 커뮤니티 생활 중심의 문화·체육 활동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다목적 커뮤니티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을 배치
  - 기초생활권별로 주민복합문화시설, 실내·외 체육시설 등 주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생활권 중심에 배치
  - 생활 속에서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건강관리실, 체육센터 등의 주민친화형 체육시설을 설치
- 지역 및 도시생활권에는 미술관·박물관, 전문공연시설, 중앙도서관 등을 조성하여 다양한 형태의 문화 활동을 수용
  - 각종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생산·지원하며 지식정보센터 역할을 담당하는 중앙도서관(첨단미디어테크)을 건립
    - ※ 미디어테크(Mediatheque)는 도서관·서점·갤러리·멀티미디어·창작스튜디오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되어 문화도시 이미지를 제고
  - 시민들에게 질 높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도시로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전문공연시설을 건립
  - 주요 상업·업무지역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여 예술인 등의 창작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
-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체육활동 공간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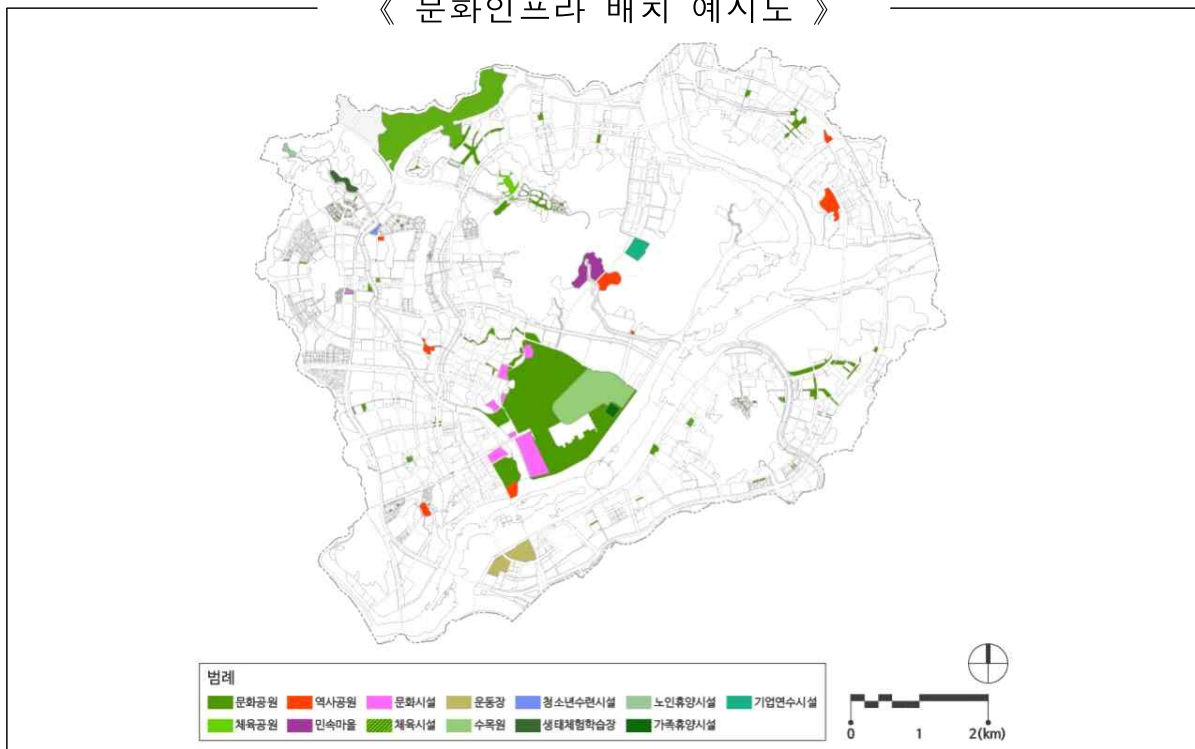
- 국제경기대회 및 종합체육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종합체육 시설(Complex) 등을 건립
  - 운동장, 체육공원 등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스포츠클럽, 동호회 활동 및 생활체육 활성화
- 행정과 함께 문화가 균형있게 성장하고, 전통과 현재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박물관단지 등 문화인프라 구축
- ※ 박물관단지 내 시설: 국가기록박물관, 디자인박물관, 도시건축박물관, 디지털문화유산센터, 어린이박물관, 통합수장고, 통합운영센터 등
- 우리나라 국정 역사, 도시성장, 디자인, 문화유산 등 다양한 주제와 전시콘텐츠로 구성되는 박물관단지를 조성하여 세계적 명소화
  -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전통과 현재가 조화를 이루는 역사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역사를 계승·발전시켜 도시 정체성을 확보
  - 도시 자연생태 및 역사문화에 기반을 둔 공공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 도시의 녹지와 하천, 건축물의 공간을 연계하여 열린 문화교육과 주민 향유의 공간으로 만들어 개성 있고 다채로운 도시문화 연출
    - 도시의 가로, 공공청사 등을 친환경적이며 예술적으로 디자인하여 시민뿐만 아니라 방문객이 걷고 싶은 도시,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건설

《 박물관단지 조성 조감도 및 국립 어린이박물관 》



- 도시의 특성을 살린 문화인프라 간을 연계한 네트워크 조성 및 관광자원화로 이미지 제고
  - 시민들의 문화활동 참여로 독특한 장소성을 창출하고 문화시설 간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화정보 서비스체계를 구축
    - 도시 내 시민들의 문화활동·모임 및 정보교류의 장소로서 주요광장, 공공건물 저층부 등을 활용하여 생동감 넘치는 도시문화 창출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연환경과 문화시설 등을 연계한 다양한 관광루트를 개발하는 등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관광환경을 조성
    - 도시 내 공원·녹지, 주변 자연환경, 주요 상업·업무지역 및 열린공간 주변 등을 연결하여 관광 자원화하고 문화시설과 연계
    - 컨벤션센터·호텔 등 교류기능과 연계하여 국제회의와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국제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

《 문화인프라 배치 예시도 》



□ 행복도시권 내 도시 특성을 대표하는 관광 자원·산업·인프라를 연계하는 행복도시권 통합 관광 체계 구축

- 행복도시권 내 컨벤션센터의 운영, 기능, 역할 등을 분담하고 MICE 산업을 공동 육성하여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

### 3) 건강한 삶을 제공하는 복지인프라 구축

- ◇ 모든 시민이 건강하게 생활하는 건강도시 환경 조성
- ◇ 다양한 계층이 함께 모여 살기 좋은 도시 구현
- ◇ 안전하고 편리한 장벽 없는 도시환경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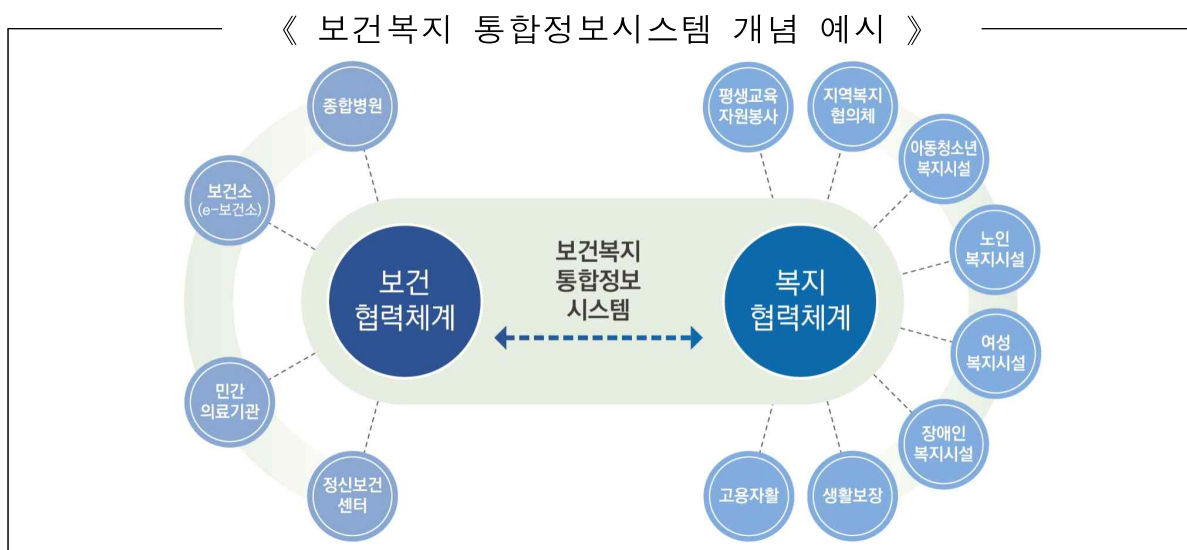
□ 모든 시민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건강환경 조성,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및 생활권 단위 운동공간을 체계적으로 조성

- 수준 높은 의료기관 유치, 생활권 중심으로 공공의료 기관을 설치하여 취약계층의 의료시설 접근성 강화
- 테마거리 및 공원·광장 등을 열린공간과 연계하고 건강한 신체를 단련할 수 있도록 생활권 단위 운동공간을 체계적으로 조성

#### 《 WHO에서 정의하는 건강도시의 조건》

1. 깨끗하고 안전하며, 질 높은 도시의 물리적 환경
2. 안정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생태계
3. 계층 간 부문 간 강한 상호지원 체계와 착취하지 않는 지역사회
4. 개개인의 삶, 건강 및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한 시민의 높은 참여와 통제
5. 모든 시민을 위한 기본적 요구 충족
6. 시민들 간 다양한 만남,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와 자원에 대한 접근성
7. 다양하고 활기 넘치며, 혁신적인 도시 경제
8. 역사, 문화 및 생물학적 유산 혹은 지역사회 내 모임들과 개인과의 연계를 도모
9. 모든 시민에 대한 적절한 공중보건 및 치료서비스의 최적화
10. 높은 수준의 건강과 낮은 수준의 질병 발생
11. 이상의 요건들이 서로 양립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 이 요소들을 증진시키는 도시 행태

- 보건·복지 서비스가 한 곳에서 해결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양한 계층이 함께 모여 살기 좋은 복지도시 구현
  - 여성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양질의 보육·육아지원시설을 구축하고 노부모를 부양할 수 있는 요양보호시설 등 구축
  - 아동·여성·장애인 인권을 보호하는 원스톱 보호·지원시설을 구축하고 장애인이 더불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
  - 보건·복지 서비스를 통합한 종합복지센터를 설치하고 문화·교육시설 등 관련 시설과도 연계
  - 보건복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보건 복지정보와 서비스 연결



- 모든 시민이 물리적인 장애 없이 원하는 곳은 어디든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무장애 도시(Barrier-Free City) 건설을 지향
  - 장애인·노인·아동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확보

- 누구나 안심하고 이동이 가능하도록 보도턱 없는 거리 조성 등 교통약자 중심의 보행환경 정비
-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시설 및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단계부터 고려
- 교통약자를 위한 도시환경 조성 원칙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설계기준(Universal Design)을 마련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벽 없는 도시 구축 및 제도화 방안’ 마련 연구에 수요자인 장애인단체 등이 도시설계과정에 직접 참여
- ‘장벽 없는 도시’에 대한 개념을 교통약자의 보행 및 이동권을 보장하는 물리적 수준에서 심리적 수준까지 확장
  - 물리적 장애뿐만 아니라 공해·소음·비인간성·계층 분리 등 사회문화적·심리적 요소까지 시정
  - 도시의 행정, 알림 시스템 등 서비스 부분 또한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제공

《 무장애도시 세종시 이미지 》



자료 :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https://korean.visitkore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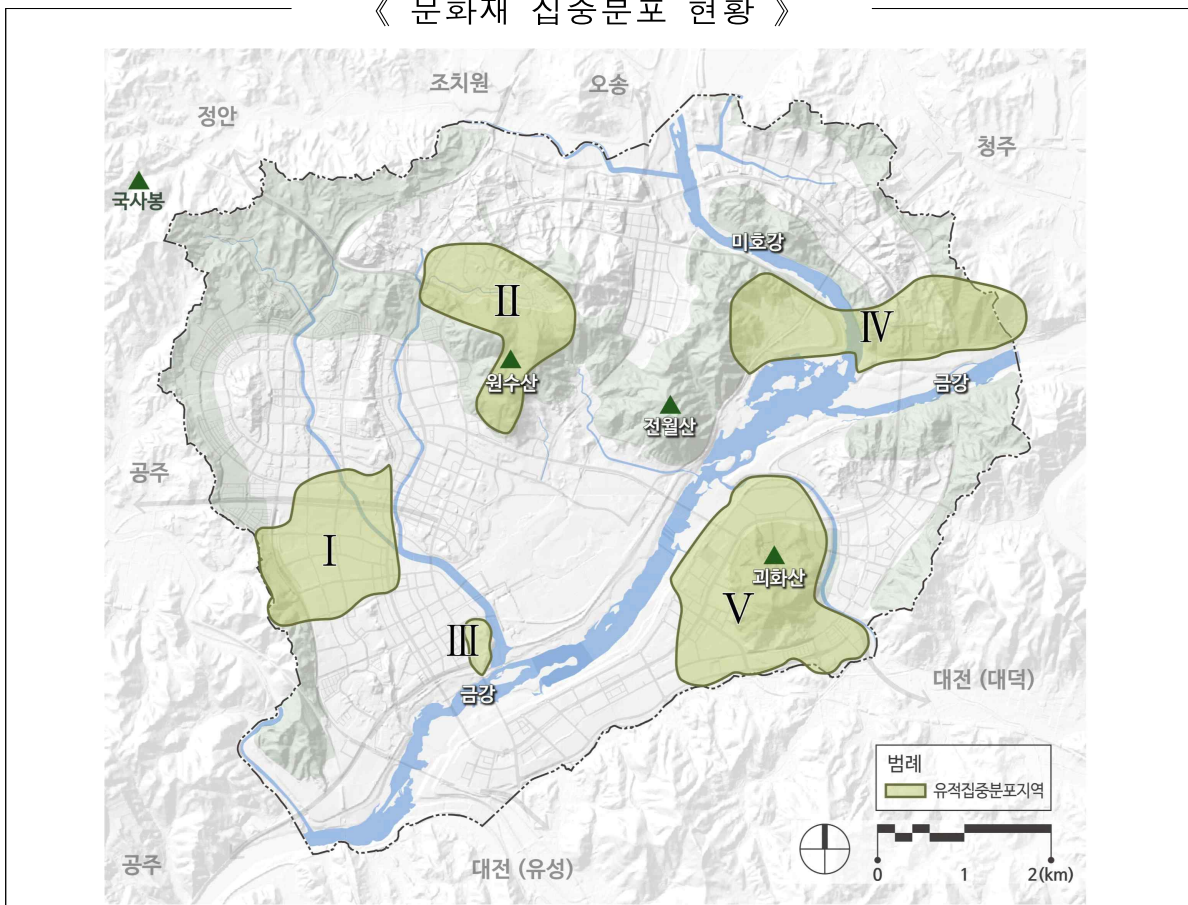
## 4) 전통 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

◇ 문화유산을 최대한 보존하여 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이 어우러진  
역사·문화 도시를 건설

□ 지표조사 및 시·발굴 조사를 실시하여 매장·지상문화재, 역사자료  
등에 대한 보존 및 활용방안 마련

- 지표조사를 시행하여 유적·유물 분포 현황을 파악하고 유적  
분포가 예상되는 지역은 시·발굴조사를 실시
- 조사 결과를 통해 발굴된 문화유산은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공원이나 녹지 등으로 이전하여 관리

《 문화재 집중분포 현황 》



※ 지표조사 결과 5개 구역에서 유적이 집중 분포



《 구역별 주요시대 구분 》

구 역	주요 시대
I 구역(당암리, 제천리)	구석기~조선 시대
II 구역(갈우리 일대)	청동기~조선 시대
III 구역(나성리 일대)	원삼국, 조선 시대
IV 구역(월산리, 합강리)	청동기, 원삼국, 고려, 조선 시대
V 구역(반곡리, 석삼리, 장재리, 석교리 일대)	청동기~조선 시대

□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기존 주민의 인류민속 유산을 조사하여 기록 및 자료화

- 세시풍속·일상의례·신앙·지명 등 기존 주민의 생활사 등을 조사하여 인류·민속자료로 기록
-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경우 현상 보존 또는 이전·관리하고 그 외 문화유산은 영상물 등으로 자료화

□ 수집된 고고역사·인류민속 자료를 보호·보존·전시하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시설 및 테마공간 조성

- 모형·사진·영상으로 제작하여 전시할 자원, 박물관 또는 역사공원으로 이전할 자원 등으로 구분하여 활용
- 지상문화재, 유적, 전통 건축물 등은 원형보존을 위해 역사공원으로 지정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시민의 역사체험 공간으로 조성
- 고고역사, 민속자료를 보존·전시·연구할 수 있는 향토유물 박물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고

## 8. 경제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시설 조성

- ◇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을 통한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 건설
- ◇ 기반시설의 계획적 설치·운영을 통한 도시의 효율적 관리 도모

### 1) 공급처리시설

#### □ 상수도

- 단계적 도시발전을 대비하여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되 중수·우수시설 등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수 공급량 절감 유도
- '30년 행정중심복합도시의 1일 소요 용수량은 330L/인·일로 추정되며 안정적 상수 공급을 위한 용수 수급 계획을 수립
- ※ 2020년 현재 전국 평균 1일 1인당 급수량은 345L이며, 2000년대 이후 누수율 감소 등으로 1일 1인당 급수량은 줄어드는 추세임을 감안 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원 단위를 적용하여 330L/인·일로 계획

《 전국 1인 1일 상수도 급수현황 》

연 도(년)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급수량(L)	380	351	333	335	339	341	348	347	345

주) 상수도 통계(환경부, 2022) 지방, 광역상수도 이용 급수인구 및 보급률을 반영한 수치

《 계획지표 》

구 분	2015년	2020년	2030년
계획인구(인)	150,000	300,000	500,000
급수보급률(%)	100.0	100.0	100.0
일 평균 급수량	330L/인·일		

- 상수 공급은 공급의 안정성, 공급단가, 설치비용(재원부담) 등을 감안하여 결정
  - 배수시설은 소규모 분산 배치를 원칙으로 함

## □ 하수 처리 및 중수·우수 활용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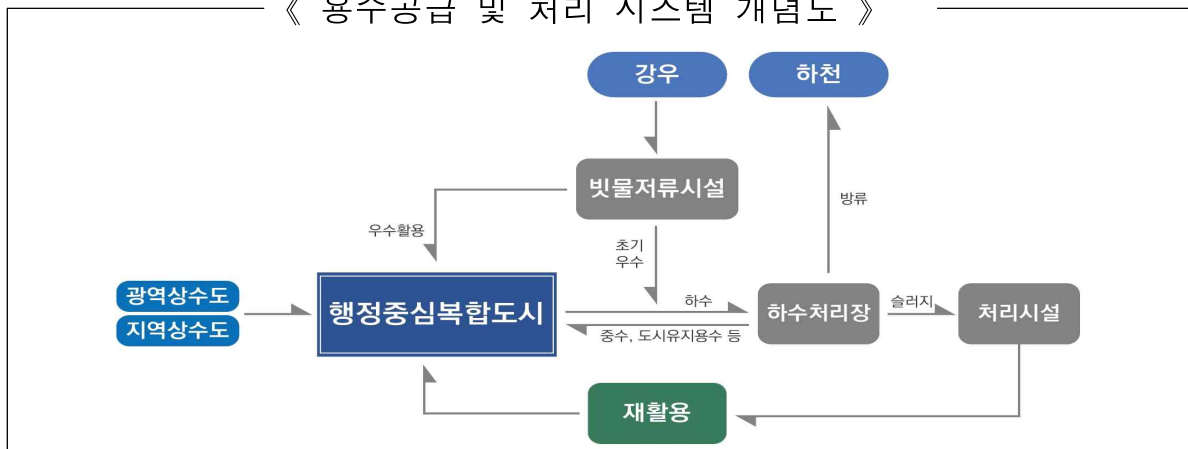
-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하수처리 시설을 구축함과 동시에 중수 및 우수를 활용하기 위한 물순환 시스템 조성
- '30년 행정중심복합도시 목표인구를 고려할 경우 약 19~22만톤/일 규모의 하수처리장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
- 하수처리장은 도시의 단계적 개발 및 하수처리구역을 고려하여 분산식으로 배치

### 《 하수처리시설 배치방향 》

구 분		배 치 방 향
하수 처리	하수종말 처리장	하수처리구역 당 1기씩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처리이용 배관거리, 경제성, 자연 지형 등을 고려하여 규모 및 배치방안 결정
	슬러지 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하여 입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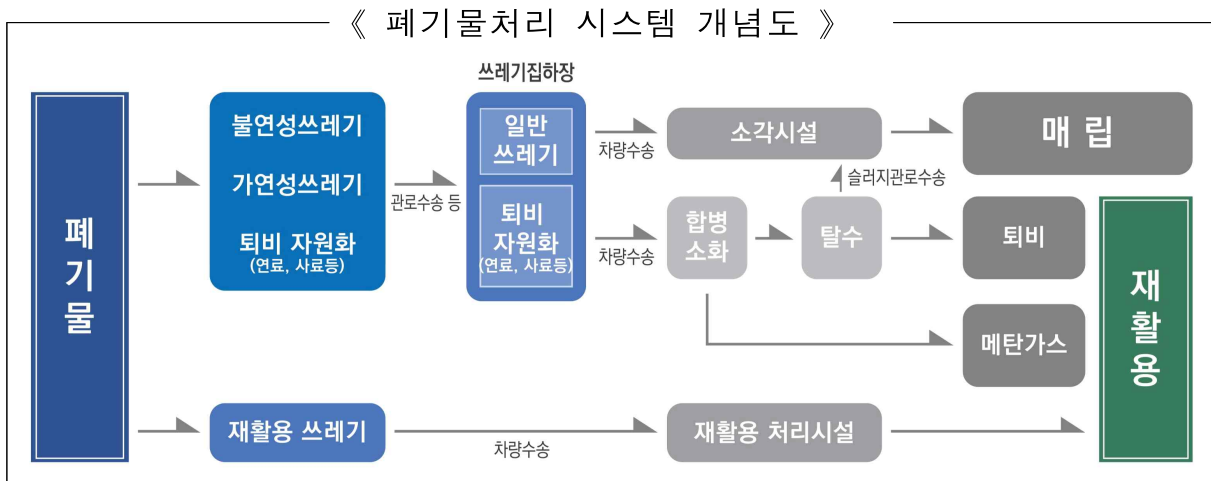
- 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수는 재이용하여 공공건물, 대형건물 등 장내 용수의 중수와 도시 내 공원, 수목원, 하천용수 등 도시유지용수로 활용
- 우수는 하수관 유입을 억제하고 공공건물, 대형건물 등에 빗물 저류시설을 설치하여 하천유지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활용

### 《 용수공급 및 처리 시스템 개념도 》



## □ 폐기물 처리시설

- 폐기물을 최소화·자원화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자원 순환형 폐기물 종합관리체계 구축
  -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재활용하고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하여 에너지 회수, 나머지 불연성 폐기물은 매립
  - 음식물쓰레기는 하수슬러지와 합병소화 등의 방법으로 재생 에너지를 생산한 후 소각 또는 퇴비화
-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는 주변지역의 환경, 처리시설의 연계성, 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폐기물처리시설별 배치방향 》

구 분		배 치 방 향
폐기물 처리	재활용 처리시설	운반거리, 처리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배치
	재활용 수거센터	주민들이 쉽게 재활용품을 반납하거나 수거할 수 있도록 주거지역에 입지
	소각장	열병합발전소,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처리장과 인접하여 입지
	쓰레기집하장	가급적 지하에 설치

## □ 에너지관리 및 공급시설

- 에너지 공급의 효율성과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에너지 수요 관리 시스템을 구축
  - 도시 내 소비되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계절별로 편차가 심한 부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에너지 수요관리 필요
  - 전력 수요관리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의 도입 확대를 통해 화석에너지의 소비를 줄이는 적극적인 방안도 모색
  - 에너지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에너지 효율이 높은 기자재 도입을 권장하고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등을 마련
- 전력, 난방 등 에너지 공급 시 청정에너지(LNG 등), 자연에너지(태양광 등) 등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
- 지역난방시설 등 집단에너지 공급방식을 도입하고 열병합발전소를 설치하여 에너지 효율을 제고
  - 열병합발전소는 2~3개소에 분산 배치하며 각 시설의 규모는 단계별 개발계획에 따라 열 수요량을 바탕으로 규모를 결정

### 《 기반시설 복합화 》

- 환경 및 에너지 기반시설에서 발생하는 물, 열, 폐기물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능을 통합·연계·집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하수종말처리장, 열병합발전소, 소각시설 등을 복합화하여 운영효율을 개선하고 토지이용을 합리화

## 2) 지하매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동구 설치

- 공동구를 설치하여 각종 도시기반시설을 수용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도시경관 향상을 도모
  - 각종 지하매설물을 공동으로 수용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도시발전에 따른 수요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
    - ※ 공동구 내 설치할 시설은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 용이성 등 개별 시설의 성격을 고려하여 결정
  - 건설단계에서 공동구를 미리 설치하여 도로굴착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경감하고 각종 케이블을 지중화하여 전선 없는 도시를 지향
- 공동구는 도시 전체에 서비스를 균형있게 공급할 수 있도록 환상형 대중교통축을 따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정
  - 대중교통축이 아닌 곳은 시설망의 중복이 많은 지역 등을 대상으로 경제성 및 지형 등을 감안하여 설치

《 공동구 설치 개념도 》



## 9. 안전한 도시를 위한 방호 및 방재계획

- ◇ 주요 국가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할 방호체계 구축
- ◇ 다양한 재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
- ◇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

### 1) 주요 국가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할 방호체계 구축

- 외부 위협으로부터 도시의 주요시설물을 보호하여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도시로 건설
  - 전시·테러 등에 대비하여 주요시설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연적 요건뿐만 아니라 도시공간구조 등을 고려한 방호체계를 구축
  - 유사시 전기, 가스, 통신, 용수, 의료 등 주요 기반시설은 복수 또는 대체 공급시스템을 구축하여 기능의 안정성 제고
- 긴급사태 발생 시 국가 주요기능과 도시기능이 유지되도록 방호 개념이 도입된 청사와 시민대피시설을 구축하여 피해 최소화
  -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정부청사 및 공공기관 건축물은 안전설계기준을 상향·강화하여 적용하되 도시미관과 조화를 고려
  - 모니터링센터 및 지휘통제센터를 포괄하는 통합방호관리체계 구축 및 운용을 통해 효율적, 체계적인 종합 방호업무 실현
  - 사이버테러, 드론 공격 등 다변화된 위협 속성 및 급속한 환경 변화에 대응 가능한 차세대 방호체계 구축
  - 유사시 시민 안전을 위하여 대피시설을 배치하고 공공건물, 대형 민간건물 및 기반시설 건설 시 방호요소를 사전에 반영



## 2) 다양한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

□ 풍수해에 대비하여 주요 하천의 정비기준을 강화하고 하천, 저류지 등 수방시설을 종합 연계하는 광역치수계획을 수립

- 금강과 미호강의 계획홍수량을 200년 빈도로 상향조정하고, 지형 등 여건에 따라 자연형 환경사 제방을 설치

※ 하천 설계기준에 따르면 국가하천은 100~200년 빈도, 국가하천의 주요 구간인 경우 200년 빈도 이상으로 설정

- 국토교통부의 ‘하천 설계기준’과 행정안전부의 ‘소하천 설계기준’에 근거하여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방안을 마련

- 대지조성은 원칙적으로 내수가 자연적으로 배제되도록 하며 건축물 설계 시 홍수위 고려

※ 하수도와 하천의 연계를 고려하여 하수도 계획빈도 상향조정을 검토

- 기후변화 등에 의해 계획규모를 초과하는 풍수해에 대비하여 저영향 개발기법(Low Impact Development)등 비구조물적 홍수대책을 검토·추진

- 공원·녹지,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 및 민간시설에 우수 침투 및 저류시설 등 우수유출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녹지 및 하천과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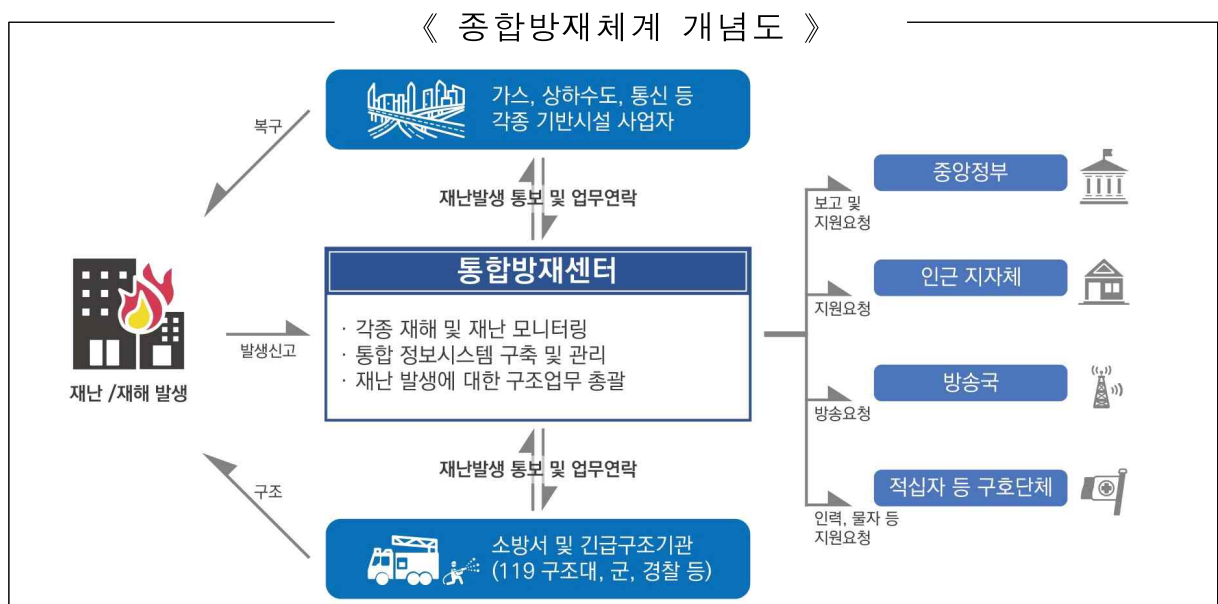
- 대규모 저류·배수시설 설치 시 지상부 토지이용과 교통처리를 고려하여 가급적 다목적 활용과 연계성을 확보

□ 기후변화에 따라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감염병에 대한 위기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시공간구조 개선 및 기반시설 고도화

- 기반시설(공공건축물) 건립 시 감염병 위기 대응력을 제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시

※ 공공건축물 감염병 예방 특화설계 가이드라인(2021) 마련

- 지진 및 화재 등 기타 각종 재해·재난에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시를 계획·설계
  - 건축물, 지하공간 등 건설 시 방재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고 생활권별로 오픈스페이스, 학교 등 방재거점을 지정
  - 토지이용계획 시 간선도로, 공원·녹지, 하천 등의 오픈스페이스를 적절히 배치하여 지진·화재 등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
  - 재난유형별로 표준화된 방재지침을 마련하여 정부청사와 다중이용시설물, 공공시설물 건설계획 등에 반영
-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를 위해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재관리체계 구축
  - 사고·화재·오염 등 모든 재해·재난에 대하여 방재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통합방재센터를 설치
  - 각종 재해에 대한 예·경보, 자료 수집 및 관리, 재해·재난 모니터링 등을 종합하는 첨단 방재정보시스템을 구축



### 3)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

- 도시구상 단계부터 범죄가 예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설계기법을 적용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조성
  - 도시공간 조성 및 건축물 건축 시 야간활동을 고려하고 사람이 활동하지 않는 공간이 조성되지 않도록 설계·건축지침 마련
  - 통행으로부터 고립된 지역 또는 시야가 제한된 사각지대 등은 가능한 한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고려
-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용도의 복합화 등을 통해 공동화를 방지하고 주민활동을 증진시켜 시민의 자연감시를 강화
  - 야외쉼터, 놀이시설 등 사람들이 야외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시설들을 적절히 배치하여 범죄유발 저감
  - 생활권 조성 시 커뮤니티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여 주민 스스로 범죄를 감시·예방할 수 있는 설계 방안 마련

#### 《 범죄예방설계기법 사례 》

(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주거단지나 공공시설이 자연적 감시효과·접근통제·영역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 발생을 예방하는 도시설계기법
  - 도로의 시야선을 확보하고 볼록거울, CCTV, 비상벨 등을 설치
  - 보행도로에 조명을 설치하는 등 야간조명시설 확충
  - 시야가 닿지 않거나 구조를 요청할 수 없는 사각지대 발생 억제
  - 커뮤니티 조성을 촉진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 VI

## 사업추진방안

---

1. 사업추진체계
2. 단계적 개발방안
3. 건설비용 및 재원조달방안
4. 주민지원 대책 및 상생도시 실현 방안



## 1. 사업추진체계

### 1) 사업추진기관의 역할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사업시행자’ 등 각 기관 간에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하에 설치
    - 예정지역 등의 지정,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개발계획, 실시계획 및 특별회계의 관리·운용 등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
  - 국토교통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기초가 될 건설기본계획의 승인,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등 중요 업무를 주관
    - 예정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 「행복도시법」에 근거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설치 및 운영
    - 건설사업 총괄·조정, 행복도시 건설 특별회계 관리·운영,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 승인, 공공청사·광역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시행 및 총괄·조정,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투자 유치 등 중요 업무 담당
  - 사업시행자는 기본설계 등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토지 수용 및 보상, 부지조성, 기반시설 설치 등 건설사업의 시행을 담당
- ※ 정부투자기관 중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05.5.24.)



-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해제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권한을 갖고 도시기반시설을 관리 및 운영
  - 건설되는 각종 기반시설의 시민 이용 편의성 및 운영·관리 효율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성되도록 참여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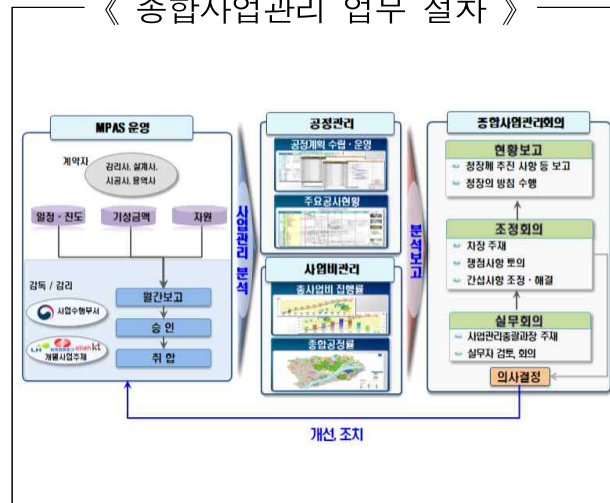
## 2) 체계적인 사업관리방안

- 행복도시건설 사업은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고 다양한 개별 사업주체가 참여하여, 다수의 프로젝트(Multi-Projects)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적인 도시건설 사업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종합사업관리(PM: Program Management)를 구축·운영
  - 다양한 사업주체들의 활동을 관리하고 수많은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건설정보를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총괄·관리
- 행복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종합사업관리는 표준화되고 통일된 절차와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회의체를 구성 및 운영
  - 행복청과 사업시행자(LH), 각 계약자들의 연관된 사업관리 업무 절차와 공종 등의 분류체계 표준화
  - 사업주체의 사업계획, 발주, 추진현황 등의 정보를 취합 및 분석
  - 다양한 사업주체간의 역할 중복·누락·간섭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기적인 단계별 종합사업관리 회의체 운영

《 종합사업관리 체계 구성 요소 》



《 종합사업관리 업무 절차 》



- 행복청 주관 및 사업시행자의 지원으로 행복도시건설 사업에 대한 일정, 사업비, 계약 및 자원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인 종합사업관리시스템(MPAS\*)을 구축·운영

\* MPAS :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Program Administration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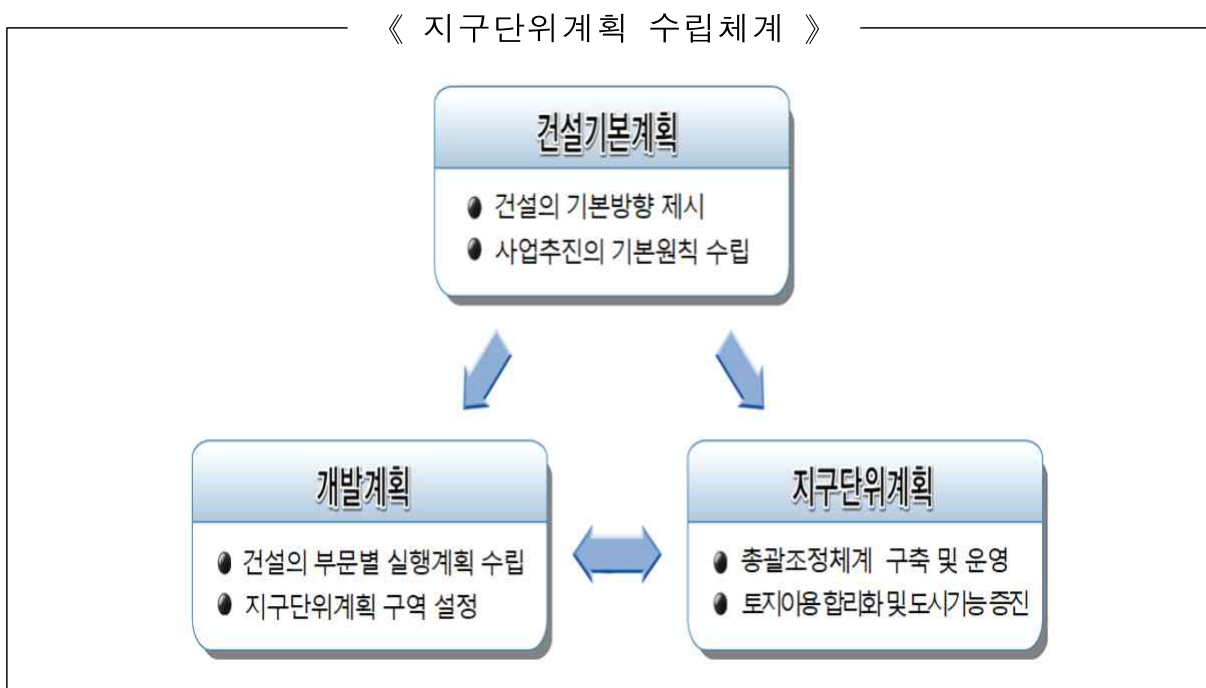
- 다양한 개별사업주체 참여로 인한 정보공유 도구의 필요성과 복잡한 대규모 도시건설에 철저한 사업관리의 요구 및 정부 조직의 업무 효율성 등을 위해 MPAS 구축
- 사업추진현황을 그래프 및 지도기반으로 시각화하여 사용자가 쉽게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

《 종합사업관리시스템 구성 》



### 3)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체계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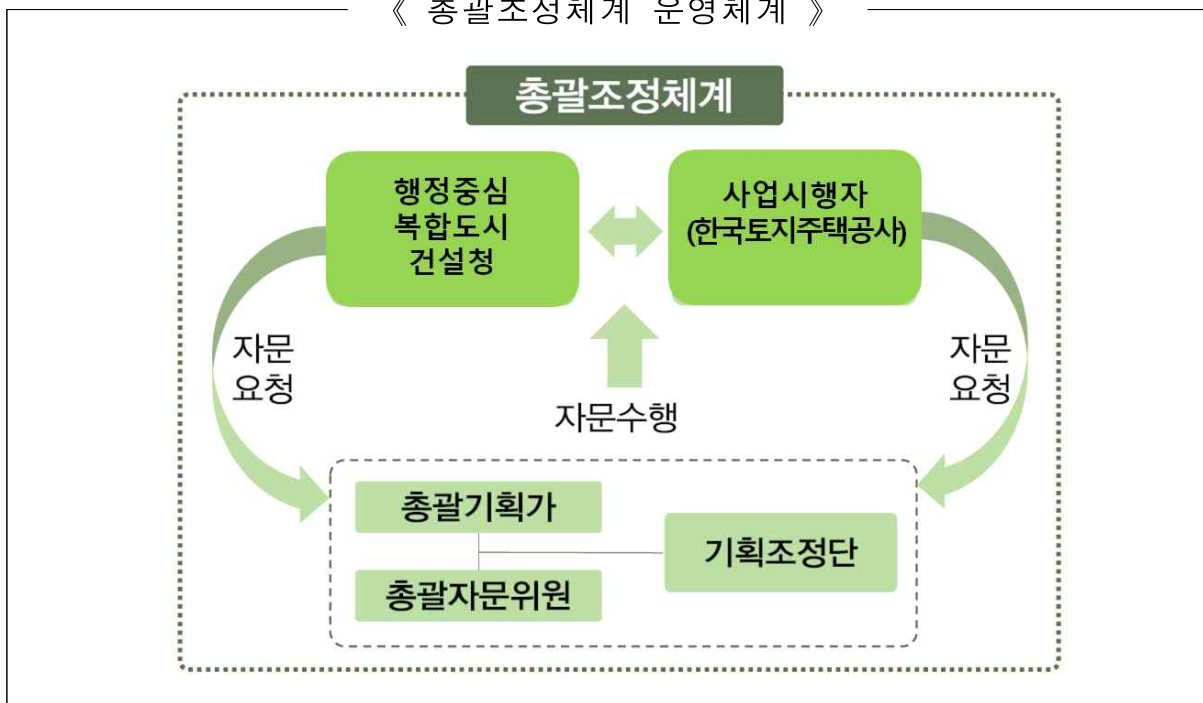
-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내용을 반영한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기능·미관 증진 및 양호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 도시 전체차원에서의 경관, 밀도, 스카이라인 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활권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 계획간 일관성을 유지하고 도시 전체의 조화로운 계획 수립·조정을 위해 총괄조정체계를 구성('07.1.)
  - 도시 전체를 조화롭게 계획·개발하고 기본계획, 개발계획,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등과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는 총괄조정체계를 운영
  - 민간전문가인 총괄 기획자(Planning Commissioner)를 중심으로 민간전문가 집단인 총괄자문단과 실무협의회로 구성

- 최종 도시완성 시기까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총괄조정체계의 유지를 통한 사업관리 효율성 제고
  - 장기간 대규모로 신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건축물, 도로, 공원·녹지 등 물리적 공간의 상호연계성 유지는 중요한 사항으로 총괄조정체계를 활용한 객관적·효율적 정책결정 지원
  - 도시완성까지 계획 및 설계 프로세스의 체계적 관리와 일관성 유지, 조화로운 공간환경 조성, 통합디자인 실현
  - 시민, 공기업, 정부, 행복청과 같은 개발주체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건축, 조경, 교통, 환경 등 전문분야별 이견을 조정하거나 통합적으로 관리할 주체로서 역할 유지

《 총괄조정체계 운영체계 》



※ 행정중심복합도시 총괄조정체계 운영규정(2008.7. 제정)

## 2. 단계적 개발방안

### 1) 기본방향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장기간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기존 개발방식을 탈피하여 도시성장관리 개념을 도입
  - 사업지역을 대단위로 분할 하는 집중개발방식이 아닌 미래의 변화에 대처하고 민간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단위프로젝트를 순차 개발
- ‘先 기반시설 투자 - 後 프로젝트 추진’의 사업체제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도모
  - 환상형 도시구조의 조기 활성화와 후속단계의 단위프로젝트 추진여건 조성을 위해 순환교통망 구축에 최우선적으로 투자
- 다양한 도시기능 및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규모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도시의 단계별 성장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시행·관리
  - 대중교통축상의 생활권 단위 및 중앙행정기능 등의 개별 프로젝트별로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거점개발방식을 도입
  - 도시건설은 투자의 여력, 도시성장 추이 등에 따라 시행단계별 프로젝트는 일부 중첩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용
  - 환상형 도시구조와 함께 단계적·거점별로 도시가 개발됨에 따라 각 기반시설들도 규모, 용량 등을 주요 거점별로 분산 설치

## 2) 3단계 도시건설 및 이후 방향 설정

- 국가균형발전 선도도시로서 국가 거점기능 강화 및 관리체계 구축
  - 3단계 도시건설에서는 국회세종 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등 국가중추시설 설치를 완료하여 국가 거점기능을 강화
  - 특별관리구역 제도를 기반으로 건설사업 이후에도 국가 주요 기능 등이 국가에 의해 통합적으로 계획·관리될 수 있는 방안 마련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성장기반 구축
  - 세종테크밸리, 공동캠퍼스 등 산·학·연·관 클러스터를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성장동력을 확보
- 디지털 그린인프라 고도화
  - 대중교통중심도시 및 탄소중립도시 등 그린도시가 완성될 수 있도록 대중교통 활성화 및 승용차 수요관리 정책을 추진
  -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5-1생활권)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모델을 고도화하고 이를 도시 전체로 확산 추진
- 상생발전을 위한 동반성장기반 구축
  - 행복도시권 주요 교통관문과의 접근성 개선, 대중교통체계 마련 등 상생발전을 위한 광역시설 배치 및 교통연계 강화
  - 조치원 등 읍면지역의 혁신역량을 연계하여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함으로써 세종시 내에서도 지역 간 불균형 문제 해소

### 3. 건설비용 및 재원조달방안

#### 1) 건설비용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행복도시법」에 정부 재정부담 상한선을 명시

- 청사 등 공공건축물의 건축(부지매입비용 포함)과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을 위한 지출상한은 8조 5천억 원(행복도시법 제51조)

《 공공부문 투입비용 현황('22) 》

항 목	비 용 (단위 : 조원)
합 계	8.50
광역기반시설	2.40
- 도로(용지비 포함)	2.37
- 기타시설(주차장, 대중교통시설 등)	0.03
공공건축	4.90
- 중앙행정 등 국가시설	3.45
- 지방행정/공공/복지/문화/교육시설	1.45
용지비	1.20
- 중앙행정 등 국가시설 용지	0.90
- 지방행정/공공/복지/문화/교육시설 용지	0.30

※ '03년도 불변가격 기준의 추정치(한국은행 건설투자디플레이터 적용)

※ 세부내역은 총비용 내에서 변경 가능

- 중앙행정 관련 시설, 시청, 교육청 등 지방행정 관리시설과 학교, 도서관, 세종의사당, 대통령직무실 등 기타 공공건축에 4.90조 원, 부지매입에 1.20조 원 투입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도로 및 철도 등과의 연계교통망 확충을 위한 광역기반시설에 2.40조 원 투입



## 2) 재원조달방안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정부투자는 '30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투입될 계획(연평균 0.3조 원 투자)
  - 투자가 집중되는 기간에도 연간 1조 원 내외로 투입되므로 정부재정에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재원부담 주체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중앙정부는 중앙행정 기관 및 광역기반시설 건설을 담당
  - 지방행정 공공시설 건설비는 시설의 성격에 따라 지자체와 분담
  - 사업시행자는 예정지역 용지매입과 기반시설을 포함한 부지 조성비용을 부담
-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운영의 효율적 관리, 건설추진의 통합 관리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회계'를 설치·운영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한 수입, 지출을 통합함으로써 건설 관련 회계관리를 단순화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
  - 이전적지 활용계획 수립 시 일부 정부청사가 매각되는 경우에는 매각자금 등의 활용을 검토
- 교통·환경 등 SOC 시설 및 문화시설에 대해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도입하고 재정부담을 경감
  - 개발부담금제를 적용하여 개발이익을 환수하도록 하고 수익자 부담원칙 등을 고려하여 재정부담의 최소화를 추진

## 4. 주민지원 대책 및 상생도시 실현 방안

### 1) 주민지원 대책

-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다양한 이주주택지와 생활용지 공급, 취업알선, 직업전환 프로그램 마련 등 맞춤형 지원체제를 구축
  - 이주주택지는 그간의 획일적 공급방식을 탈피하여 단독·블록형·공동주택지 등으로 다양화
  -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 규모의 생활용지, 협의양도인 택지 등을 공급하고 주민희망 시 상가 건립 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 현지인이 협의보상금의 일정금액을 예치할 경우 상업용지에 대한 우선 입찰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
  - 주민생계대책으로 대행기구를 통하여 지장물 철거, 분묘 이장 등에 주민이 참여할 수 방안 검토
  - 주민의 취업 희망 업종을 파악하고 직종·직능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검토
- 예정지역 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아파트 건립 등 종합지원대책을 마련
  - 지자체의 보상금을 활용하여 일정 규모의 임대아파트를 예정지역 내에 건립토록 하고 영세민에게는 임대료 인하 등을 지원
  - 공사착수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예정지역 밖으로 이사하는 경우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전세자금의 대출도 추진
  - 사업시행자는 세입자에게 주거 이전비를 지급하고 노약자를 위한 경로복지관 건립 등을 추진

## 2) 광역혁신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광역권 혁신기반 강화

- 주변 도시와 특성화 산업을 연계한 광역혁신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여 지역 혁신성장 동력 창출
  -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주변도시의 산업단지와 연계되는 미래전략 기술 산업거점으로 구축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
    - ※ 주변 산업단지 : 대덕연구개발특구, 오송생명·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산업단지, 논산 국가국방산업단지 등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스마트시티·자율주행 관련, 지식기반, BT·IT·ET 등 주력 산업기능을 특성화하여 주변도시의 특성화 산업과 네트워크 구축
  - 대덕특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에서 생성되는 R&D 성과를 산업화하여 창업·졸업기업의 성장에 적합한 기업환경 및 정주여건 제공

## 3) 광역거버넌스 운영

-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집행·관리를 위한 광역거버넌스의 운영
  - 광역도시계획의 집행력 제고를 위해 광역 지자체간 협력체계를 건고히 하여 관련 사업의 중복 투자 배제와 사업추진 성과 등을 관리
  - 광역상생발전정책협의회, 광역도시계획협의회, 분야별협의회 등 광역거버넌스 운영 및 광역협력체계 모델 완성을 위한 내실화 모색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주변지역 간 연계·협력을 통한 정책결정 및 이해관계 조정 등 상생발전을 위한 효과적 협력체계 구축
  - 기후위기, 대규모 팬데믹, 지역소멸 등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한 주변 도시와의 연계 및 협력체계 마련



# VII

## 개발계획의 수립방향

1. 개발계획 수립지침의 작성
2. 부문별 개발계획 수립방향



## 1. 개발계획 수립지침의 작성

### 1) 목적 및 근거

- ☐ 건설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도시건설의 이념과 기본원칙, 부문별 개발방향 등을 개발계획에 연계·반영하기 위해 지침을 마련
- ☐ 「행복도시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건설기본계획에서 향후 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 2) 개발계획 수립의 기본원칙

- ☐ 건설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도시개발 기본방향 및 공간구조 개념을 토지이용, 교통, 환경 등 부문별 계획에 체계적으로 반영
- ☐ 물리적 공간 계획을 위주로 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건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 전략계획을 수립
- ☐ 「행복도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부문별 계획을 수립

#### 《 「행복도시법」 상 개발계획의 주요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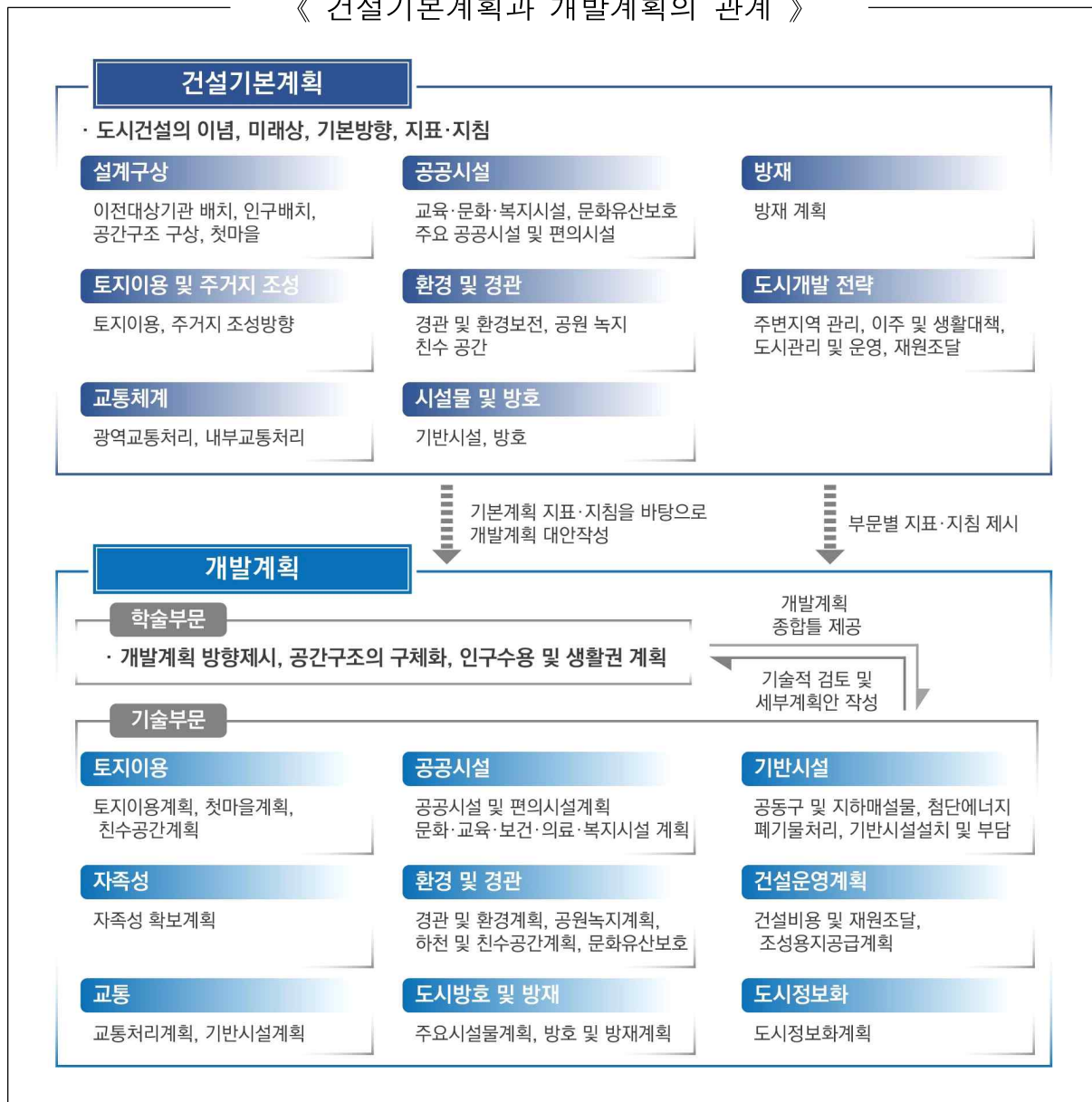
- 「행복도시법」 제20조에 의해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인구수용계획,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 등의 수용계획, 토지이용계획, 원형지로 공급될 토지와 그 개발방향, 교통처리계획, 도시문화계획, 경관계획, 환경보전계획, 교육·문화시설 및 보건의료·복지시설의 설치계획,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기간 및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지역, 자원조달계획, 예정지역 밖의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담계획, 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지침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해 포함되어야 할 내용
  - 도시정보화계획, 문화재보호계획,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계획, 도시방호 및 방재계획,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계획



### 3) 건설기본계획과의 관계

- 건설기본계획은 도시건설의 이념,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계획기준과 지표를 제시
- 개발계획은 부문별 계획을 통해 건설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연계하여 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 가능하도록 기준과 지표를 공간상에 구체화

《 건설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의 관계 》



## 2. 부문별 개발계획 수립방향

### 1) 토지이용 및 주거지 조성 계획

#### □ 인구수용계획

- 건설기본계획의 공간구조 구상에 적합하고 자족적인 생활기반을 갖추 수 있도록 생활권 단위를 설정
- 건설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단계적 개발 방향을 고려하여 인구수용방안 및 생활권별 배분계획을 수립
- 인구수용 규모와 밀도, 주택유형 및 규모, 공급형태별 구상 등을 검토하여 생활권별 토지이용계획에 반영

#### □ 토지이용계획

- 건설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도시개발 기본방향과 토지이용, 교통, 환경 등 부문별 개발 방향을 반영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작성
  - 예정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개발과 환경보전간의 균형을 유지 하되 단계적 개발에 따른 장래 토지이용 수요변화를 수용
- 건설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공간구조체계 및 생활권 단위계획에 적합하도록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 용도별 토지이용계획 수립

#### □ 주거지역 등 용도지역별 조성계획

- 주거지역은 주거지 계획 목표를 구체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커뮤니티 형성 및 도시경관을 향상 할 수 있도록 계획
  - 개발 단위를 고려하여 주거용지의 가구 및 획지규모를 배분 하고 상호교류와 개방적인 생활권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

- 건설기본계획의 주거지 계획목표 등을 바탕으로 기반시설계획, 환경계획 등과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개발밀도를 결정
- 주거유형은 건설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미래지향적 도시환경 및 주거모델을 토대로 수요·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생활권별로 배분
- 상업·업무지역은 건설기본계획의 개발밀도와 수요를 감안하여 용지면적을 산정하고 경관 등을 고려하여 필지 규모 설정
- 상업·업무기능은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교통체계를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
- 생활권 단위 기초편익시설은 보행 및 자전거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치하되 교육·문화·복지 등 복합기능도 함께 고려
- 공업지역은 건설기본계획 방향에 따라 기능 및 규모를 산정하고 주변 자연환경 및 토지이용 등을 고려하여 배치
- 녹지지역은 건설기본계획 녹지체계를 바탕으로 생활권별로 균형 있게 녹지가 배분되고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치

## 2) 국가중추시설 및 이전 대상 중앙행정기관 배치계획

### ☐ 국가중추시설 배치계획

- 건설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방향에 따라 열린공간 내에 배치하고 주변 자연환경, 도시기능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배치

### ☐ 이전 대상 중앙행정기관의 수용계획

- 중앙행정기관의 이전계획 및 건설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배치방향에 따라 이전 대상 중앙행정기관의 수용 및 배치계획을 수립

- 시민친화적이고 행정능률성을 제고하면서 도시경관과 조화되는 개성 있는 청사를 건축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 3) 교통처리계획

- 건설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광역교통체계 및 내부교통체계를 고려하여 편리하고 인간중심적인 교통처리계획을 수립
  - 도시 내 간선도로는 광역교통체계와 원활하게 연계되도록 하며 도로로 인한 생활권 분리가 최소화되도록 교통처리계획을 수립
- 대중교통체계는 환상형 도시구조 개발방향을 수용하면서 주변 주요 교통거점과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도록 구축
  - 도시 내 자전거 도로 및 보행로 등은 녹지대와 연계하여 승용차 이용이 억제될 수 있도록 설치계획을 수립

### 4) 환경보전 및 공원녹지 계획

- 건설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녹지축과 하천축의 생태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생태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 공원은 녹지축, 하천축과 연계하여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입지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 탄소중립도시 목표 달성을 위해 청정에너지 순환체계 구축, 친환경 교통수단 인프라 구축 및 공공건축 그린에너지 도입 방안 등 고려

## 5) 하천 및 경관 계획

### ☐ 하천계획

- 자연적인 하천기능을 보전·복원·친수공간으로 구분하고 각 구간의 특성을 고려한 하천정비방향을 설정
- 국가하천 및 주요 하천변을 따라 주민의 휴식과 여가공간 확보를 위해 환경친화적인 수(水)공간을 계획

### ☐ 경관계획

- 공원·녹지 및 수변공간을 충분히 조성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자연환경과 도시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 창출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상징적인 환상형 도시구조에 적합한 경관 요소를 도출하여 도시미관 및 가로경관 계획 수립

## 6) 교육·문화·복지시설 설치계획

- 교육시설은 건설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내용과 법령 기준 등을 고려하되 교육환경변화를 감안하여 미래지향적 시설기준을 제시
- 건설기본계획의 방향과 지침에 따라 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계획하고, 건강도시를 위한 미래지향적 인프라 구축 계획 수립

## 7) 지하매설물, 집단에너지공급 및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

### ☐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의 설치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을 검토하고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공동구 계획을 수립

- 시설의 효율적 설치와 관리, 도시 경관 향상을 고려하여 공동구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반영

#### □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계획

- 열공급 시설, 가스공급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 여부 및 복합화 설치계획 등에 대한 경제성 및 효율성 등을 검토하고 관계 부처 협의 결과 반영
- 전력·가스·난방열 등의 단계적 수요예측, 적정 공급방안을 검토 반영하고 에너지 절감 및 수요관리를 감안한 신재생에너지 등의 도입방안 제시
- 에너지 절약정책 추진의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등의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에너지 절감방향 제시

#### □ 기반시설 설치계획

- 건설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기본방향을 수용하여 관계기관 협의 결과 및 단계별 개발방안 등에 따라 시설별 설치계획을 수립
- 기반시설은 상위계획과 인접 연관시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

### 8) 스마트도시계획

- 주요 행사, 교통, 방재 등 다양한 정보 제공과 주요 자연환경 요소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 기반 스마트시티 솔루션 제공
-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부문 신기술 및 신산업을 육성함과 동시에 관련 분야 서비스가 도시 전체로 확산 될 수 있도록 유도

## 9) 도시문화 및 문화재 보호계획

### □ 도시문화계획

- 건설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문화·스마트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문화공간 및 문화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
  - 도시문화시설은 주민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연관기능과의 관계를 고려해 배치하여 일상생활 중심의 문화기반시설을 조성
- 도시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상징공간 조성계획 및 창의적인 우수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한 시범사업지역을 제시

### □ 문화재 보호계획

- 보존이 필요한 주요 문화자원은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계획 수립 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
- 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를 통하여 고고·역사·건축물 등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재는 별도의 보호계획을 수립

## 10) 도시방호·방재계획

- 국가중추시설 배치 등 국가 안보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평시 안전성과 유사시 적응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호시설의 설치계획 수립
- 각종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비상시 피해를 극소화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방안을 제시

## 11) 특별관리구역 조성 계획

- 국책사업과 시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관리구역의 지정 대상 범위와 변경 절차를 제시

- 지정범위 내 개발계획 및 주요기반시설의 연계강화를 위한 특별관리구역의 관리계획 수립

## 12) 실행계획

### □ 사업시행기간 및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 인구유입 요소를 고려하여 도시성장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를 고려하여 사업시행기간 및 개발단계를 구분
- 단계별 도입기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인구 및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단계별 도시성장에 따른 개발전략과 방안을 제시

### □ 재원조달계획

- 건설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건설방향을 토대로 상세한 건설비용을 산정하고 다각적인 재원조달 계획도 함께 수립
- 단계적 개발방향 및 사업추진일정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재원조달계획 및 자금 투자계획을 수립

### □ 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 개발계획 내용을 바탕으로 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필요한 내용을 지침으로 작성
- 건설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의 지침과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지역을 설정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  
변경**



국토교통부